

연공임금을 다시 생각한다

황 수 경*

I. 머리말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임금은 (한계)생산성과 일치되는 수준에서 정해진다고 가정한다.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은 신고전파 경제학이 가정하는 만큼 충분히 경쟁적이지 않다. 생산물 시장에서는 독과점과 같은 시장 실패가 존재하여 독점 지대가 존재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는 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제공받는 형태로 독점적 지대를 나눠가질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조합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여 자유로운 경쟁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로 인해 수량 및 가격 조정이 제한되기 마련이다.

내부노동시장의 존재는 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 일단 기업 내부로 들어온 근로자는 기업 외부의 노동시장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의 직무사다리를 두고 내부자간 경쟁하는 지위에 놓여지게 된다. 따라서 내부노동시장은 경쟁적 노동시장으로부터 보호되어 독립적인 임금결정원리나 인사관리에 의해 규율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노동시장의 징표로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연공적 임금체계라 할 수 있다. 많은 실증분석에서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연령이나 근속이 상승함에 따라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매우 강한 연공성이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연공임금은 연공급이라는 임금체계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연공적 인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skhwang@kli.re.kr).

사관리시스템에 의해 더욱 강화되는 양태를 취하고 있다.

연공임금은 장기고용을 전제로 생애에 걸친 임금과 생애에 걸친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데서 경제적 합리성을 구하는 임금체계이다. 기업은 장기고용관계를 기반으로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근로자도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기업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안정적인 근로생애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공임금의 경제적 합리성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첫째, 생산주기가 단축되고 기술 변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연령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공임금이 전제하는 생애에 걸친 생산성 상승과 생애에 걸친 임금상승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연공급적 임금체계가 근로자의 생산성이나 동기부여 메커니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산성을 웃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의미하게 되어 오히려 중고령자의 조기퇴직 유인을 증가시키도록 작용한다는 점이다. 셋째, 연공급적 임금체계가 일부 우량일자리(good jobs) 근로자들에 한정되고 독점적 지대의 나눠 갖기(rent-sharing)에 불과하다면 근로자간 임금의 배분을 왜곡시켜 임금의 ‘공정성(fairness)’을 더욱 훼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결국 관건이 되는 것은 연공임금 체계가 근로자의 생산성과 얼마나 적절하게 조응하고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연공임금과 생산성간의 괴리가 크지 않다면 연공임금의 순작용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양자간의 괴리가 크다면 역작용이 보다 주효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기업에서의 연령별 임금구조와 연령별 생산성 구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연공임금의 경제적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임금체계와 관련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연공성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기업의 임금체계가 고령화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임금체계 및 인적자원관리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임금과 생산성 구조의 분석 모형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임금과 생산성을 비교한 연구는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갖는데 반해 기업 레벨에서의 임금과 생산성의 구조를 직접 분석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1980년대 이후 인사관리경제학¹⁾이 경제학의 한 학파로 자리매김 되면서 미시적

1) 인사관리란 채용과 해고, 교육훈련, 보상, 직무설계, 평가 등 기업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을 획득하고

수준에서 임금체계 연구가 본격화되었고 이와 더불어 1990년대 중반부터 사업체-근로자 연계자료가 구축되면서 임금체계와 생산성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가 비로소 획기적인 전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Hellerstein & Neumark(1995)과 Hellerstein et al.(1999)이 제시한 방법론에 입각해 기업레벨에서 연령별 임금구조와 연령별 생산성구조를 비교하고자 한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기업 특유의 근로자 구성이 기업의 생산성 및 노동비용에 반영되기 때문에 근로자 그룹별 구성비를 포함하는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함수 및 임금함수를 추정함으로써 근로자 그룹별 한계생산성 격차(=상대생산성) 및 근로자 그룹별 임금 격차(=상대임금)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근로자 그룹 간 상대생산성과 상대임금을 비교하면 특정 근로자 그룹이 그들의 상대생산성에 비추어 임금을 더(덜) 받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추정에 사용된 생산함수와 임금함수는 비교를 위해 아래와 같이 대칭적인 모형으로 가정되었다.

△ 생산함수 :

$$\ln Y = \ln A + \alpha \ln K + \beta \ln M + \gamma \ln QL + g(K, M, QL) + \mu \quad (1a)$$

$$\begin{aligned} \gamma \ln QL = & \gamma \ln \left\{ L \left[1 + (\phi_F - 1) \frac{F}{L} \right] \left[1 + (\phi_R - 1) \frac{R}{L} \right] \right. \\ & + \left[1 + (\phi_P - 1) \frac{P}{L} + (\phi_O - 1) \frac{O}{L} \right] \\ & + \left[1 + (\phi_H - 1) \frac{H}{L} + (\phi_C - 1) \frac{C}{L} \right] \\ & \left. + \left[1 + (\phi_S - 1) \frac{S}{L} + (\phi_W - 1) \frac{W}{L} + (\phi_B - 1) \frac{B}{L} \right] \right\} \end{aligned} \quad (1b)$$

△ 임금함수 :

$$\begin{aligned} \ln w = & a' + \ln \left\{ L \left[1 + (\lambda_F - 1) \frac{F}{L} \right] \left[1 + (\lambda_R - 1) \frac{R}{L} \right] \right. \\ & + \left[1 + (\lambda_P - 1) \frac{P}{L} + (\lambda_O - 1) \frac{O}{L} \right] \\ & + \left[1 + (\lambda_H - 1) \frac{H}{L} + (\lambda_C - 1) \frac{C}{L} \right] \\ & \left. + \left[1 + (\lambda_S - 1) \frac{S}{L} + (\lambda_W - 1) \frac{W}{L} + (\lambda_B - 1) \frac{B}{L} \right] \right\} \end{aligned} \quad (2)$$

근로자 유형별 상대생산성(ϕ)을 측정하기 위한 생산함수에는 자본(K), 원자재(M), 노동혼합(labor mix: QL)이 투입요소인 초월대수(translog) 생산함수가 가정되었고(식 1a),

조직하고 동기화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인사관리경제학은 기존의 경제학적 이론을 기업의 인사관리 분야에 적용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azear, 1995).

이때 $g(\cdot)$ 는 각 투입요소의 2계 항들을 나타낸다. 노동혼합을 나타내는 식 (1b)에서 L 은 기업의 총노동투입량, 즉 총근로자수이고 F 는 여성근로자수를 의미한다. 이때 ϕ_F 는 남성과 비교한 여성의 상대 한계생산성으로 정의된다. 성 이외에도 연령이나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종과 같은 인적 특성에 의해서도 근로자 유형이 구분될 수 있다. 즉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서 35세 미만 그룹, 35-54세 그룹, 55세 이상 그룹으로 나뉘며, 결혼상태는 미혼과 기혼,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직종은 관리·전문직, 사무직, 생산직, 기타 서비스·판매직 및 단순직으로 구분된다고 가정하였다. 여기서 γ 는 중졸이하 35세 미만의 미혼남성으로서 기타 서비스·판매직 및 단순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의미하고, ϕ_F 는 여성, ϕ_R 는 기혼, ϕ_H 와 ϕ_C 는 각각 고졸과 대졸, ϕ_P 와 ϕ_O 는 각각 35-54세 그룹과 55세 이상 그룹, ϕ_S , ϕ_W 와 ϕ_B 는 각각 관리·전문직, 사무직, 생산직 근로자의 상대생산성을 나타내게 된다.

한편 기업레벨의 임금함수는 초월대수 생산함수와 정확히 대칭적으로 묘사될 수 있도록 정의되었다. 단, 통상의 개인단위 임금함수가 아닌 기업단위 임금함수가 사용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와 같이 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종 등의 근로자 구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때 λ 는 기준 그룹에 대한 각 특정 그룹 근로자의 상대임금으로 해석될 수 있다.²⁾

III. 연령별 상대임금과 연령별 상대생산성의 실증분석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통계조사(2002)』(이하 광공업조사)와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2002)』(이하 임금구조)이다. 『광공업조사』는 기업레벨의 생산함수 추정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근로자 유형별 임금구조를 측정할 수 있는 정보는 빠져 있다.³⁾ 반면에 『임금구조』는 근로자 유형별 임금에 관한 정보는 있으나 생산함수 추정에 필요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 본 분석에서는 두 자료의 정보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는데,⁴⁾ 개별기업을 단위로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16개

2) 엄밀한 의미에서는 각 그룹이 기업의 인건비 상승에 기여하는 상대정도를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이를 ‘상대임금’으로 지칭할 것이다.

3) 『광공업조사』는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5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매출액, 제조원가, 종사자 및 연간급여액 등 기업경영 관련 정보들을 포함한다.

4) Hellerstein & Neumark(1995)와 Hellerstein et al.(1999)은 사업체-근로자 연계자료를 이용하여 기업레벨 생산함수와 임금함수를 추정하였다.

시도)⁵⁾, 산업(3-digit), 사업체규모(6개 범주)⁶⁾에 의해 구분되는 셀에 새로운 ID를 부여하여 이를 기준으로 결합하였다.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각 셀은 일종의 복합기업으로 간주되고 해당 기업과 근로자 관련 정보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새로운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자료는 사업체-근로자 연계자료로서의 특성을 가지며 복합기업의 수는 1,169개, 해당 근로자는 155,159명이다. 『광공업조사』의 조사범위 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광업과 제조업분야에 한정된다.⁷⁾

<표 1>은 생산량을 종속변수로 취한 모형((1)과 (3))과 부가가치를 종속변수로 취한 모형((2)와 (4))의 추정 결과를 주된 관심변수인 연령범주별 상대생산성과 상대임금의 추정계수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있다.

우선 생산량을 종속변수로 취한 모형(1)의 결과를 살펴보면, 35-54세 연령대 근로자의 상대임금은 34세 이하 근로자의 1.73배 수준인 데 반해 생산성은 34세 이하 근로자의

〈표 1〉 연령계층별 상대임금과 상대생산성

〈전 체〉				
		상대임금 (₩)	상대생산성 (₩)	
			모형 (1)	모형 (2)
34세 이하		1.00	1.00	1.00
35-54세		1.73	1.05 [*]	0.93 [*]
55세이상		3.02	0.60 [*]	0.82 [*]

〈성 별〉				
		상대임금 (₩)	상대생산성 (₩)	
			모형 (3)	모형 (4)
남 성	34세 이하	1.00	1.00	1.00
	35-54세	2.41	1.28 [*]	1.18 [*]
	55세이상	3.50	0.51 [*]	0.92 [*]
여 성	34세 이하	0.57	0.78	0.63
	35-54세	0.99	0.57 ⁺	0.60
	55세이상	2.26	0.71	0.74

주: 1) 모형(1)과 모형(3)은 생산량의 종속변수에 로그 생산량을 사용한 것이고, 모형(2)와 모형(4)는 로그 부가가치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것임.

2) 전체 모형에서는 34세 이하의 임금과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상대임금과 상대생산성이고, 성별 모형에서는 34세 이하 남성을 기준으로 한 상대임금 및 상대생산성임.

3) *는 5%, +는 10% 이내 유의도에서 차이가 있음(Wald 검정).

자료: 광업제조업통계조사(2002),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2002)

5) 『광공업조사』는 7개 광역시와 9개 도로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6) 사업체 규모는 『임금구조』에서와 같이 (1) 5-9인 (2) 10-29인 (3) 30-99인 (4) 100-299인 (5) 300-499인 (6) 500인 이상으로 구분되었다.

7) 결합된 자료의 기본 정보를 소개하면, 표본에서 기업의 평균종사자수는 187명이고 기업의 규모별 분포는 5-29인이 48%, 30-299인이 37%, 300-499인이 7%, 500인 이상이 8%이다. 반면에 근로자 분포는 각각 9%, 35%, 18%, 38%로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가 56%를 차지한다. 근로자 구성은 『임금구조』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임금구조』가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조사되기 때문에 여성(20%)과 중고령층(4%)이 상대적으로 과소대표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광공업조사』에서는 163만원, 『임금구조』에서는 180만원으로 포착되고 있다.

1.0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상대임금은 34세 이하 근로자의 3.02배에 달하지만 이들의 생산성은 34세 이하 근로자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가가치를 종속변수로 취한 모형(2)의 결과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35-54세 연령대 근로자의 생산성도 34세 이하 근로자의 93%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상대생산성은 이전 모형에서보다는 다소 증가하여 34세 이하 근로자의 8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로 생산량을 사용하느냐, 부가가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추정치에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 증가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반면 기업의 임금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연령이 상승함에 따른 임금과 생산성간 괴리는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 하단의 성별 모형에서는 남성 34세 이하 근로자를 기준그룹으로 하여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각각의 연령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생산량을 종속변수로 취한 모형(3)에서 남성 35-54세 연령대 근로자는 남성 34세 이하 근로자의 2.41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만 그들의 상대생산성은 남성 34세 이하 근로자와 비교하여 1.28배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54세 이상 남성의 경우는 상대임금은 350%, 상대생산성은 51% 수준으로 상대임금과 상대생산성의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진다. 반면에 같은 모형에서 여성 고연령자의 상대임금은 상대생산성보다는 높게 나타나지만 상대임금과 상대생산성 간의 격차는 통계적으로 그다지 유의하지 않다. 여성의 경우 남성이 누리는 것과 같은 연령임금 효과를 누리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부가가치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4)의 결과를 통해서도 유사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IV. 기업 인력구조 고령화와 연공임금의 위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공임금은 근로자의 장기고용을 전제로 생애에 걸친 임금과 생애에 걸친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데서 합리성을 찾는 임금체계이다. 즉, 근로자가 젊은 시절에는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deferring payment). 그렇다면 앞서의 실증분석 결과는 생산성 증가보다 임금 증가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일뿐 연공임금의 위기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과연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가? 여기서는 기업 인력구조의 고령화 실태를 통해 연공임금이 파생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의

〈표 2〉 근로자의 연령구조 변화

	평균연령 (세)	연령대별 구성비 (%)					고령화 지수	준고령화 지수
		10대	20대	30대	40대	50세 이상		
1980	28.8	15.1	45.5	23.7	12.0	3.8	24	6.2
1981	29.1	13.4	46.4	23.7	12.6	4.0	2.5	6.6
1982	29.6	12.3	45.6	24.3	13.5	4.4	3.0	7.5
1983	29.9	11.2	45.8	24.8	13.7	4.5	3.0	7.9
1984	30.0	10.8	45.4	25.5	13.8	4.4	2.9	7.8
1985	30.6	9.5	44.4	26.8	14.4	5.0	3.4	9.2
1986	31.1	8.4	42.9	28.3	14.9	5.5	3.8	10.7
1987	31.2	9.2	41.7	28.4	15.2	5.6	3.8	11.0
1988	31.3	8.4	41.8	29.2	14.9	5.7	4.1	11.4
1989	32.1	6.7	39.9	30.9	15.8	6.7	5.3	14.3
1990	32.6	6.1	38.5	31.2	16.5	7.7	6.7	17.4
1991	33.1	5.6	37.3	32.1	16.2	8.8	8.5	20.5
1992	33.8	4.6	36.0	32.0	17.0	10.4	11.2	25.6
1993	34.3	3.8	33.9	33.9	17.5	10.8	12.8	28.6
1994	34.8	3.4	33.1	33.6	18.2	11.7	15.1	32.0
1995	35.1	3.0	33.5	32.5	19.0	12.1	16.5	33.2
1996	35.2	2.7	33.9	32.2	18.8	12.4	17.9	33.9
1997	35.8	2.1	32.4	32.8	19.7	13.1	21.0	37.9
1998	36.2	1.6	30.4	34.3	20.7	13.0	22.3	40.5
1999	36.0	1.6	30.4	34.4	21.5	12.1	19.7	37.8
2000	36.3	1.3	29.6	33.7	22.8	12.7	20.9	40.9
2001	36.6	1.1	28.5	33.8	24.0	12.6	21.6	42.6
2002	37.2	0.8	26.9	33.9	24.5	13.9	26.4	50.0
2003	37.6	0.7	25.9	33.6	24.9	15.0	30.7	56.4

주 : 1) 10인 이상 비농 전산업 근로자 대상.

2) 고령화지수는 15~29세의 청년근로자에 대한 55세 이상의 고령근로자 비중, 준고령화지수는 15~29세의 청년근로자에 대한 50세 이상 고령자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년도 원자료.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2>는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이용하여 10인 이상 비농부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령화 추세를 살펴본 것이다.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1980년에는 28.8세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3년에는 37.6세를 기록하고 있다. 고학력화로 인해 20세 미만 근로자가 크게 줄어든 것 외에도 20대 근로자가 1980년 45.5%에서 2003년 25.9%로 줄어든 반면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은 1980년 3.8%에서 2003년 15.0%로 증가하였고 40대 이상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15~29세의 청년층 근로자에 대한 55세 이상의 고령근로자의 비중을 고령화 지수로, 5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을 준고령화 지수로 파악할 때, 우리 기업들은 지난 20여 년간 젊은 근로자의 유입은 적고 중고령 근로자의 누적이 계속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기업의 연공임금은 연령보다는 기업에서의 근속년수와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3>은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평균근속년수는 1980년 2.8년에서 시작하여 1998년(6.1년)까지 꾸준히 상승하

〈표 3〉 근로자의 근속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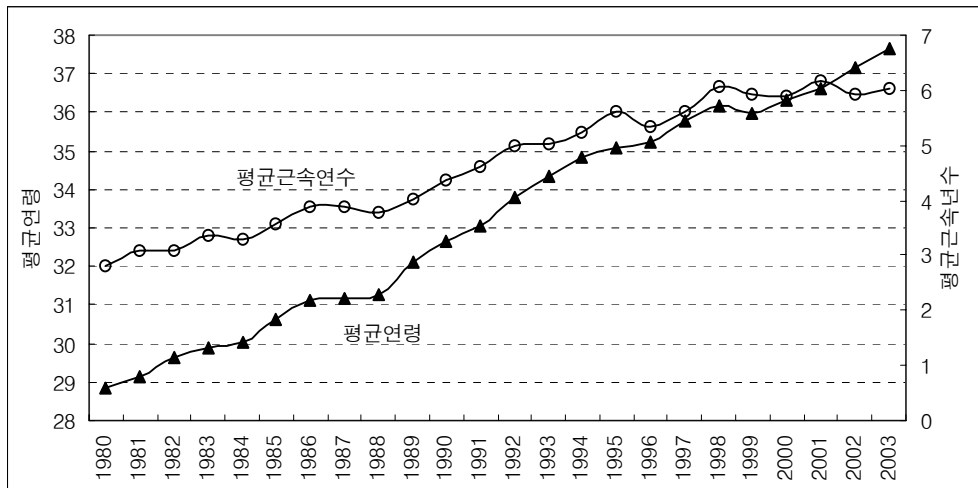
	평균 근속연수 (년)	근속년수별 구성비 (%)					근속 고령화 지수	근속 준고령화 지수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1980	2.8	29.0	40.1	15.0	11.5	4.5	0.4	5.4
1981	3.1	26.3	37.8	17.8	13.1	5.0	0.5	6.1
1982	3.1	24.5	31.9	21.4	16.1	6.1	0.8	7.9
1983	3.4	21.4	32.1	20.5	18.9	7.2	1.0	9.7
1984	3.3	24.0	31.1	18.7	19.0	7.2	1.0	9.8
1985	3.6	21.1	31.5	18.8	20.3	8.3	1.2	11.6
1986	3.9	18.7	30.6	19.2	22.2	9.3	1.5	13.6
1987	3.9	21.4	28.4	18.9	21.1	10.2	1.7	14.9
1988	3.8	21.1	32.2	17.9	18.3	10.6	1.8	14.8
1989	4.0	17.9	31.4	19.2	19.8	11.8	1.9	17.2
1990	4.4	21.0	30.1	18.5	18.3	12.1	2.1	17.4
1991	4.6	21.2	27.2	19.1	19.2	13.3	2.5	19.7
1992	5.0	20.1	25.9	17.1	21.6	15.2	3.1	24.1
1993	5.0	19.6	28.9	15.2	20.6	15.7	3.4	24.7
1994	5.2	18.7	25.8	17.4	21.6	16.4	3.8	26.5
1995	5.6	18.2	23.7	17.6	22.3	18.3	4.7	30.8
1996	5.3	19.8	27.0	15.5	20.4	17.2	4.6	27.7
1997	5.6	18.2	26.1	15.8	21.2	18.7	5.2	31.1
1998	6.1	14.7	24.9	17.1	22.4	20.9	6.8	36.8
1999	5.9	16.5	23.7	17.9	21.0	20.8	6.4	35.8
2000	5.9	21.1	20.0	16.5	21.6	20.9	7.4	36.2
2001	6.2	17.6	23.8	13.4	22.8	22.4	8.3	40.8
2002	5.9	21.2	25.8	10.7	20.3	21.9	7.6	38.0
2003	6.0	20.8	24.0	13.6	19.6	22.0	8.0	37.6

주: 1) 10년 이상 비농 전산업 근로자 대상

2) 근속 고령화지수는 5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20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 비중, 근속 준고령화지수는 5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10년 이상 근속자의 비중으로 계산됨.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년도 원자료

〔그림 1〕 근로자의 평균연령과 평균근속년수의 변화 추이(비농전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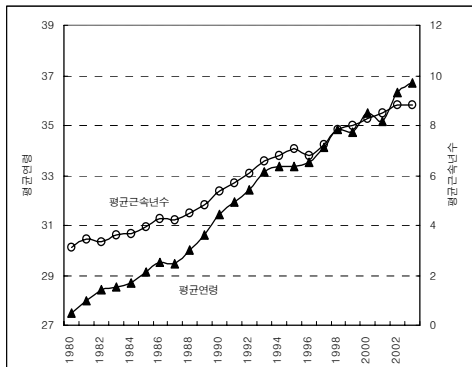


였으나 이 시점을 고비로 현재까지 답보상태를 계속하고 있다(그림 1). 2003년 현재 10인 이상 비농부분 사업장의 근로자 평균근속년수는 6.0년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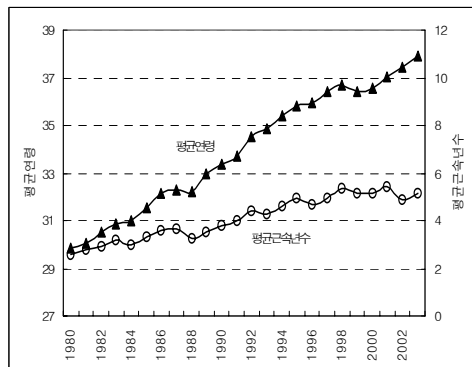
1998년 이후 평균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근속년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확대된 노동시장 양극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연령 및 근속년수 변화를 도시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경우 90년대 후반 기간 동안 평균연령과 평균근속년수가 1:1로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1990년대 전 기간에 걸쳐 관찰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인력구조 고령화가 곧바로 인건비에서의 고비용 구조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최근에는 대기업의 구조조정, 조기퇴직 등의 효과가 반영되어 근속년수의 증가가 평균연령의 증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낮아졌다. 반면

[그림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자 평균연령 및 근속년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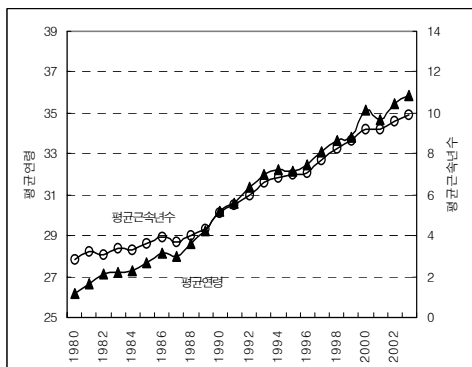
A. 비농전산업 대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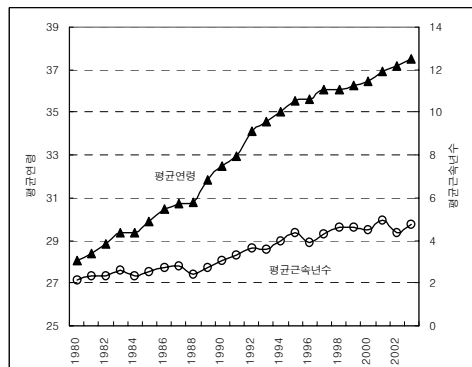
B. 비농전산업 중소기업



C. 제조업 대기업



D. 제조업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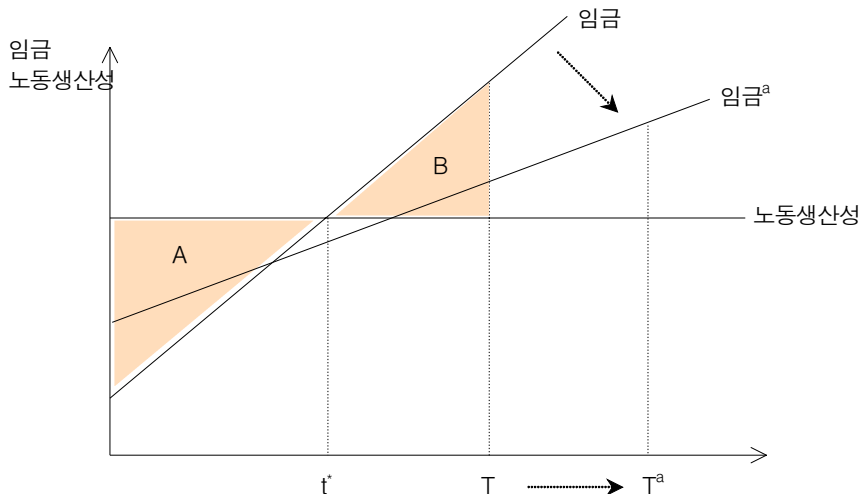


주: 10인 이상 비농전산업 및 제조업 근로자 대상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년도 원자료

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 들어 평균연령의 급속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평균근속년수는 정체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 경우 고령화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우리 기업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속년수 증가로 인력구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림 3]은 통상적인 이연임금가설 하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장기고용계약이 있을 때, 생산성보다 가파른 임금곡선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t^* 시점 이전에 기업은 근로자에 대해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t^* 시점 이후에 기업은 고연령 근로자에 대해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Lazear(1979, 1995)는 정년제를 통해 T시점에서 근로자의 생애임금과 생애생산성이 일치하게 만듦으로서($A=B$) 연공임금의 경제적 효율성을 유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센티브에 의해 추가되는 생산이득만큼 추가적으로 배분될 수 있으므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림 3] 연공임금과 근로자의 퇴직시점



그러나 이러한 이연임금가설의 논의는 인력구성의 고령화 효과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이연임금가설에서는 일정 시점에서 임금과 생산성 간의 불일치가 존재함을 인정하는데, 이때 개별 근로자의 생애임금과 생애생산성을 일치시킨다 하더라도 인력구성이 고령화된다면 일정 시점에서 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생산성과 임금이 총량적으로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기업의 인력구조가 고령화되면 기업으로서는 B의 범주 내에서 손실을 감수해야만 할 근로자를 주로 고용하게 되고 이러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젊은 근로자는 적게 고용하게 되므로 일정 시점에서, 혹은 단기 시점에서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기업은 이러한 연공임금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된다.

고령화 정도가 동일하다면, 이러한 문제는 임금체계의 연공성이 강할수록 보다 심각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생산성 대비 연공임금의 기울기 역시 중요한 정책적 선택변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인력구조 고령화에 걸맞게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연공임금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바꾸는 노력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생애임금의 기울기가 (임금)^a로 조정될 경우 은퇴시점은 T^a 시점까지 연장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V. 맺음말

우리 사회에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노동력인구의 감소나 부양비 및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사회적 부담 증대 등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이나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며 근로자의 노동생애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모색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출산율을 더욱 빠르게 하락시키고 있고 사회적으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기업에서 근로자의 은퇴시점은 점점 더 앞당겨지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무엇인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고령화에 역행하는 우리 사회의 미시경제적 메커니즘의 존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의 위기의 본질은 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확립된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 질서와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령화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력의 공급 감소와 노인부양인구의 증가라는 거시경제적인 고령화 문제는 최소 10-20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갖는 데 반해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자의 고령화는 이미 상당 정도 진행되었고 젊은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던 시기에 확립된 노동시장 질서와 충돌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미시경제적인 왜곡현상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연공임금과 생산성의 구조를 실증분석한 결과를 소개하였다. 연공임금은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기본 축을 이루는 임금결정원리에 해당한다. 연공임금이 경제적 정합성을 갖기 위해서는 연공임금에 상응하는 생산성의 상승, 동기부여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상대생산성 구조와 상대임금 구조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상승함에 따른 생산성 증가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임금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공임금이 생산성과 이처럼 괴리되어 있을 경우 근로

자의 전반적인 고령화와 맞물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비정규고용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실제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로 대표되는 내부자의 규모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1998년, 27.5%→2002년, 21.9%) 동시에 정규직-비정규직, 내부자-외부자, 유노조-무노조 부문간 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연공성이 여전히 공정하고 유효한 임금결정원리로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와 같은 경직적인 연공임금 구조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방향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나는 연공임금과 생산성의 연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내 작업관리·인사관리 효율화를 통해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동기부여 기제가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공임금은 장기고용관계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 그 경제적 성과도 달라질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생산성과 연계된 직무기초형 임금, 성과주의 임금 원칙을 확산시켜나가는 것이다. 임금에 직무·성과 요소를 연계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동기부여→고생산성→고임금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필수적이다. 직무나 성과와 무관한 경직적인 임금체제는 수량적 유연화에 대한 유인을 더욱 강화시켜 비정규직의 확산을 가져오고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신규진입자의 고용기회를 제약할 뿐 아니라 중고령자의 조기은퇴 압박을 가중시키는 등 노동시장에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파생시킬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황수경 외(2004), 『고령사회 대비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정책기획위원회
- Hellerstein, J.K.; Neumark, D.; Troske, K.R.(1999), "Wages, Productivity, and Worker Characteristics: Evidence from Plant-Level Production Functions and Wage Equation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17, No. 3., pp. 409-446.
- Hellerstein, Judith K.; David Neumark(1995), "Are Earnings Profiles Steeper Than Productivity Profiles? Evidence from Israeli Firm-Level Data",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30, No. 1. pp. 89-112.
- Lazear, E.P. (1979), Why Is There Mandatory Retire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7, No. 6. (Dec., 1979), pp. 1261-1284.
- Lazear, E.P.(1995), *Personnel economics*, The MIT Press

노동시장 여건변화와 인적자원개발 정책과제

이 병 희*

I. 머리말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은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우선 거시경제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함께 일자리 창출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경제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 온 서비스산업에서는 주로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가 증가하여 왔다. 둘째, 구조조정이 진전되면서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한 직장에 평생 고용되는 관행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 이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상향 이동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였던 실업률이 안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취업예로계층이 존재하며,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등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소멸이 증가하고, 산업별로 일자리 기회가 차별화되며, 노동이동이 활발할수록 근로자의 숙련이 중요해진다.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지 못하면 노동이동성의 증대는 근로자의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성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환경의 변화는 인적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시장 실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숙련편향적인 기술진보는 숙련 격차(skill gap)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인력수요의 증대는 핵심 인재에게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집중하는 경향을 유발하며, 근로자의 노동이동성 증가는 기업이 인적자원개발 투자 자체를 기피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경제주체의 적응력(adaptability)을 높이기 위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lbh@kli.re.kr).

한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인적자원개발은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극화가 궁극적으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경제주체들의 적응력의 차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인적자원개발은 성장과 분배의 동반 발전을 이루는 생산적인 투자전략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중심으로 직업훈련 정책·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현황과 문제점

1. 인적자원개발 투자의 근로생애 단계별 불균형

기술변화와 경쟁의 심화에 따라 12~16년의 정규교육만으로는 40여 년에 걸친 근로생애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숙련 수준이 고도화되고 활용 주기도 단축되면서 생산현장에서의 점진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을 담당하는 근로자의 능력개발은 경쟁력 강화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평생고용 관행이 약화되면서 실직 위험과 노동이동성이 크게 증가하여, 근로자-일자리 일치도(job match quality) 개선과 고용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이 요구된다.

그러나 학교교육 단계에서는 과잉 투자를 우려할 정도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용안정 및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원개발 투자는 매우 취약하다. 2004년 현재 대학 진학률은 81.3%에 이르고 있으며, 대학 졸업생수도 1980년에 비해 무려 5배가 증가한 494천명에 달한다. 대학교육의 팽창은 전세계적인 추세이지만, 고등교육 진학률 수준이나 증가 속도는 경제발전단계나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에도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대학교육의 질 관리를 동반하지 않는 고등교육의 양적인 확대는 청년실업과 고학력자의 하향 취업 등 인적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하여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교육과는 달리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인적자원개발 투자는 매우 낮다. 2004년 현재 성인의 1년 동안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1.6%에 그치고 있다. 평생학습 참여희망을 58.7%에 비해 현저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특히 능력개발과 직결되는 직업훈련 참여율은

〈표 1〉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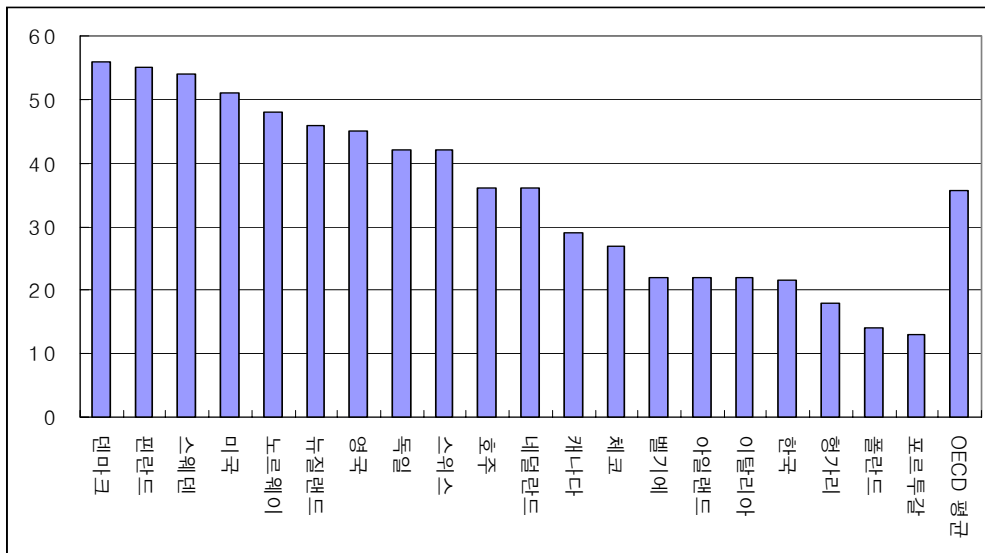
	한 국	일 본	미 국
1990	33.2	36.3	59.9
2004	81.3	49.1('00년)	63.3('00년)

자료 : 교육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 방안』, 2004.9

3% 내외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개발이 청소년기의 교육에 국한되어 왔으며,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인적자본 축적이 거의 정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림 1〕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국제비교

(단위 : %)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2;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4.

특히 노동시장 위험에 취약한 근로계층일수록 평생학습 참여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 연령계층별로는 30대 주노동력계층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가장 높으며, 중장년층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현저하게 낮다.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 압력이 높은 중장년층에게 제2의 경력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고령화의 개인적·사회적 부담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한편 교육수준별로 보면, 대졸 이상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42.6%에 이르고 있지만, 초졸 이하 5.0%, 중졸 9.1%에 불과하며 고졸자도 18.7%에 머무르고 있다. 학교교육 수준의 격차에 더하여 평생학습 참여율

〈표 2〉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현황(재학생 제외)

(단위 : %)

전 체		평생학습 참여율	평생학습 참여 희망률
		21.6	58.7
연령	15-19세	19.0	66.6
	20-29세	32.5	80.5
	30-39세	29.2	76.9
	40-49세	21.7	62.3
	50-59세	14.4	46.1
	60세 이상	7.3	19.8
학력	초졸 이하	5.0	
	중졸	9.1	
	고졸	18.7	
	대졸 이상	42.6	
직업	전문관리직	46.5	
	사무직	45.1	
	서비스판매직	15.7	
	농어업숙련직	16.7	
	기능노무직	12.7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4.

의 격차가 누적되어, 저학력자의 인적자본 축적이 크게 지체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은 확대될 수 있다.

이처럼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낮은 투자는 근로생애 단계별로 직면하는 실직이나 불안정 고용 위험에 근로자가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학교교육 이외의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은 평생학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직업훈련 지원 또한 개별 사업주를 통한 재직근로자와 실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근로생애 단계별 위험에 대비한 훈련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개별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 지원 방식은 노동이동의 증대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기업의 훈련투자가 약화되는 경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이직을 대비한 사전적인 훈련의 역할은 미미한 반면 실직 이후에야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사후적인 처방에 머무르고 있다. 2002년 현재 기업 훈련 가운데 전직 훈련이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하여 실직 위험과 경력 변동에 대비한 훈련의 역할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직을 경험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는 훈련에 참여하는 비중은 6.3%에 불과하여, 재직하는 근로자의 15.6%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표 3〉 이직 여부별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는 훈련에 대한 참여 현황(2002년)

(단위 : 천명, %)

	피보험자수	훈련 참여 (A+B)		사업주 훈련(A)		실업자 훈련(B)	
재직근로자	5,166	806	(15.6)	806	(15.6)		
이직근로자	1,655	104	(6.3)	79	(4.8)	26	(1.5)
전 체	6,821	910	(13.3)	885	(13.0)	26	(0.4)

자료 : 고용보험전산망(노동부)과 직업훈련정보망(노동부)을 결합한 자료.

2. 능력개발기회의 불평등

기업은 핵심인재 위주의 인력관리 및 인적자원개발 투자에 집중함에 따라 취약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 접근기회는 제한적이다. 숙련 격차의 해소 없이는 임금과 고용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어렵지만, 저숙련·저학력 근로자일수록 인적자원개발 투자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는 기업훈련에서도 여성, 저학력, 저숙련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뚜렷이 발견된다. 훈련 참여자를 보면, 남성의 15.5%에 비해 여성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8.9%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학력별로는 교육수준

〈표 4〉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는 기업훈련 참여자의 인적 특성(2002년)

(단위 : 건수,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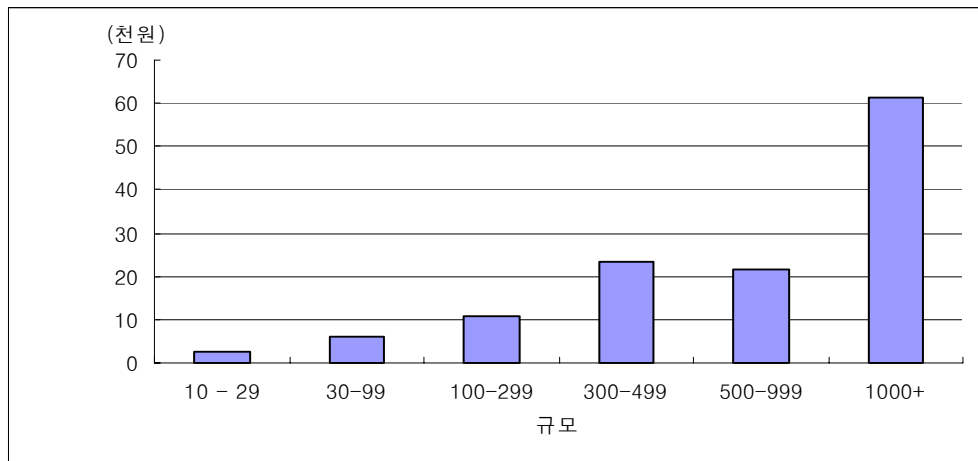
		훈련 참여자		근로자		훈련 참여율
		인원	비중	규모	비중	
성	전 체	960	(100.0)	7,171	(100.0)	13.4
	남자	747	(77.8)	4,832	(66.9)	15.5
	여자	213	(22.2)	2,389	(33.1)	8.9
학력	초졸이하	6	(0.6)	195	(2.7)	3.1
	중졸	22	(2.3)	511	(7.1)	4.2
	고졸	370	(39.8)	3,797	(52.9)	9.7
	전문대졸	132	(14.2)	958	(13.4)	13.8
	대졸	367	(39.4)	1,575	(22.0)	23.3
	대학원졸	33	(3.5)	136	(1.9)	24.1
	관리자	47	(5.1)	262	(3.7)	17.8
직종	전문가	48	(5.3)	373	(5.2)	12.9
	준전문가	113	(12.4)	816	(11.4)	13.9
	사무직	442	(48.3)	2,200	(30.7)	20.1
	서비스판매직	83	(9.1)	723	(10.1)	11.5
	농어업숙련	1	(0.1)	14	(0.2)	6.9
	기능원	137	(14.9)	1,383	(19.3)	9.9
	조작조립원	23	(2.5)	331	(4.6)	6.9
	단순노무직	22	(2.4)	1,069	(14.9)	2.0

자료 :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2002. 12.

이 높을수록 훈련 참여율이 높다. 훈련 참여율은 대졸 23.3%, 전문대졸 13.8%, 고졸 9.7%, 중졸 4.2%, 초졸 이하 3.1%로 나타난다. 한편 직업별로도 숙련별 훈련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무직의 훈련참여율이 20.1%에 이르는 등 사무관리직의 훈련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생산관련직의 훈련참여율은 낮다. 생산관련직 내에서도 상대적 숙련 직종인 기능원이 9.9%인 반면 조작조립원 6.9%, 단순노무직 2.0%에 불과하여 숙련별 훈련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을 야기하는 주요한 하나의 원인은 중소기업 인력의 낮은 질적 수준을 들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에 비해 학교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일 뿐만 아니라 빈번한 직장이동 등으로 인해 인적자원 개발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는 대기업에 비해 크게 부진한 상태이다.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교육훈련비는 1,000인 이상 대기업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2] 규모별 1인당 교육훈련비(월평균)



자료: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03.

기업 훈련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주된 수혜자 또한 대기업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03년 현재 1,000인 이상 대기업의 훈련참여율은 97.7%에 이르고 있는 반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훈련참여율은 불과 2.9%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1,000인 이상 대기업은 납부 보험료의 38.4%를 지원받았지만,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불과 13.6%를 지원받는데 불과하다. 중소기업의 훈련 실시를 장려하는 다양한 금전적인 유인 제공에도 불구하고 규모에 따른 수혜의 역진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표 5〉 기업규모별 훈련 지원실적(2003)

(단위: 개소, 명, 백만원, %)

	전 체	50인미만	50-150인	150-300인	300-500인	500-1000인	1000인이상
사업장	845,910 (100.0)	813,277 (96.1)	22,924 (2.7)	6,047 (0.7)	1,924 (0.2)	1,114 (0.1)	624 (0.1)
피보험자수(A)	7,203,347 (100.0)	3,474,843 (48.2)	1,086,731 (15.1)	649,278 (9.0)	381,538 (5.3)	404,937 (5.6)	1,206,020 (16.7)
납부보험료(B)	664,839 (100.0)	101,615 (15.3)	53,915 (8.1)	70,470 (10.6)	55,113 (8.3)	70,486 (10.6)	313,240 (47.1)
지원사업장	64,225 (100.0)	38,428 (59.8)	11,888 (18.5)	5,500 (8.6)	2,538 (4.0)	2,230 (3.5)	3,641 (5.7)
훈련연인원(C)	1,661,978 (100.0)	100,239 (6.0)	80,022 (4.8)	98,692 (5.9)	76,258 (4.6)	128,706 (7.7)	1,178,061 (70.9)
지원실적(D)	180,838 (100.0)	13,857 (7.7)	11,992 (6.6)	12,804 (7.1)	8,113 (4.5)	13,766 (7.6)	120,306 (66.5)
훈련참여율(C/A)	23.1%	2.9%	7.4%	15.2%	20.0%	31.8%	97.7%
환급율(D/B)	27.2%	13.6%	22.2%	18.2%	14.7%	19.5%	38.4%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전산망.

노동시장에서 인적자원개발투자의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업훈련정책이 능력개발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진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대기업 정규직에 치중되어 여성, 저학력, 저숙련, 비정규 근로자의 능력개발 참여가 저조한 것은 장기적으로 양극화를 심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는 실직 이후에야 제한적으로 실업자 훈련에 참여할 수 있어, 직업훈련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III. 정책과제

1. 평생능력개발체제의 구축

국가 수준에서 인적자원의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자원개발 투자의 근로생애별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진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혁신주도형 성장과 사회통합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최우선정책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교육에 치중한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을 노동시장에서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개발과 활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생산현장에서의 지속적인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별 사업주의 훈련비용 지원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훈련과정·매체 개발 등의 인프라 개선, 기업내 인력개발 담당자·근로자 학습대표 등 능력개발 추진역량의 강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등 학습조직을 구현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를 혁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자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함으로써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균등한 접근을 보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인주도적인 학습에 대한 지원은 노동력의 유동화 및 경기변동에 따라 위축되기 쉬운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보완하여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여유 시간을 능력개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학습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보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능력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보유하거나 인력개발을 통해 획득하는 능력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인적 자원에 대한 과소 투자나 투자의 비효율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능력에 대한 신호기제의 강화와 합리적인 평가를 통한 정보흐름의 개선은 평생능력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근로생애 단계별로 직면하는 주요한 위험, 예를 들어 실직, 직장 이동, 중고령자의 조기 퇴직 등에 대비한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직 전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전직훈련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실업없는 직장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1년 이상의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급휴가훈련을 전직 예정 근로자에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훈련기간 동안의 임금과 훈련비용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전직 훈련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업자에 대해서는 훈련 전 사전 상담을 강화하여 적정한 훈련 대상자를 선발하고 훈련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업자훈련을 내실화하여야 할 것이다.

2. 사회학습망 확충을 통한 양극화 극복

비정규 근로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는 능력개발 참여가 저조하거나 직업훈련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보호 이전에 능력개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비정규 고용형태가 함정이 아닌 정규 고용형태로의 가교(bridge) 일자리가 될 수 있도

록 능력개발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정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훈련을 실시할 유인이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정규 근로자가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강지원금의 확대 등을 통하여 근로자 자율적인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은 사업주의 훈련 기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훈련정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정규 근로자의 경력개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인력개발 플래너를 고용안정센터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 일용직 노동조합을 통해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훈련에 대한 건설 일용직의 접근성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전직 예정 근로자에게 유급휴가훈련을 확대하는 방안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훈련 부담을 완화하고 전직 이전에 고용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의 경우 현재로서는 실업자 훈련(재원이 일반회계인 경우에 한함)에 대한 참여만이 가능한 상태이며, 사실상 훈련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자영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전직, 전업시 훈련 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 종사자가 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실업급여 제외) 임의가입을 허용하거나 예산 확보를 통해 자영업 훈련 지원사업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지원사업은 단순한 창업자금 지원이 아니라 창업 컨설팅 제공과 함께 창업과 연계한 훈련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은 다양한 금전적인 유인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훈련 참여가 저조하다. 그러나 2001년부터 실시한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 사업은 국내외적으로 성공한 대기업-중소기업 공동 훈련 모델로 평가된다. 훈련컨소시엄이 성공하게 된 원인으로는 대기업-중소기업 수직적 거래관계에 기반한 공동훈련모델이라는 점 이외에도 훈련 수요 파악, 현장 지향적인 훈련과정 개발 및 대-중소기업 네트워킹 등에서 인력개발 담당자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 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제도적·기술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인력개발 담당자의 인건비 일부 지원 및 연수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훈련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을 대기업-중소기업 연계형 인력개발을 위한 산업별 인력개발체제로 확대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직업능력개발 전달체계의 혁신

교육훈련의 비효율성은 인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장성 부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인력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함에 따라 교육훈련의 효과

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비효율적인 교육훈련에 대한 과잉투자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공통적인 인력수요를 가지는 산업별 인력개발체제의 구축은 전국 수준의 거시적인 인력개발정책과 개별 학교·기업·훈련기관의 미시적 인력개발을 매개함으로써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별 인력개발 협의기구는 산업내 인력수급 실태 및 수요에 기초하여 인력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산학연계를 지원하며, 교육훈련의 성과를 평가하고, 자격의 현장성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산업별 인력개발 협의기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연계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조직적·기술적 지원이 함께 요구되므로, 훈련컨소시엄의 운영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이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인적자원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별 인력개발 협의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별 인력개발 협의기구는 논의과정부터 노조 등 근로자 대표의 참여를 통해 노사참여적인 인력개발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의 참여는 산업별 인력개발 협의기구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관건일 뿐만 아니라 직무기초형 노동시장과 숙련지향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에도 기여할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의 관심과 전문성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근로자 학습대표(union learning representative)의 양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횡단적인 노동시장이 발달하지 않고, 인력개발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미흡하며,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공감대 형성과 현실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산업별 인력개발 협의기구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를 통해 본 우리 산업의 고용창출능력

김 용 현*

최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2004년 우리경제는 4.7%의 경제성장률(KDI 전망치)이 전망되고, 41만 8천명(1.9%)의 취업자가 증가하였지만 여러 경제지표를 감안할 때 체감경기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자는 주로 36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15만 5천명, 6.4%)와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17만 3천명, 17.5%)에서 많이 증가하였다. 그나마 이러한 일자리가 2003년의 취업자 감소의 반등작용으로 이루어졌거나 최근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일환으로 해석 될 수 있으며, 실물경제지표(소비 및 투자)의 개선에 의해 기인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또한 국내 대부분의 경제연구기관들은 2005년 경제성장률을 2004년 보다 다소 둔화된 4.0%대로 전망하고 있어 2005년의 노동시장 상황 역시 그다지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일각에서 일고 있는 수출 호조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지의 불확실한 경기상황과 일자리 창출 역량이 약한 경제구조적 문제와 관련하여 ‘고용 없는 성장’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성장이 이루어져도 노동절약적 생산성 증가에 의해 고용은 증가하지 않을 상황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고용구조를 OECD국가와 비교해보고,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를 통해 우리 경제 및 각 산업의 고용창출(흡수)능력을 평가하며, 향후 일자리 창출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 고용구조 변화 - 서비스화의 진전

<표 1>에서는 중국 대만과 함께 OECD국가들의 업종별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yhk08@kli.re.kr).

〈표 1〉 국가별 취업자의 부문별 비중

(단위 : %)

	산업분류	1990	1995	2000	2001	2002
한 국	농림어업	17.9	11.8	10.6	10.0	9.3
	광공업	35.4	33.4	28.2	27.5	27.3
	제조업	27.2	23.6	20.3	19.8	19.1
	서비스업	46.7	54.8	61.2	62.6	63.3
일 본	농림어업	7.2	5.7	5.1	4.9	4.7
	광공업	34.1	33.6	31.2	30.5	29.7
	제조업	24.1	22.5	20.5	20.0	19.3
	서비스업	58.2	60.4	63.1	63.9	64.8
중 국	농림어업	60.1	52.9	53.0	52.3	50.9
	광공업	21.7	23.2	20.0	20.2	20.6
	제조업	13.3	14.4	11.2	11.1	11.3
	서비스업	18.2	23.9	27.1	27.6	28.5
대 만	농림어업	12.8	10.5	7.8	7.5	7.6
	광공업	40.8	38.7	37.2	36.0	35.1
	제조업	32.0	27.1	28.0	27.6	27.1
	서비스업	46.3	48.5	55.0	56.5	57.2
호 주	농림어업	5.5	4.9	4.9	4.9	4.2
	광공업	25.0	22.8	22.0	20.9	21.0
	제조업	15.1	13.6	12.6	12.0	12.1
	서비스업	69.5	72.3	73.1	74.2	74.8
프랑스	농림어업	1.4	1.6	1.7	1.6	1.5
	광공업	30.9	27.0	24.5	24.3	23.6
	제조업	22.6	19.6	17.8	17.5	16.8
	서비스업	67.7	71.4	73.9	74.2	74.9
독 일	농림어업	3.5	3.1	2.6	2.6	2.5
	광공업	39.8	36.3	33.7	33.1	32.5
	제조업	31.6	25.5	23.9	23.7	23.6
	서비스업	56.7	60.5	63.7	64.3	65.0
스웨덴	농림어업	3.4	3.1	2.4	2.3	2.1
	광공업	29.2	25.9	24.6	23.8	23.1
	제조업	21.0	19.1	18.2	17.5	16.8
	서비스업	67.2	71.0	72.9	73.8	74.5
영 국	농림어업	2.1	2.1	1.5	1.4	1.4
	광공업	32.3	27.4	25.4	24.9	24.1
	제조업	22.1	19.0	17.1	16.5	15.7
	서비스업	64.8	70.1	72.8	73.4	74.3
미 국	농림어업	2.9	2.9	2.6	2.5	2.5
	광공업	26.2	24.0	23.0	22.5	21.6
	제조업	18.0	16.4	14.8	14.1	13.3
	서비스업	70.9	73.1	74.4	75.1	75.9

주: 1) 산업분류별 비율은 OECD 기준에 따름. 광공업(Industry)은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건설업을 포함하며, 서비스(Services)업은 도소매, 음식, 숙박, 창고, 금융, 보험, 사업, 개인서비스업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

2) 프랑스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임.

3) 산업별 취업자 비중의 합(=농림어업+광공업+서비스업)이 100이 되지 않는 것은 농림어업, 광공업, 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는 분류불능 산업이 있기 때문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중국, 『중국통계연감』, 2003.

대만, 『Statistical Yearbook of the Republic of China』, 2003.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1982-2002』, 2003.

전반적으로 농림어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취업자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업종별 고용구조가 서비스산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취업자의 부문별 비중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농림업업및어업	13.5	12.6	11.8	11.1	10.8	12.0	11.3	10.6	10.0	9.3	8.8	8.1
광공업	34.0	33.6	33.4	32.6	31.4	28.0	27.5	28.2	27.5	27.3	27.6	27.5
광업	0.3	0.2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제조업	24.5	24.0	23.6	22.7	21.4	19.6	19.8	20.3	19.8	19.1	19.0	19.0
전기가스및수도사업	0.3	0.4	0.3	0.4	0.4	0.3	0.3	0.3	0.3	0.2	0.3	0.3
건설업	8.9	9.1	9.4	9.5	9.6	7.9	7.3	7.5	7.3	7.9	8.2	8.1
서비스업	52.5	53.8	54.8	56.2	57.8	60.0	61.1	61.2	62.6	63.3	63.6	64.4
도소매및음식숙박업	25.4	26.5	26.5	27.3	27.7	27.9	28.3	28.2	27.2	27.1	26.4	26.0
운수창고및통신업	5.3	5.1	5.3	5.4	5.5	5.8	5.9	6.0	6.1	6.2	6.0	6.1
금융보험업	3.4	3.5	3.6	3.6	3.7	3.9	3.6	3.6	3.5	3.3	3.4	3.3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3.8	4.1	4.5	4.9	5.4	5.5	5.9	6.5	7.1	7.5	7.8	8.5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	3.2	3.2	3.2	3.1	3.1	3.7	4.3	3.6	3.3	3.2	3.4	3.4
교육서비스업	5.0	4.8	5.0	5.1	5.3	5.8	5.6	5.6	5.7	6.0	6.7	6.7
보건및사회복지사업	1.5	1.5	1.5	1.5	1.6	1.8	1.9	2.0	2.2	2.5	2.4	2.6
기타서비스업	5.0	5.1	5.2	5.3	5.6	5.5	5.6	5.8	7.4	7.6	7.4	7.9

주: 2001년 이후 국제 및 외국기관은 기타 서비스업에 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우리나라의 산업별 취업자 비중을 보면 농림어업의 취업자 비중(2002년 기준 9.3%)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중국(50.9%)을 제외하고 여전히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비중 또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일본, 중국, 대만, 독일을 제외한 서방국가들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취업구조의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2년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비중(63.3%)은 중국(28.5%)과 대만(57.2%)보다는 높지만, 서비스업 비중이 74~76%대인 호주, 프랑스, 스웨덴, 미국 등 OECD 국가들 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일본(64.8%), 독일(65.0%)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구조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성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할 경우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에서 감소하는 취업자를 서비스업에서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향후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일자리 부족문제나 청년층 실업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핵심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2〉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취업자 비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광공업에서의 취업자 비중 하락은 제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에서는 전통적인 서비스업 부문인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1993년 이후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비중변화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1993년: 25.4%, 2004년: 26.0%)¹⁾. 서비스업 부문에서 지난 10여년간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1993년 전체취업자의 3.8%를 차지하던 것이 2004년에는 8.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II. 전산업의 고용창출 능력 평가 - 고용창출여력 전반적으로 하락

<표 3>은 1980년 중반부터 최근까지 경제성장률, 고용증가율, 취업계수²⁾ 및 고용탄성치를, [그림 1]은 1985년부터 최근까지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취업계수(Employment to GDP Ratio)〉

일정기간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취업자수를 총 산출액으로 나눈 수치로서 산출액 10억원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취업자수를 의미하며, **산업의 고용흡수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취업계수=취업자수/실질GDP(10억원)

취업계수가 높다는 것은 같은 GDP 1단위를 만들어 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동원됐음을 의미하며, 취업계수가 낮다는 것은 같은 GDP 1단위를 노동절약적인 생산 방식으로 창출했음을 의미하거나, 자본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매일경제신문사, 「경제신어사전」, 2005 참조)

- 1) 전체 산업에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중을 국가별로 살펴보면(2002년 기준), 우리나라(27.1%)는 일본(22.7%), 대만(24.0%), 중국(6.7%), 호주(24.5%), 프랑스(16.4%), 독일(17.3%), 스웨덴(14.8%), 영국(19.6%), 미국(21.7%) 등의 나라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통적인 서비스업 부분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2) 한국은행의 “2000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노동연관효과”에서 사용한 취업계수(=취업자수/산출액)는 산업연관표의 부속표인 고용표(= 각 산업부문에서 산출액을 생산하기 위해 1년 동안 실제 투입된 노동량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작성한 표)에서의 노동량(=취업자=피용자+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개념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 재화 또는 서비스 생산활동에 종사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노동량의 측정단위는 연인원(man-year) 측정단위로 한 사람이 1년 동안 수행한 작업량을 의미한다. 산출액은 1년 동안 해당산업의 매출액과 재고액까지 포함된 총 산출(gross output)개념으로 중간생산단계인 재고를 제외한 부가가치(net output) 기준 GDP와는 다른 개념이다. 본 논의에서 취업계수를 구하는데 사용하는 취업자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며, 산출량은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실질 GDP로 부가가치(net output)기준 산출량이다.

〈고용탄성치(GDP Elasticity of Employment)〉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증가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산업별 고용탄성치 = 산업의 취업자 증가율 / 산업의 GDP증가율

고용탄성치는 국내총생산이 1% 증가할 때 고용이 몇 퍼센트 증가하는가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으로 그 수치가 1을 넘을 때는 탄력적이라 하고 1보다 작을 때는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고용탄성치가 낮다는 것은 경제성장에 비해 취업자수의 증가 정도가 둔화됨을 의미한다.

(매일경제신문사, 「경제신어사전」, 2005 참조)

우리나라는 1980년 후반(1985~1990년)에 평균적으로 약 10.0%에 가까운 경제성장률과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취업자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1990년 초에서 외환위기 이전까지(1991~1996)는 평균적으로 7.7%의 경제성장률과 2.4%대의 취업자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비교적 건실한 경제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성장률을 시현하는 과정에서 산출액 10억원 생산에 직접 필요한 취업자수를 의미하는 취업계수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 참조). 1985~1990년 평균 취업계수는 63.5(명/10억원), 1991~1996년은 47.0(명/10억원), 1997~1999년은 39.8(명/10억원)로 하락하였고, 2004년은 32.7(명/10억원)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 참조). 이와같은 취업계수의 하락은 우리나라 전체산업의 고용흡수능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취업계수의 하락은 그러나 GDP 1단위를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로 생산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³⁾. 취업계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성향상과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자동화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생산요소가 노동에서 자본으로 쉽게 대체가 이루어지는 산업구조나 고용구조 하에서는 기술 혁신과 발전으로 취업계수의 하락 추세는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나라 고용구조가 농림어업과 제조업에서 여전히 서방선진국과 비교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고용구조가 서비스업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3) 취업계수와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것은 노동생산성과의 관계이다. 양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 쪽이 높으면 한쪽은 낮아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의는 업종별 고용흡수력에 대한 논의 및 평가임으로 취업계수를 주로 고용흡수력과 연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서 취업계수의 하락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산업의 고용흡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인 노동이 직접적으로 자본으로 쉽게 대체될 수 없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표 3>에서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경제성장률)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03년에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2002: 7.0%→2003: 3.1%)되었지만 취업자 증가율(-0.14%)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등 “고용없는 성장”의 징후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즉, 경제성장을 한 만큼 고용도 늘어나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고용탄성치가 2003년에 -0.04로 성장률이 1% 증가할 때 고용은 오히려 0.0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생산 증가가 고용확대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2004년에는 고용탄성치가 0.47(경제성장 1%증가 할 때 취업자는 0.47% 증가)로 회복되었지만, 이의 원인이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실물경제의 호조에 기인하기 보다는 2003년의 마이너스 취업자 증가율에 대한 반등작용 혹은 정부의 단기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인해 만들어진 저숙련 취업자의 증가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능성과 2005년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을 고려할 경우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을 수반한 경제성장’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표 3〉 고용탄성치와 취업계수

(단위 : 천명, %, 10억원, 명/10억)

	취업자	취업자 증가율	실질GDP	GDP증가율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1985~1990	16,557	3.84	260,800.6	9.2	63.5	0.42
1991~1996	19,668	2.40	418,537.6	7.7	47.0	0.31
1997~1999	20,481	-0.84	514,539.2	2.4	39.8	-0.34
2000	21,156	4.26	578,664.5	8.5	36.6	0.50
2001	21,572	1.97	600,865.9	3.8	35.9	0.51
2002	22,169	2.77	642,748.1	7.0	34.5	0.40
2003	22,139	-0.14	662,474.4	3.1	33.4	-0.04
2004	22,557	1.89	688,973.3 ^{a)}	4.7 ^{a)}	32.7 ^{a)}	0.47 ^{a)}

주 : 1) 취업계수 = 취업자/GDP, 고용탄성치 = 취업자증가율/GDP증가율.

2) 1985~1990, 1991~1996, 1997~1999의 취업자, 취업자 증가율, 실질 GDP, 실질 GDP 증가율은 그 기간의 평균치이며,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는 기간평균치로 계산한 것임.

3) 2004년 경제성장률(4.7%)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이며, a)는 이에 근거하여 계산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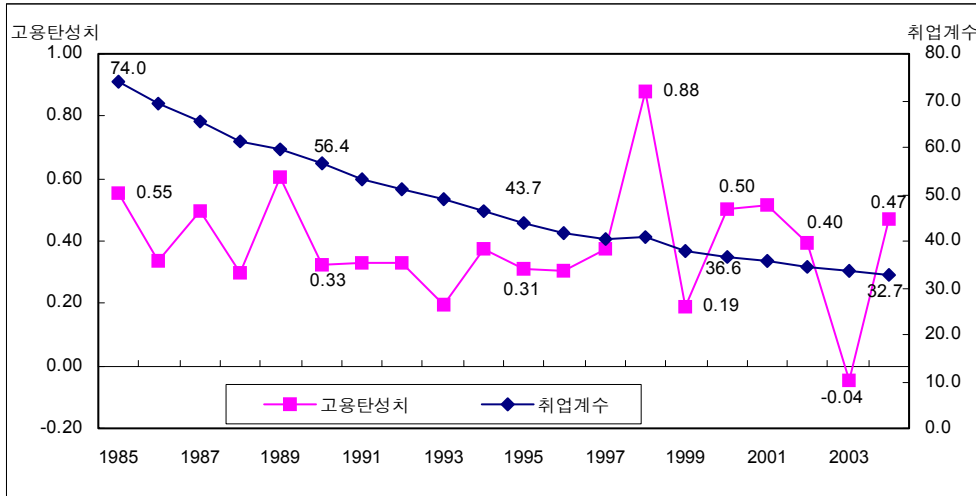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4) 고용탄성치는 GDP와 취업자의 log-log(double-log)회귀모형의 추정을 통해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본 논의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취업자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을 가지고 간단하게 계산하였다.

[그림 1]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의 추이

(단위 : 명/10억, 탄성치)



III. 업종별 고용창출 -서비스업의 활성화 필요

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능력

<표 4>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2]에서는 고용탄성치와 취업계수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의 1985~1990년 평균 취업계수는 78.3(명/10억원), 1991~1996년은 53.7(명/10억원), 2000년은 28.4(명/10억원)로 급감하였으며, 2003년에는 24.1(명/10억원)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이는 같은 기간의 서비스업 취업계수 하락폭과는 대조가 되고 있는데, 2003년 취업계수는 1985~1990년에 비해 제조업은 약 3.2배 이상 하락하고, 서비스업은 1.3배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1985년부터 2003년 까지 취업계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의 취업계수는 지속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서비스업에서는 완만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에 따르면 1995년을 기점으로 서비스업의 취업계수가 제조업의 취업계수를 능가하고 있어, 1995년 이후 서비스업에서의 고용흡수력이 제조업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에서 취업계수가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은 제조업 생산에 있어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자본 집약적 생산 증가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제조업에서 취업계수의 하락은 생산요소인 노동이 자본으로 쉽고 빠르게 대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율적인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일부 업종(예를들면, 운수창고통신업)을 제외하고 제조업처럼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탄력적이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그림 2]에서 서비스업의 취업계수가 제조업의 취업계수 추이보다 완만하게 하락하는 이유가 되며,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고용흡수력이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생산성증가율에 의한 고용탄성력(고용탄성치)을 보면, 2000년 이후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율이 고용탄성치에 마이너스로 반영되어 제조업은 “고용없는 성장”을 하였음을 보여 준다⁵⁾. 2003년의 경우 1%의 제조업 성장에 0.18%의 취업자가 감소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2003년 서비스업에서 고용탄성치는 0.13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업의 고용탄성치 추이는 제조업과 비교하여 다소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의 고용탄성치 추세가 서비스업에서의 추세 보다 변동이 심한 것은 제조업의 경우 서비스업보다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취업자증가율의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서비스업에서의 고용탄성치는 제조업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에 따른 고용흡수력 또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부문에서 높게 나타나고

〈표 4〉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탄성치와 취업계수

(단위 : 명/10억)

	제조업		서비스업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1985~1990	78.3	0.57	56.6	0.64
1991~1996	53.7	-0.07	50.0	0.76
1997~1999	35.6	-0.79	47.7	0.76
2000	28.4	0.39	46.3	0.72
2001	27.6	-0.30	46.0	0.86
2002	25.5	-0.08	44.4	0.52
2003	24.1	- 0.18	43.8	0.13

주 : 1) 취업계수=취업자/GDP,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GDP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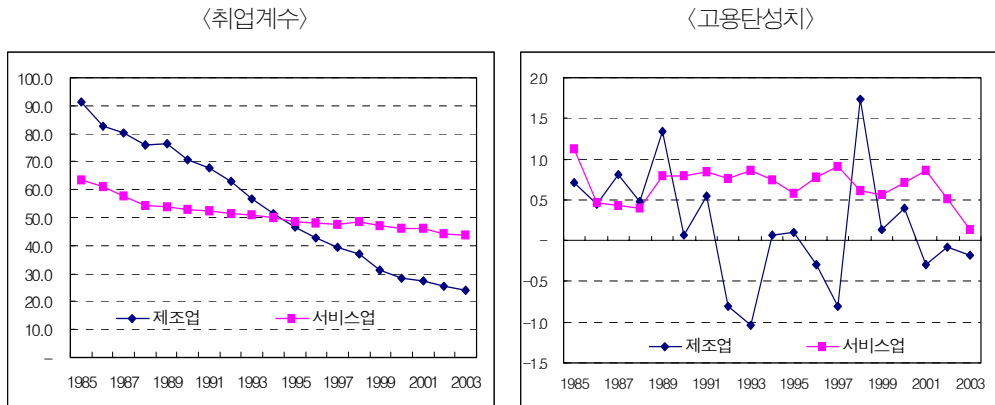
2)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괄함.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및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로 계산.

5) 단, 2004년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는 2.0%를 기록하여 생산성증가를 예상하면, 고용탄성치는 플러스가 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계수 및 고용탄성치 추이

(단위 : 명/10억, 탄성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이후부터 서비스업에서의 고용탄성치의 증가추이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2003년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증가율(2002년 :4.0%→2003년 : 0.2%)이 서비스업 GDP증가율(2002년 :7.8%→2003년 : 1.8%) 보다 크게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2. 서비스업의 부문별 고용창출능력

앞에서 서비스업부문에서의 취업자 비중이나 서비스업의 일자리 흡수력이 상대적으로 제조업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업 부문의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OECD에서 분류하고 있는 4가지 범주의 서비스업을 구분하였다. 4가지 큰 범주는 사업서비스업(Producer Services), 배분서비스업(Distributive Services), 개인서비스(Personal Services) 그리고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업이다(<표 5> 참조).

사업서비스업은 생산활동에 필요한 중간투입물로 가구에서도 소비될 수 있으나 주로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되는 서비스업이다. 높은 정보컨텐츠를 가지는 것으로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운영업, 연구개발업, 인력소개업, 금융, 보험, 부동산업이 포함되며 향후 노동시장에서 지식경제의 선두자로 광범위한 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ICT부분과 숙련 노동자(high-skilled worker)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 부분이다.

배분서비스업은 상품과 정보, 사람을 운송하는 서비스업으로 여행업과 같이 일부는

6) OECD, "Employment in the Service Economy: A Reassessment," 2000에서 분류하고 있는 방식으로 분류하였음.

최종소비 단계에서의 서비스업이다. 배분서비스업에 속하는 통신업은 우편송달 및 유무선통신업, 여행, 전화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서비스업은 주로 전통서비스(음식·숙박·가사)업 부문으로 최종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업자가 직접 연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종소비단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업이다. 개인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 부문이라 할 수 없지만 미숙련기술(low-skilled)을 가진 근로자나 여성들에게 중요한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부문이다. 여기에서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은 하수처리 및 폐기물처리, 회원단체, 수리업, 이미용 세탁업 등 기타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사회서비스업은 최종소비단계에서 가구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지만, 주로 집합적 서비스형태로 제공되는 것으로 시장적 이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학위나 고급자격증이 필요한 서비스분야도 있지만 사회복지사업과 같이 저숙련 기술수준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도 다수 포함한다.

〈표 5〉 서비스업의 분류

사업서비스업 (Producer Services)	배분서비스업 (Distributive Services)	개인서비스업 (Personal Services)	사회서비스업 (Social Services)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운수업 통신업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가사 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주: 도소매업은 실제 배분서비스업으로 분류되지만 한국은행의 GDP분류체계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 함께 묶여 있고, 서비스 특성이 주로 가계의 최종소비단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업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서비스업에 포함시켰음⁷⁾.

자료: OECD, "Employment in the Service Economy: A Reassessment," 2000.

4개의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고용탄성치와 취업계수를 <표 6>에 제시하였다⁸⁾. 제조업이나 전체서비스업 부문과는 달리 사업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분야에서의 취업계수(=취업자 증가율/경제성장률)는 증가하는 모습을, 배분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에서의 취업계수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업 중에서 사업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은 그 특성상 생산요소인 노동이 기술발전예 따라 자본으로 쉽게 대체가 되지 않으면서 지식기반 사회에서 고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업종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사업서비스업의 고용계수는 1994년과 2000년 사이 19.3(명/10억)에서 20.4(명/10억)로 증가하여 고용흡수력이 향상되었고, 사회서비스업은 1994년 32.3(명/10억)에서 2003년

7)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이 서비스부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이기 때문에 배분서비스업에 포함했을 경우 배분서비스업의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 그리고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이 제외된 개인서비스업의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는 달라짐(<부록 1> 참고).

8) 보다 구체적인 산업대분류별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는 <부록 2>와 <부록 3> 참고.

〈표 6〉 서비스업의 부문별 고용탄성치와 취업계수(사업·배분·개인·사회서비스업)

(단위: 명/10억)

	사업서비스업 (Producer Services)		배분서비스업 (Distributive Services)		개인서비스업 (Personal Services)		사회서비스업 (Social Services)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1993	19.3	1.88	55.2	0.36	114.5	-	32.8	-
1994	19.3	1.02	50.4	0.02	112.3	0.78	32.3	0.56
1995	19.1	0.88	47.8	0.49	107.4	0.42	32.6	1.32
1996	19.2	1.13	45.6	0.45	105.9	0.77	32.1	0.57
1997	19.5	1.28	43.0	0.44	106.8	1.29	32.2	1.10
1998	19.4	1.42	43.3	0.56	112.7	0.53	35.1	-6.51
1999	19.6	1.40	39.6	0.25	101.9	0.22	36.0	1.94
2000	20.5	2.06	34.8	0.26	98.8	0.59	35.5	-1.34
2001	21.5	2.55	31.8	0.34	97.4	0.72	35.6	1.04
2002	20.3	0.43	30.2	0.40	94.4	0.48	36.6	1.80
2003	20.4	1.31	28.4	-0.74	93.6	1.48	38.1	2.23

주: 1) 취업계수=취업자/GDP,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GDP증가율.

2) 외환위기기간인 1998년은 취업자증가율과 GDP증가율이 모두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내어 고용탄성치는 플러스가 되었음.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및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로 계산.

38.1(명/10억)로 고용계수가 증가하였다. 반면, 배분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흡수여력은 1994년과 2003년 사이 50.4→28.4, 112.3→93.6로 각각 감소하여 제조업에서의 취업계수 하락과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업종별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생산성증가율)는 사업서비스업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3년 ‘고용 없는 성장’을 경험한 서비스업은 배분서비스업 부문으로 1% 생산성 증가에 취업자는 오히려 0.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용탄성치: -0.74) 1994년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사업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에서의 2003년 고용탄성치는 1.31, 1.48, 2.23으로 각각 나타나 생산성 증가에 따른 고용이 증가하였음을 나타낸다. 특히, 사업서비스업의 경우는 고 부가가치 업종으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고용탄성치)이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산업의 고용흡수력도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어 향후 이 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고 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필요

세계경제의 고용구조가 서비스업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며, 우리나라도 서비스업 위주로 고용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또한 전체산업의 취업자 대비 실질

GDP를 나타내는 취업계수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경제의 고용흡수여력이 낮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산업별 취업계수를 확인해 본 결과 고용흡수능력은 1995년 중반을 기점으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달리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과 자본의 생산요소대체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며, 서비스업은 제조업 생산에서와 같이 자본이나 기술의존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근 취업자 증가가 저 부가가치 서비스업 부문에서 일어났고,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의 고용비율은 여전히 서방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성장 1%당 취업자 증가율을 나타내는 고용탄성치를 보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의 가능성이 지속될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최근 몇년간 고용탄성치가 마이너스로 나타나 고용 없는 성장이 앞으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으며, 서비스업에서는 일부업종의 고용탄성치가 마이너스로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제조업보다 일자리 창출여력이 높다. 서비스업의 경우 경기변화에 따른 고용탄성치의 변화는 제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서비스업으로 고용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고용흡수력과 일자리 창출이 높은 고 부가가치 서비스 부문, 예를 들면 사업서비스업(Producer Services)이나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자동화 등으로 고용흡수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만을 가지고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없으며,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일정 정도 한계에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 부족현상과 청년층 실업의 해소를 위해서는 수없이 많고 다양한 서비스업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며,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새로운 산업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일자리 창출이 저 부가가치 위주의 서비스업에서 일어났지만 여기서도 고용흡수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 회복을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고 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정보통신 관련 사업지원서비스업, 관광 의료 교육 문화와 같은 사회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선진국 수준의 고용구조로 이행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매일경제신문사, 『경제신어사전』, 2005.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05년 1월호(창간호).

한국은행, “2000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노동연관효과,” 『조사통계월보』,

2000.

OECD, *Employment in the Service Economy: A Reassessment*, 2000.

〈부표 1〉 배분·개인 서비스의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

(단위 : 명/10억)

	배분서비스업 ^a (Distributive Services)		개인서비스업 ^b (Personal Services)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1993	101.8	-	83.2	-
1994	99.4	0.71	78.0	0.37
1995	94.5	0.39	74.5	0.52
1996	92.3	0.66	73.6	0.78
1997	90.6	0.65	75.5	1.53
1998	94.5	0.53 ^c	74.1	1.30 ^c
1999	84.9	0.21	70.3	0.40
2000	78.8	0.34	71.0	1.14
2001	72.2	-0.05	85.9	4.31
2002	69.1	0.34	83.8	0.70
2003	67.2	-11.14	81.0	19.55 ^c

주 : 1) a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포함했을 때이며, b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제외되었을 때임.

2) 취업계수=취업자/GDP,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GDP증가율.

3) c는 취업자 증가율과 GDP증가율이 모두 마이너스로 나타나 고용탄성치가 플러스가 된 것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및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로 계산.

〈부표 2〉 산업대분류별 취업계수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농업임업및어업	117.5	112.5	103.1	97.4	91.6	102.6	93.1	89.6	84.9	84.7	86.0
광업	20.4	15.7	11.1	10.3	11.8	10.5	9.5	8.2	8.8	9.4	8.8
제조업	56.9	51.4	46.6	43.0	39.4	36.9	31.1	28.4	27.6	25.5	24.1
전기가스및수도사업	8.9	8.6	7.9	7.7	7.3	5.7	5.3	4.8	4.1	3.4	4.7
건설업	40.5	40.6	39.9	38.0	37.8	32.7	33.2	36.9	35.0	37.5	36.1
도소매및음식숙박업	123.5	122.5	117.3	115.6	116.4	125.4	111.7	107.4	101.0	97.8	97.7
운수창고및통신업	55.2	50.4	47.8	45.6	43.0	43.3	39.6	34.8	31.8	30.2	28.4
금융보험업	26.3	24.8	22.8	22.3	22.2	22.8	21.3	21.3	19.9	15.7	15.7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15.6	16.2	16.9	17.5	18.1	17.5	18.6	20.1	22.4	23.2	23.5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	25.0	25.5	25.4	24.0	23.6	26.6	29.9	26.3	23.7	23.1	24.3
교육서비스업	42.8	41.4	42.8	43.5	44.4	46.3	45.1	46.3	45.9	47.5	50.8
보건및사회복지사업	27.4	26.6	26.1	25.8	26.1	30.1	30.6	33.6	40.4	43.5	40.6
기타서비스업	85.3	79.5	75.7	74.6	76.4	75.3	71.3	72.0	86.8	84.7	82.1

주 : 산업별 취업계수 = 산업별 취업자 / 산업별 GDP.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및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로 계산.

〈부표 3〉 산업대분류별 고용탄성치

(단위 : 탄성치)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농업임업및어업	-9.78	-0.67	-1.45	-0.36	-0.77	-0.67	-2.14	-3.78	1.05 ^C	0.81 ^C
광업	22.00 ^C	5.38 ^C	3.85 ^C	-8.03	1.62 ^C	-0.84	-9.25	-88.58	0.21 ^C	-1.35
제조업	0.07	0.11	-0.30	-0.81	1.73 ^C	0.13	0.39	-0.30	-0.08	-0.18
전기가스및수도사업	0.77	-0.50	0.72	0.41	63.77 ^C	0.09	0.27	-1.23	-1.33	7.87
건설업	1.02	0.78	0.41	0.78	2.20 ^C	0.84	-2.12	0.03	3.69	0.49
도소매및음식숙박업	0.90	0.40	0.76	1.31	0.43 ^C	0.19	0.49	-0.34	0.39	1.04 ^C
운수창고및통신업	0.02	0.49	0.45	0.44	0.56 ^C	0.25	0.26	0.34	0.40	-0.74
금융보험업	0.49	0.37	0.61	0.88	0.28 ^C	-2.58	1.00	0.13	-0.16	0.90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1.65	1.52	1.50	1.49	3.54 ^C	3.18	2.33	25.98	1.79	1.51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	1.78	0.77	-0.20	0.57	22.57	4.44	-39.74	-5.29	0.04	3.48
교육서비스업	0.08	1.96	1.55	2.05	-2.75	-1.35	2.22	0.83	1.82	2.89
보건및사회복지사업	0.56	0.72	0.45	1.20	-1.97	1.35	-4.67	-3.05	2.44	-0.43
기타서비스업	0.33	0.49	0.74	1.47	1.21 ^C	0.38	1.15	4.22	0.71	18.01 ^C

주 : 1) 산업별 취업계수 = 산업별 취업자 / 산업별 GDP

2) 산업대분류별 고용탄성치에서는 취업자증가율과 GDP증가율이 모두 마이너스(C)로 나타나 고용탄성치가 플러스로 계산된 업종이 있음.

자료 : <부표 2> 참조.

노동비용과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김승택·강승복*

I. 서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의해 물가, 임금, 지가 등의 요소비용이 계속 상승하는 고비용·저효율의 문제가 노동비용 상승의 비판으로 작용하던 시기가 일단락된 후, 최근 저금리 상황이 유지되면서 물가 또한 급상승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명목임금의 상승이 우리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과 같이 낮은 노동비용 수준을 가진 국가가 국제시장에서 지배력을 넓혀가는 상황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노동생산성의 상승률보다 실질임금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분석들이 등장하면서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인하여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잠식당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등장한다.

공병호(1990)²⁾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 수준을 좌우하는 제조업 분야의 경우 국제경쟁력이 잠식당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기술 기반 취약성,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노동비용의 상승폭과 속도를 지적하고 있다. 김재원(1997)³⁾은 명목임금인상률과 명목노동생산성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생산성의 향상보다 임금 인상이 높게 나타났던 기간을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후반으로 지적하는데,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집중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 고용흡수능력의 저하와 수출경쟁력의 감소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평균 임

* 김승택=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stkim@kli.re.kr), 강승복=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kangsb@kli.re.kr).

2) 공병호, 『노동비용 상승과 국제경쟁력 - 한·일·대만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1990.

3) 김재원, 『노동경제학』, 박영사, 1997.

금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1995년 기준으로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보다 높은 수준인 한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는 임금수준은 낮게 나타나지만 생산성이나 생계비 기준으로 비교하면 역시 임금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서 가격 면에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박기성·안주엽(2004)⁴⁾의 경우 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증가율의 비교에 있어 평균 개념이 아닌 한계 노동생산성증가율을 추정하여 대체탄력성과 기술수준을 모두 고려한 노동생산성의 개념을 비교해 본 결과 1963~2000년 기간 동안 임금과 한계 노동생산성증가율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임금상승률이 평균 노동생산성증가율을 초과한다고 해도 노동의 수요곡선을 벗어나는 과도한 임금인상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노동비용 수준이 과연 경쟁국들에 비해 부담이 가는 수준까지 육박했는지,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분담금과 신규채용시 교육 및 훈련비용 등의 간접노동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지, 궁극적으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임금 및 노동비용의 변화추세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는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횡단면 및 시계열 자료로 국제 비교를 실시하여 1990년대 초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과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나라와 외국의 상대적인 시계열 통계와 추세를 비교 분석하여 간단히 진단해 보려한다.

II. 노동비용의 국제비교

1975~2003년의 각국의 시간당 보수(노동비용)수준⁵⁾을 미국과 비교하면, 미국의 시간

4) 박기성·안주엽, 「임금과 생산성 구조의 개혁 - 산업구조 개혁과 경영혁신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제27권제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2004: 165-179PP.

5) 시간당 보수(hourly compensation)는 시간당 임금(hourly direct pay)과 실제 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으로 환산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지출 등의 기타 노동비용(employer social insurance expenditures and other labor taxes)을 포함한 개념으로 총노동비용을 시간당으로 환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BLS의 보수(compensation)에 대한 정의는 ILO가 정의하는 총노동비용(total labor costs)과 다르다. BLS의 보수 개념은 모집(recruitment), 훈련(employee training), 후생복지시설(plant facilities and services such as cafeterias and medical clinics)을 포함하지 않는 반면, ILO의 총노동비용은 이상의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BLS의 자료가 이러한 항목들을 제외한 이유는 많은 국가에서 해당 항목들이 노동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미만이고 또한 통계를 수집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당 보수를⁶⁾ 기준지표인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1975년 우리나라의 상대적 지표는 5로서 엄청난 격차를 가지고 있었다. 1975년 당시 같은 지표상에서 이스라엘이 35, 스페인이 40, 뉴질랜드가 49, 싱가포르가 13이었던 것을 볼 때 당시 우리나라의 노동비용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비용은 1990년까지 완만한 상승을 보이며 25에 도달했다가, 1990년대에 들어 상승속도가 빨라지며 1995년 43을 거쳐 2003년에는 47에 달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표 1> 참조).⁷⁾ 이 지표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2003년 현재 우리나라는 28개국 중 22위 수준의 시간당 보수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OECD국가들과의 상대적인 노동비용 수준은 아직도 절반을 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리던 싱가포르, 대만, 홍콩과의 비교에서는 1990년까지는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비용을 가지고 있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순위가 역전되어 이후에는 상대적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각국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노동비용이 높은 것이 단순히 기업에 불리하다거나, 그 반대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과 부가급부가 많은 좋은 근로조건을 의미한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런 예로는 시간당 노동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노르웨이의 경우 경제가 어렵거나 기업이 이러한 노동비용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을 하기가 힘든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미국 이상의 순위를 가진 국가들의 절반 수준의 노동비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비용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동비용의 상대적 순위와 시계열 성향은 <표 2>의 미국 달러화 가치로 환산한 비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3년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시간당 \$12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OECD 국가들과도 약 \$3 이상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의 경쟁국들이나 멕시코 브라질 등의 신흥산업국, 그리고 유럽의 후발산업국(포르투갈) 등에 비해서는 \$2-\$6 높은 시간당 노동비용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시간당 보수는 <표 3>에서 보이는 것처럼 1990년 이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시간당 보수 상승률의 두 번째 순위인 싱가포르가

6) 시간당 보수(hourly compensation)는 시간당 임금(hourly direct pay)과 실제 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으로 환산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지출 등의 기타 노동비용(employer social insurance expenditures and other labor taxes)으로 이분된다.

7) 여기서 다루는 노동비용과 임금수준의 국제비교는 미국 노동성 BLS(Bureau of Labor Statistics)가 2003년 발표한 노동비용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통계자료는 OECD국가를 중심으로 30개 국가의 제조업 분야의 임금과 노동비용을 1975년부터 2002년까지의 시계열로 보여주고 있다.

1990년부터 2003년까지 199%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도 훨씬 높은 279%를 기록하는 것을 발견할 때 이와 같은 노동비용의 상승 속도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표 1〉 미국 기준 시간당 보수(hourly compensation costs) 지표(Index)

국 가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순위*
Denmark	101	112	64	125	149	117	115	121	146	1
Norway	112	123	82	148	146	116	115	129	144	2
Germany	-	-	-	-	177	116	111	115	136	3
Switzerland	98	114	75	140	170	108	106	113	127	4
Belgium	104	136	70	130	162	111	103	108	126	5
Finland	75	86	65	144	143	100	98	103	124	6
Netherlands	107	125	69	122	141	99	97	102	122	7
Austria	73	92	60	122	148	99	94	98	116	8
Sweden	116	129	76	141	126	104	91	96	115	9
Luxembourg	101	120	59	109	137	90	85	89	105	10
United States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1
France	73	92	59	104	113	79	77	81	96	12
United Kingdom	55	78	49	86	81	86	81	85	93	13
Japan	48	57	49	85	138	112	95	88	91	14
Australia	91	88	65	89	91	74	66	73	91	15
Canada	99	92	88	111	97	85	80	79	88	16
Ireland	50	63	47	80	81	66	67	73	87	17
Italy	75	84	60	117	93	72	68	71	84	18
Spain	41	61	36	77	75	55	53	56	68	19
Israel	33	35	29	52	56	59	60	52	53	20
New Zealand	50	53	34	54	57	41	37	41	51	21
Korea	5	10	10	25	43	42	38	43	47	22
Singapore	14	15	19	25	42	38	36	33	34	23
Portugal	25	21	12	24	30	23	23	24	28	24
Taiwan	6	11	12	26	35	32	30	27	27	25
Hong Kong	12	16	14	22	28	28	28	27	25	26
Brazil	-	-	-	-	-	18	14	12	12	27
Mexico	24	23	13	11	9	11	12	12	11	28
Sri Lanka	5	2	2	2	3	2	2	2	-	
Greece	27	39	29	45	53	-	-	-	-	

주: 본 절의 모든 표는 제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975~2003년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여기서의 순위는 2003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자료: BLS,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Hourly Compensation Costs for Production Workers in Manufacturing 1975-2003*, 2004에서 재구성했음.

〈표 2〉 미국 달러 가치 환산 시간당 보수(Hourly compensation costs)

(단위 : US Dollar)

국 가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비교
Denmark	6.24	10.77	8.10	18.35	25.43	22.76	23.26	25.62	32.18	10.21
Norway	6.90	11.80	10.47	21.76	24.84	22.66	23.29	27.29	31.55	9.58
Germany	-	-	-	-	30.08	22.65	22.54	24.34	29.91	7.94
Switzerland	6.03	10.96	9.55	20.63	28.99	21.02	21.60	23.84	27.87	5.90
Belgium	6.39	13.07	8.94	19.10	27.53	21.53	20.98	22.74	27.73	5.76
Finland	4.63	8.30	8.20	21.15	24.31	19.44	19.85	21.78	27.17	5.20
Netherlands	6.58	12.05	8.73	17.98	24.03	19.33	19.65	21.62	26.84	4.87
Austria	4.50	8.87	7.57	17.91	25.26	19.17	19.08	20.69	25.38	3.41
Sweden	7.14	12.44	9.61	20.82	21.46	20.18	18.39	20.23	25.18	3.21
Luxembourg	6.22	11.51	7.48	16.00	23.36	17.51	17.21	18.71	23.11	1.14
United States	6.16	9.63	12.71	14.72	17.02	19.46	20.29	21.11	21.97	0.00
France	4.50	8.90	7.48	15.36	19.26	15.46	15.65	17.12	21.13	-0.84
United Kingdom	3.39	7.52	6.23	12.62	13.79	16.82	16.50	17.89	20.37	-1.60
Japan	2.97	5.46	6.27	12.54	23.55	21.89	19.25	18.49	20.09	-1.88
Australia	5.62	8.47	8.21	13.14	15.42	14.48	13.31	15.50	20.05	-1.92
Canada	6.11	8.87	11.20	16.33	16.50	16.48	16.24	16.68	19.28	-2.69
Ireland	3.06	6.03	6.00	11.78	13.77	12.76	13.64	15.31	19.14	-2.83
Italy	4.64	8.09	7.56	17.28	15.91	14.05	13.81	14.97	18.35	-3.62
Spain	2.52	5.86	4.64	11.30	12.70	10.66	10.76	11.93	14.96	-7.01
Israel	2.03	3.41	3.66	7.71	9.50	11.49	12.26	11.01	11.73	-10.24
New Zealand	3.10	5.14	4.30	8.01	9.78	7.91	7.53	8.63	11.13	-10.84
Korea	0.32	0.95	1.23	3.69	7.26	8.23	7.69	9.00	10.28	-11.69
Singapore	0.84	1.48	2.45	3.73	7.23	7.36	7.28	6.90	7.41	-14.56
Portugal	1.52	1.98	1.46	3.59	5.09	4.49	4.59	5.07	6.23	-15.74
Taiwan	0.38	1.02	1.50	3.89	5.88	6.18	6.03	5.73	5.84	-16.13
Hong Kong	0.75	1.50	1.73	3.22	4.80	5.45	5.74	5.66	5.54	-16.43
Brazil	-	-	-	-	-	3.50	2.94	2.53	2.67	-19.3
Mexico	1.47	2.21	1.59	1.58	1.46	2.19	2.51	2.60	2.48	-19.49
Sri Lanka	0.28	0.22	0.28	0.35	0.48	0.48	0.45	0.49	-	-
Greece	1.69	3.72	3.65	6.69	8.94	-	-	-	-	-

자료 : <표 1>과 동일.

〈표 3〉 1990년 불변가격 기준 시간당 보수(Hourly compensation costs)의 지표

국 가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순위
Korea	8.7	25.8	33.3	100	196.9	223.3	208.7	244.1	279.0	1
Singapore	22.5	39.7	65.7	100	193.9	197.6	195.3	185.2	198.8	2
Denmark	34.0	58.7	44.1	100	138.5	124.0	126.7	139.6	175.3	3
Portugal	42.2	55.0	40.7	100	141.9	125.1	128.0	141.2	173.7	4
Hong Kong	23.5	46.7	53.7	100	149.21	169.4	178.6	176.1	172.3	5
Ireland	26.0	51.2	50.9	100	116.9	108.3	115.8	130.0	162.5	6
United Kingdom	26.9	59.6	49.4	100	109.3	133.3	130.8	141.8	161.4	7
Japan	23.7	43.6	50.0	100	187.9	174.6	153.6	147.5	160.2	8
Mexico	93.0	139.9	100.8	100	92.6	138.9	159.3	165.0	156.9	9
Australia	42.7	64.4	62.5	100	117.4	110.2	101.3	117.9	152.6	10
Israel	26.3	44.3	47.5	100	123.3	149.1	159.1	142.9	152.2	11
Taiwan	9.7	26.1	38.5	100	151.1	158.8	155.1	147.1	150.2	12
United States	41.9	65.4	86.3	100	115.6	132.2	137.9	143.4	149.3	13
Netherlands	36.6	67.0	48.5	100	133.6	107.5	109.2	120.2	149.2	14
Belgium	33.4	68.4	46.8	100	144.1	112.7	109.8	119.0	145.2	15
Norway	31.7	54.2	48.1	100	114.2	104.1	107.0	125.4	145.0	16
Luxembourg	38.9	71.9	46.7	100	145.9	109.4	107.5	116.9	144.4	17
Germany, former West	28.8	56.0	43.6	100	144.6	109.0	108.4	117.2	144.0	18
Austria	25.1	49.5	42.3	100	141.1	107.1	106.6	115.5	141.7	19
New Zealand	38.6	64.2	53.6	100	122.1	98.8	94.0	107.7	139.0	20
France	29.3	58.0	48.7	100	125.4	100.6	101.9	111.5	137.5	21
Switzerland	29.2	53.1	46.3	100	140.5	101.8	104.7	115.5	135.1	22
Spain	22.3	51.9	41.0	100	112.5	94.4	95.3	105.6	132.5	23
Finland	21.9	39.2	38.8	100	114.9	91.9	93.8	103.0	128.4	24
Sweden	34.3	59.8	46.1	100	103.1	97.0	88.4	97.2	121.0	25
Canada	37.4	54.3	68.6	100	101.1	100.9	99.4	102.2	118.1	26
Italy	26.8	46.8	43.8	100	92.1	81.3	79.9	86.6	106.2	27
Sri Lanka	79.9	61.8	79.6	100	136.1	136.3	128.0	140.9	-	
Greece	25.2	55.6	54.6	100	133.6	-	-	-	-	

주 : 이 지표는 독일의 경우 통일독일의 자료가 시계열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서독의 자료로 대치했음.
(서독: Germany, former West).

자료 : 자료 : <표 1>과 동일.

III.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노동비용 중 사회보장비 등의 지출을 제외한 임금부분에 대한 수준을 비교해보면, 미국의 시간당 임금을 기준인 100이라 했을 때 2003년 현재 우리나라 임금비용의 지표는 44를 기록하고 있다(<표 4> 참조). 이것은 <표 1> 시간당 보수의 비교에서 47을 기록한 것과 큰 차이가 없고, 순위도 22위로 같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동비용을 구성하고 있는 임금과 임금외노동비용의 수준을 다른 국가와 상대 비교하면, 임금 수준과 노동비용 수준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5>에서 우리나라의 시간당 임금을 미국 달러화로 환산해 보았을 때,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약 \$9.5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표 2>의 노동비용의 차이가 \$12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노동비용 상위 국가와 우리나라 간 노동비용 격차의 대부분은 임금수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⁸⁾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국가간 노동비용의 격차는 대부분 임금수준의 격차에서 발생한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기준을 적용한 <표 2>와 <표 5>에서 상대적 격차의 규모를 국가별로 비교할 때 시간당 보수, 즉 노동비용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위인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간당 보수에서 시간당 임금을 제외한 임금외노동비용에서의 격차가 작게 나타나는 한편,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아래인 국가들은 임금외노동비용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규모로 보았을 때 임금외노동비용의 국가간 격차는 임금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을 100이라 기준할 때 한 미 달러화 기준 시간당 보수는 2003년 124.9로 4년간 약 25%가 증가한 한편, 2003년 시간당 임금은 2000년을 기준으로 126.7로 나타나서 약 1.8%p 높은 임금의 상승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과거 1975~79년과 1980~84년의 기간동안은 시간당 보수와 임금의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동일하여 기타 임금외비용이 유사한 성장추세를 보였는데, 1985~99년의 기간 동안은 시간당 보수의 성장률이 시간당 임금의 성장률을 앞서 기타 임금외비용의 성장률이 시간당 임금의 그것을 앞섰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2000년 이후 최근에는 시간

8) 다른 국가의 경우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사회안전망이 발달한 서구국가들의 순위가 총노동비용의 비교 때보다 임금의 비교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보험에 대한 기여금 등 기타 임금외노동비용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당 임금의 성장이 노동비용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고 보인다.

<표 6>은 시간당 보수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금 비용이 노동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90.2%에 달하다가 1990년 87.7%, 2000년 72.9%로 감소한 다음부터는 계속 이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1980년대 복리후생비용의 증가와 더불어 1990년대 사회보험들의 적용대상 확대로 인해 나타난 기타 임금의 노동비용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미국 임금 기준 시간당 임금(Hourly Direct Pay)의 지표

국 가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순위
Denmark	116.1	131.4	74.7	152.5	178.8	135.0	132.3	140.3	170.1	1
Norway	110.1	121.1	82.4	150.1	153.8	120.8	120.1	135.7	152.4	2
Germany, former West	97.8	122.6	71.9	142.6	176.4	116.6	112.1	116.6	138.7	
Switzerland	99.2	117.9	78.2	147.6	178.9	112.2	111.5	118.7	135.1	3
Germany	-	-	-	-	169.1	111.8	107.6	111.8	133.0	4
Netherlands	98.0	116.7	65.3	118.9	135.7	97.8	96.1	102.0	123.0	5
Finland	71.9	83.7	63.8	137.9	137.6	97.2	96.3	101.2	122.6	6
Belgium	95.5	128.1	65.8	118.6	144.8	95.6	92.1	96.2	114.0	7
Luxembourg	103.3	124.9	61.9	115.6	148.9	95.4	90.4	94.9	113.8	8
Austria	68.4	86.7	54.6	112.6	136.2	89.5	86.6	90.6	107.9	19
Sweden	107.4	115.3	65.9	124.3	114.5	93.5	82.6	87.7	105.4	10
United States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1
Japan	51.8	61.8	53.6	92.5	149.7	117.8	99.9	92.3	97.4	12
Ireland	52.9	67.5	49.5	85.3	87.7	70.8	73.2	80.0	97.3	13
United Kingdom	57.6	78.7	51.6	91.4	88.2	88.9	84.6	88.5	96.9	14
Australia	94.8	93.6	68.4	95.0	95.4	75.6	67.1	75.2	94.4	15
Canada	107.8	101.2	95.8	120.0	101.9	89.6	84.5	82.6	92.7	16
France	64.7	82.5	51.8	92.0	99.4	69.0	67.6	71.2	85.1	17
Italy	60.5	72.9	52.1	100.2	79.9	61.3	58.5	61.2	72.9	18
Spain	34.0	55.5	34.1	72.3	70.7	51.6	50.4	53.9	65.7	19
New Zealand	56.5	61.7	39.5	64.3	68.5	48.3	44.7	49.5	62.1	20
Israel	33.2	36.8	30.2	55.6	59.9	63.1	64.8	56.0	57.6	21
Korea	5.6	10.9	10.8	27.6	45.5	38.7	35.4	40.0	44.4	22
Singapore	13.9	15.0	18.6	27.4	45.1	42.5	39.2	35.9	37.7	23
Hong Kong	14.1	18.5	16.2	26.2	34.0	33.3	32.8	31.2	29.6	24
Taiwan	6.8	12.1	13.6	30.8	39.6	34.2	32.3	29.5	29.3	25
Portugal	24.4	20.3	11.1	24.1	30.2	23.2	23.0	24.5	29.2	26
Mexico	25.8	25.4	13.9	12.0	9.6	12.6	13.9	13.9	12.9	27
Brazil	-	-	-	-	-	15.3	12.3	10.3	10.6	28
Sri Lanka	4.9	2.5	18.6	2.6	3.0	2.6	2.4	2.5	-	
Greece	27.2	39.6	29.2	46.4	52.0	-	-	-	-	

자료: <표 1>과 동일.

〈표 5〉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시간당 임금(Hourly Direct Pay)

(단위: US Dollar)

국 가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비교
Denmark	6.01	10.03	6.54	16.16	23.99	20.95	21.23	23.33	29.13	12.01
Norway	5.68	9.49	8.44	17.59	20.64	18.75	19.27	22.58	26.10	8.98
Germany, former West	5.05	9.61	7.37	16.72	23.67	18.09	17.99	19.39	23.75	6.63
Switzerland	5.12	9.34	8.01	17.31	24.01	17.41	17.89	19.75	23.14	6.02
Germany	-	-	-	-	22.70	17.4	17.26	18.60	22.78	5.66
Netherlands	5.06	9.15	6.69	13.93	18.21	15.17	15.42	16.97	21.06	3.94
Finland	371	6.41	6.54	16.16	18.46	15.08	15.46	16.83	21.00	3.88
Belgium	4.93	10.04	6.74	13.90	19.43	14.83	14.79	16.01	19.53	2.41
Luxembourg	5.33	9.79	6.34	13.54	19.98	14.80	14.51	15.79	19.50	2.38
Austria	3.53	6.79	5.59	13.20	18.27	13.89	13.89	15.06	18.48	1.36
Sweden	5.54	9.04	6.75	14.57	15.37	14.51	13.25	14.58	18.06	0.94
United States	5.16	7.84	10.24	11.72	13.42	15.52	16.05	16.63	17.12	0
Japan	2.67	4.84	5.49	10.84	20.09	18.28	16.03	15.35	16.68	-0.44
Ireland	2.73	5.29	5.06	5.07	11.76	10.99	11.75	13.30	16.66	-0.46
United Kingdom	2.97	6.17	5.29	10.71	11.83	13.80	13.58	14.73	16.59	-0.53
Australia	4.89	7.34	7.01	11.13	12.79	11.73	10.77	12.51	16.17	-0.95
Canada	5.56	7.93	9.81	14.07	13.67	13.90	13.55	13.74	15.88	-1.24
France	3.34	6.47	5.33	10.79	13.33	10.70	10.84	11.85	14.57	-2.55
Italy	3.12	5.72	5.38	11.74	10.72	9.50	9.39	10.19	12.49	-4.63
Spain	1.75	4.35	3.49	8.47	9.48	8.01	8.09	8.96	11.25	-5.87
New Zealand	2.91	4.84	4.21	7.54	9.20	7.50	7.17	8.23	10.63	-6.49
Israel	1.71	2.88	3.09	6.52	8.03	9.79	10.39	9.31	9.86	-7.26
Korea	0.29	0.87	1.11	3.23	6.11	6.00	5.67	6.65	7.60	-9.52
Singapore	0.72	1.17	1.90	3.22	6.05	6.59	6.29	5.97	6.45	-10.67
Hong Kong	0.73	1.45	1.66	3.08	4.56	5.17	5.26	5.18	5.07	-12.05
Taiwan	0.35	0.95	1.39	3.61	5.31	5.30	5.18	4.91	5.01	-12.11
Portugal	1.26	1.59	1.16	2.86	4.05	3.61	3.69	4.07	5.01	-12.11
Mexico	1.33	1.99	1.42	1.41	1.29	1.95	2.23	2.32	2.21	-14.91
Brazil	-	-	-	-	-	2.37	1.98	1.72	1.81	-15.31
Sri Lanka	0.25	0.20	0.24	0.30	0.41	0.41	0.38	0.42	-	
Greece	1.40	3.10	3.00	5.43	6.98	-	-	-	-	

자료 : <표 1>과 동일.

〈표 6〉 시간당 보수(Compensation Cost)에서 임금(Direct Pay)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국 가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순위
New Zealand	94.1	94.1	94.1	94.1	94.1	94.8	95.2	95.4	95.5	1
Canada	91.1	89.5	87.6	86.1	82.8	84.4	88.8	89.1	92.4	2
Hong Kong	96.8	96.8	96.3	95.7	95.0	94.8	91.5	91.5	91.5	3
Denmark	96.3	95.6	94.4	97.4	94.4	92.1	91.3	91.1	90.5	4
Mexico	90.5	90.2	89.2	89.1	88.0	89.1	88.8	89.1	89.2	5
Singapore	85.9	79.4	77.7	86.3	83.7	89.6	86.5	86.5	87.0	6
Ireland	89.0	87.8	82.0	81.3	85.4	86.1	86.1	86.9	87.0	7
Taiwan	93.5	93.5	93.1	92.8	90.4	85.8	85.8	85.8	85.8	8
Luxembourg	85.7	84.9	84.9	84.6	85.5	84.5	84.3	84.4	84.4	9
Israel	84.5	84.5	84.5	84.5	84.5	85.2	84.8	84.5	84.0	10
Japan	90.0	88.6	87.4	86.5	84.5	83.5	83.3	83.0	83.0	11
Switzerland	84.8	83.9	83.9	83.9	82.8	82.8	82.8	82.9	83.0	12
Norway	82.4	80.4	80.6	80.9	83.1	82.7	82.7	82.7	82.7	13
United Kingdom	87.6	82.0	84.9	84.9	85.8	82.0	82.3	82.3	81.5	14
Australia	87.1	86.6	85.3	84.7	83.0	81.0	80.9	80.8	80.6	15
Portugal	83.0	80.5	77.8	78.6	79.5	80.3	80.3	80.3	80.3	16
Netherlands	76.9	76.0	76.6	77.5	75.8	78.5	78.5	78.5	78.5	17
United States	83.7	81.4	80.6	79.6	78.8	79.7	79.1	78.3	77.9	18
Finland	80.1	79.0	79.8	76.4	75.9	77.6	77.9	77.3	77.3	19
Germany	-	-	-	-	75.4	76.6	76.6	76.4	76.1	20
Germany, former West	80.6	79.0	77.9	77.0	75.4	76.4	76.4	76.2	76.0	
Spain	69.6	74.2	75.4	75.0	74.7	75.1	75.1	75.1	75.1	21
Korea	90.2	90.2	90.3	87.7	85.3	72.9	73.8	73.9	73.9	22
Austria	78.3	76.6	73.8	73.7	72.3	72.4	72.8	72.8	72.8	23
Sweden	77.6	72.6	70.3	70.0	71.6	71.9	72.0	72.1	71.7	24
Belgium	77.2	76.8	75.4	72.7	70.6	68.9	70.5	70.4	70.4	25
France	74.2	72.7	70.9	70.2	69.2	69.2	69.3	69.2	68.9	26
Italy	67.3	70.6	70.5	67.9	67.4	67.7	68.0	68.1	68.1	27
Brazil	-	-	-	-	-	67.6	67.4	67.7	67.7	28
Sri Lanka	90.6	90.6	85.7	85.7	85.7	85.7	85.7	85.7	-	
Greece	83.3	83.3	82.0	81.3	78.1	-	-	-	-	

자료 : <표 1>과 동일.

〈표 7〉 시간당 보수(Compensation Cost)에서 사회보험지출 등 기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국 가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순위
Brazil	-	-	-	-	-	32.4	32.5	32.3	32.3	1
Italy	32.8	29.4	29.5	32.1	32.6	32.3	32.0	31.9	31.9	2
France	25.8	27.3	29.1	29.8	30.8	30.8	30.7	30.8	31.1	3
Belgium	22.8	23.2	24.6	27.3	29.4	31.1	29.5	29.6	29.6	4
Sweden	22.4	27.4	29.7	30.0	28.4	28.1	28.0	27.9	28.3	5
Austria	21.7	23.4	26.2	26.3	27.7	27.6	27.2	27.2	27.2	6
Korea	9.8	9.8	9.7	12.3	15.8	27.1	26.2	26.1	26.1	7
Spain	30.4	25.8	24.6	25.0	25.3	24.9	24.9	24.9	24.9	8
Germany, former West	19.4	21.0	22.1	23.0	24.6	23.6	23.6	23.8	24.0	
Germany	-	-	-	-	24.6	23.4	23.4	23.6	23.9	9
Netherlands	23.1	24.0	23.4	22.5	24.2	21.5	21.5	21.5	21.5	10
Finland	19.9	21.0	20.2	23.6	24.1	22.4	22.1	22.7	22.7	11
United States	16.3	18.6	19.4	20.4	21.2	20.3	20.9	21.2	22.1	12
Portugal	17.0	19.5	22.2	21.4	19.7	19.7	19.7	19.7	19.7	13
Australia	12.9	13.4	14.7	15.3	17.0	19.0	19.1	19.2	19.4	14
United Kingdom	12.4	18.0	15.1	15.1	14.2	18.0	17.7	17.7	18.5	15
Canada	8.9	10.5	12.4	13.9	17.2	15.6	16.5	16.6	17.6	16
Norway	17.6	19.6	19.4	19.1	16.9	17.3	17.3	17.3	17.3	17
Switzerland	15.2	15.7	16.1	16.1	17.2	17.2	17.2	17.1	17.0	18
Japan	10.0	11.4	12.6	13.5	14.7	16.5	16.7	17.0	17.0	19
Israel	15.5	15.5	15.5	15.5	15.5	14.8	15.2	15.5	16.0	20
Luxembourg	14.3	15.0	15.1	15.4	14.5	15.5	15.7	15.6	15.6	21
Taiwan	6.5	6.5	6.5	7.2	9.6	14.2	14.2	14.2	14.2	22
Ireland	11.0	12.2	15.5	15.2	14.6	13.9	13.9	13.1	13.0	23
Singapore	14.1	20.6	22.2	13.7	16.3	10.4	13.5	13.5	13.0	24
Mexico	9.5	9.8	10.8	10.9	12.0	10.9	11.2	10.9	10.8	25
Denmark	3.7	4.4	5.6	2.6	5.6	7.9	8.7	8.9	9.5	26
Hong Kong	3.2	3.2	3.7	4.3	5.0	5.2	8.5	8.5	8.5	27
New Zealand	5.9	5.9	5.9	5.9	6.0	5.2	4.8	4.6	4.5	28
Sri Lanka	9.4	9.4	14.3	14.3	14.3	14.3	14.3	14.3	-	
Greece	16.7	16.7	18.0	18.7	21.9	-	-	-	-	

자료: <표 1>과 동일.

IV. 결 론

우리나라의 노동비용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도 선진국 노동비용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일본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의 경쟁국들이나 멕시코 브라질 등의 신흥산업국, 그리고 유럽의 후발산업국(포르투갈, 그리스) 등에 비해서는 시간당 노동임금이 미국달러 기준으로 \$2-\$6 높다. 사실 노동비용의 수준은 산업구조와 직관되어 있으므로 상대적 비교로 어느 누가 더 유리하다고 하기 어려우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겪고 있는 노동비용의 가장 큰 문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급속하게 빨라진 노동비용의 상승 속도라고 확인된다.

2000~2002년 기간 동안 멕시코와 한국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가장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매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했을 때도 1980~84년 구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거나 월등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승률은 임금외노동비용에서 더욱 빠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현상이 통계수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임금외노동비용의 증가는 점차 안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의 추세를 따른다면 사회보장제도가 안정되면서 법정복리비의 상승 추세도 안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추후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노동비용 상승추세는 임금비용의 추세와 직결될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변화와 생산성 향상의 속도에 따라 노동비용이 높다 또는 낮다는 주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노동비용이 아직도 선진국의 수준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과의 경쟁을 위해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에 역점을 두다보면 임금의 상승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비용의 상승속도에 대한 조절이다. 급격한 사회적·경제적·산업구조적 변화와 노사관계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노동비용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감당할 정도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불가능하다면 결론은 노동비용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급선무로 등장한다. 또한 연공급을 중심으로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우 경기순환이 올 때마다 임금수준의 조절보다는 고용조정으로 이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발생하므로 고용안정의 확보를 위해서도 생산성과 임금을 연계하는 노동비용 체계의 개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결국 노동비용과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향후 과제는 노동생산성과 연관된 임금체계

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직무 분석과 투명한 평가시스템, 효과적인 성과급체계 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 조직률의 현황과 추세

김 정 우*

I. 머리말

2003년말을 기준으로 한국에는 6,257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노동조합 조합원수는 1,549,949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 임금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볼 때, 노동조합 조직률은 10.8%였다.¹⁾ 이는 2002년말과 같은 수준으로,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989년의 19.8%를 정점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8%의 조직률은 스웨덴, 독일과 같은 서구 복지국가보다 훨씬 낮을 뿐 아니라 영국(29.1%), 미국(12.9%), 일본(19.6%)과 같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지배적인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은 단지 조직률만 낮은 것이 아니라 기업별 노조에 입각한 노동조합 조직화 방식으로 인해 비정규직의 조직정도가 매우 낮고 협약적용률(coverage)의 확대에도 한계가 있어, 실제 노동조합 가입에 따른 혜택이 대규모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 조합원이라는 소수에게만 귀결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2003년말 기준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현황의 특징과 1987년 이래의 노조 조직률 추세를 살펴보고, 노조조직률 저하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yhk08@kli.re.kr).

1) 이때 노동조합 조직률은 노동부에 의해 매년 조사되는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조사」를 통해 전체 조합원의 수를 파악하고, 이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상의 임금근로자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인데, 이는 국제비교 등에 활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계산방법이다.

II. 노동조합 조직현황

2003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한국에는 6,257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조합원수는 1,549,949명으로 이중 남성이 78.9%인 1,223,330명, 여성이 21.1%인 326,619명으로 남성 조합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이 책의 주요통계 <표 28> 참조). 총연맹별로 보면 한국노총의 노동조합수와 조합원수는 각각 3,951개소, 831,660명으로 2002년말 수치인 4,063개소, 809,416명과 비교해보면, 조합수는 112개소 감소하였으나 조합원수는 22,244명 증가했다. 반면에 민주노총의 노동조합수와 조합원수는 각각 1,332개소, 673,880명으로 2002년말 수치인 1,529개소, 85,147명과 비교해보면, 조합수와 조합원수가 각각 197개

〈표 1〉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단위 : %)

연 도	조 직 률(A)			조직률(B)
	전 체	남 자	여 자	
1985	12.4	13.1	11.1	16.9
1986	12.3	13.2	10.5	16.8
1987. 6. 30	11.7	13.0	9.5	15.7
1987. 12. 31	13.8	15.3	11.1	18.5
1988	17.8	20.1	13.7	19.5
1989	18.6	21.8	13.4	19.8
1990	17.2	20.5	12.0	18.4
1991	15.4	18.5	10.4	17.2
1992	14.6	17.9	9.1	16.4
1993	14.0	17.2	8.7	15.6
1994	13.3	16.6	7.9	14.5
1995	12.5	15.7	7.3	13.8
1996	12.1	15.5	6.6	13.3
1997	11.1	14.7	5.5	12.2
1998	11.4	15.2	5.3	12.6
1999	11.7	15.4	6.1	11.9
2000	11.4	15.3	5.7	12.0
2001	11.5	15.7	5.4	12.0
2002	10.8	14.9	5.1	11.0
2003	10.8	14.5	5.5	11.0

주 : 조직률 A=조합원수÷임금근로자×100

조직률 B=1987년 이전은 조합원수÷(상시고-공무원-사립학교 교원)×100

1988년 이후는 조합원수÷(임금근로자-공무원-사립학교 교원)×100

1999년 이후는 조합원수÷(임금근로자-공무원(철도, 체신 등 기능직 공무원과 국공립교원은 제외)×100

조직률 B는 노동부 집계방식.

1991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의 시계열 조정에 따라 수치를 보정함.

자료 : 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각년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소, 11,26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²⁾

2003년말 기준 한국의 노동조합조직률은 국가부문 등 조직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문을 빼고 계산하는 노동부 집계방식에 따르면 11.0%이고(<표 1>의 조직률 B),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따르면 10.8%로 나타났다(<표 1>의 조직률 A).

〈표 2〉 조합원규모별 노동조합 조직현황

(단위: 개소, 명)

조합규모	노조수	조합원수		
		전 체	남 성	여 성
1~49인	2,995	55,969	44,586	11,383
50~99인	1,099	78,871	64,292	14,579
100~299인	1,393	231,695	195,069	36,626
300~499인	250	94,985	76,292	18,693
500~999인	195	133,337	106,367	26,970
1,000~4,999인	140	273,856	218,848	55,008
5,000인 이상	34	681,236	517,876	163,360
조합원수 무 또는 불명	151	0	0	0
전 체	6,257	1,549,949	1,223,330	326,619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3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분석』, 2004.

조합원규모별로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조합원수가 5,000명 이상인 대규모 노동조합에 속하는 조합의 개수는 34개로 전체 노동조합수 6,257개의 0.5%에 불과하나, 이들 대규모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의 수는 681,236명으로 전체 조합원수 1,549,949명의 44.0%에 달하고 있다. 조합원수 기준을 1,000명으로 잡으면, 조합원수가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의 수는 174개로 전체 노조수의 2.8%이나 조합원수가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의 수는 955,092명으로 전체 조합원수의 61.6%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의 다수는 대규모 기업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종사상 지위(고용형태)별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살펴보자. <표 3>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2003년 8월과 2004년 8월의 노동조합 가입률을 종사상 지위(고용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³⁾

2) 한편 민주노총에 따르면 2004년말 현재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의 수는 629,204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노동과 세계 320호 2005. 1. 6~1. 12).

3) 노동부에 의해 매년 시행되는 노동조합 조직현황 조사는 노동조합 필증이 교부된 전국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조사표를 배포, 수거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고용형태별 조직률 등을 계산해낼 수 없는 반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가구조사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고용형태별 조직현황의 파악이 가능하고 공무원노조 등 법외노조의 조합원이 분석에 포함되므로 노조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에 비해 조직률이 약간 상회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표 3〉 종사상 지위별 노조가입 현황

(단위 : 천명, %)

		무노조 사업체	유노조 사업체		
			가입대상 배제	자발적 미가입	노동조합원
2003년 8월	전 체	11,022 (77.9)	786 (5.6)	727 (5.1)	1,615 (11.4)
	상용근로자	4,526 (62.6)	511 (7.1)	661 (9.1)	1,538 (21.3)
	임시근로자	4,515 (92.7)	230 (4.7)	58 (1.2)	69 (1.4)
	일용근로자	1,981 (97.1)	44 (2.2)	8 (0.4)	8 (0.4)
2004년 8월	전 체	11,143 (76.4)	918 (6.3)	708 (4.9)	1,815 (12.4)
	상용근로자	4,730 (61.4)	1,126 (7.7)	1,212 (8.3)	3,286 (22.5)
	임시근로자	4,430 (92.0)	757 (5.2)	186 (1.3)	218 (1.5)
	일용근로자	1,983 (95.7)	516 (3.5)	48 (0.3)	58 (0.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원자료.

〈표 4〉 산업별 노조가입 현황

(단위 : 천명, %)

		무노조 사업체	유노조 사업체		
			가입대상 배제	자발적 미가입	조합원
2003년 8월	농림어업	134 (96.0)	2 (1.4)	1 (0.4)	3 (2.1)
	제조업	2,498 (72.0)	244 (7.0)	173 (5.0)	553 (16.0)
	건설업	1,228 (93.2)	23 (1.7)	21 (1.6)	45 (3.4)
	도소매업	1,593 (89.3)	74 (4.2)	47 (2.6)	71 (4.0)
	숙박 및 음식점	978 (96.0)	14 (1.4)	8 (0.8)	19 (1.8)
	운수업	225 (37.8)	55 (9.3)	54 (9.1)	260 (43.8)
	금융 및 보험업	334 (48.1)	106 (15.2)	55 (7.9)	200 (28.8)
	사업서비스업	1,035 (87.3)	51 (4.3)	46 (3.8)	53 (4.5)
	교육서비스업	724 (61.7)	91 (7.8)	237 (20.2)	121 (10.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66 (73.2)	36 (7.3)	36 (7.3)	61 (12.2)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504 (91.6)	10 (1.8)	4 (0.8)	32 (5.8)
	전체	11,022 (77.9)	786 (5.6)	727 (5.1)	1,615 (11.4)
2004년 8월	농림어업	137 (95.2)	3 (2.0)	1 (1.0)	3 (1.9)
	제조업	2,521 (70.1)	282 (7.8)	164 (4.6)	627 (17.4)
	건설업	1,192 (91.5)	47 (3.6)	19 (1.5)	44 (3.4)
	도소매업	1,612 (88.6)	87 (4.8)	54 (3.0)	67 (3.7)
	숙박 및 음식점	1,014 (95.5)	16 (1.5)	6 (0.6)	26 (2.5)
	운수업	263 (41.9)	56 (9.0)	43 (6.8)	265 (42.3)
	금융 및 보험업	325 (47.2)	111 (16.1)	47 (6.8)	205 (29.8)
	사업서비스업	1,103 (85.2)	58 (4.4)	61 (4.7)	74 (5.7)
	교육서비스업	734 (61.7)	93 (7.8)	209 (17.5)	154 (12.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94 (71.2)	43 (7.8)	33 (6.0)	84 (15.1)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551 (90.5)	13 (2.2)	13 (2.2)	31 (5.1)
	전체	11,143 (76.4)	918 (6.3)	708 (4.9)	1,815 (12.4)

주 : 주요산업만 기입하였으므로 각 항목의 합이 전체와 일치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원자료.

를 분석하여 계산한 노조가입률은 노동부에서 조사하여 계산한 노조조직률보다 1.0%p 이상 높았다.

전체근로자를 100으로 봤을 때 노동조합이 없는 무노조 사업체에 근무하는 비중은 2003년 8월과 2004년 8월에 각각 77.9%, 76.4%였고, 나머지 유노조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실제 조합원은 각각 11.4%, 12.4%이고 가입대상에서 배제되어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는 5.6%, 6.3%,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는 5.1%, 4.9%에 달했다.

즉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가입률은 2003년 8월에는 11.4%, 2004년 8월에는 12.4%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상용(정규직) 근로자의 노조가입률은 21%를 상회하는 반면 임시근로자의 노조가입률은 1.5%이하, 일용 근로자의 노조가입률은 0.4%에 불과해 정규직근로자들의 노조가입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산업별로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운수업의 노조가입률이 42.3%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버스 및 택시 등 운수업 근로자들의 노조조직화가 잘 되어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금융 및 보험업이 29.8%, 제조업이 17.4%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입비율을 보였다. 한편 사업서비스업,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의 노조가입률은 각각 5.7%, 5.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표 4> 참조).

이상의 노동조합 조직현황조사 및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결과를 통한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한국의 노동조합은 규모별로는 대규모기업,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산업별로는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III. 노동조합 조직률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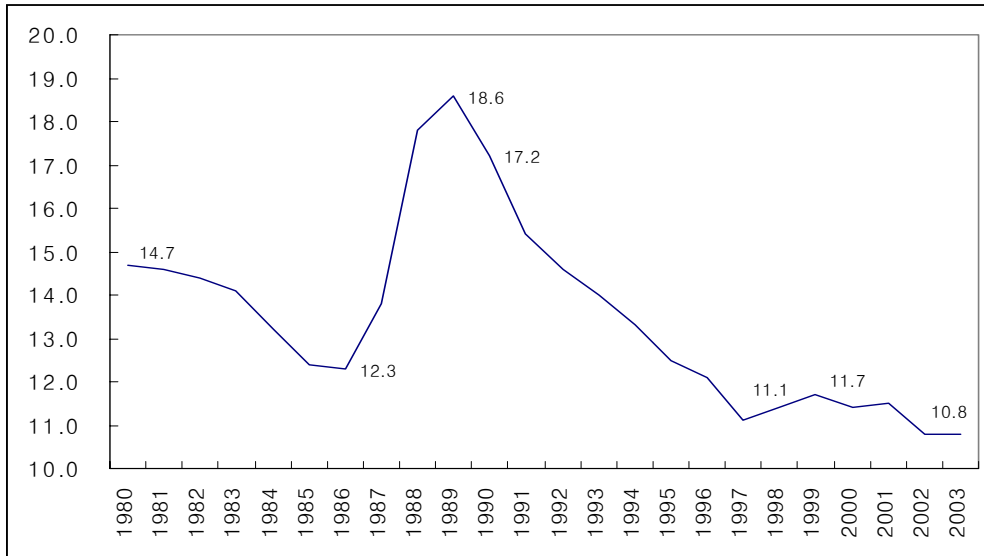
조직률 A를 중심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의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1980년의 14.7%에서 꾸준히 하락하여 1986년에는 12.3%까지 하락하다가 1987년 7월~9월까지의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후 1989년의 18.6%를 정점으로 1997년까지 꾸준히 하락하여 노조조직률은 11.1%까지 떨어졌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다소간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하락세가 지속되었고, 2002년과 2003년의 노조조직률은 10.8%를 기록해 1965년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

노조조직률의 하락의 원인은 노사관계를 둘러싼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 등의 변화가 노조조직률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경제구조변화설과 노동자를 조직하는 주체인 노동조합의 대응과 조직되는 대상인 미조직노동자의 의식변화, 노조조직화에 대한 경영자의 태도, 정부정책의 변화 등 노사관계 주체들의 구조와 의식적 행동의 결과가 조직률에 작용하고 있다는 노사관계주체설,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⁴⁾

한편 이러한 노조조직률의 하락에 대응하여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총연맹은 산별노

[그림 1] 노동조합 조직률의 추이(1980년~2003년)⁵⁾

(단위 : %)



주 : 조직률 = 조합원수 ÷ 임금근로자 × 100

자료 : 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각년도.

조로의 조직형식 전환,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등 다양한 수준의 조직확대 사업을 벌여나갔다. 그러나 기업별노조체제가 굳건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러한 총연맹 차원의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산별노조로 조직형식을 전환한 금속노조나 보건의료노조에서도 산별노조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미조직 사업장의 조합원 직가입이나 미조직 사업장의 조직화에는 아직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기업별노조라는 조직형태는 노조의 파편화, 소규모 노조로의 자생력 부재로 인한 노조유지 곤란, 재정적, 인적자원의 기업별노조 집중으로 인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사업 곤란 등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규모별 격차를 발생시켜 조직률의 제고를 어렵게 만든다.

[그림 2]와 <표 5>는 1999년에서 2003년까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합원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같은 기간동안 전체조합원수는 69,883명 늘어났는데, 이 중 민주노총은 109,106명 늘어난 반면 한국노총은 56,843명 줄어들어 양대노총간의 조합원수 격차는 1999년의 323,729명에서 2003년에는 157,780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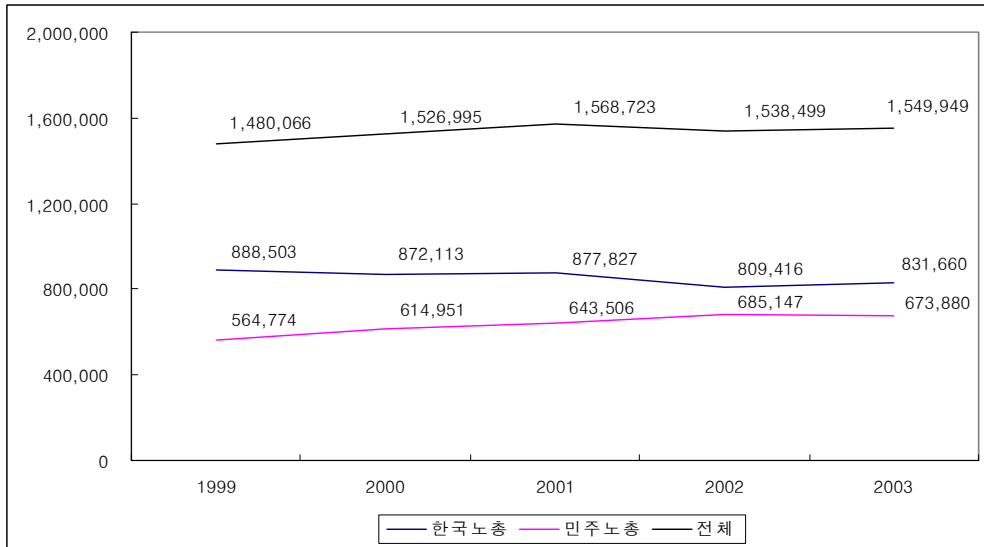
그러나 전체조합원수의 증가 자체가 미미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양노

4) 한국에서 노조조직률의 하락원인에 대한 실증연구로는 홍성우(1996), 이시균(2001), 윤진호(2002)의 연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세 연구결과 모두 탈제조업화, 비정규직의 증대 등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가 노조조직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보다 자세한 연도별 노조조직률은 이 책의 주요통계, <표 29>를 참조.

〔그림 2〕 총연맹별 노동조합원수 추이(1999~2003년)

(단위 : 명)



주 : 총연맹에 가입하지 않는 노동조합도 있으므로 양노총의 합이 전체와 일치하지는 않음.
 자료 : 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각년도.

총간 조합원수 격차의 감소는 신규조직화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기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변경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표 5>에서 2002년을 제외하면 한국노총의 조합원수가 줄어든 때마다 민주노총의 조합원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이런 추론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물론 총연맹의 자기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선명성을 부각함으로써 논리적, 도덕적 우위를 선점하고, 이를 통해 기존 노동조합을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신규 조직사업을 통해 새로운 노동조합 지원을 발굴 육성해내는 것이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을 막아내기 위한 더 효과적인 방안으로 작용할 것이다.

〈표 5〉 양대노총 조합원수 격차(1999~2003년)

(단위 : 명)

연 도	양대노총 조합원수 격차	전년대비 전체조합원수 증감	전년대비 한국노총조합원수 증감	전년대비 민주노총조합원수증감
1999	323,729	-	-	-
2000	257,162	46,929	-16,390	50,177
2001	234,321	41,728	5,714	28,555
2002	124,269	-30,224	-68,411	41,641
2003	157,780	11,450	22,244	-11,267

자료 : 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각년도.

낮은 조직률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표 6>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의 협약적용률은 노조조직률과 거의 차이가 없다. 반면에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협약의 적용범위가 실제 노조조직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 노조조직률은 한국과 큰 차이가 없지만 협약적용률이 90%에 달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교섭력이나 영향력은 한국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서구, 특히 유럽에서 노조조직률을 훨씬 상회하여 협약이 적용되는 것은 우선 노동조합의 조직방식과 교섭주체의 포괄범위가 산업 혹은 지역차원으로 되어 있고, 노사간에 맺어진 협약의 적용이 교섭당사자 이외의 동종업종 혹은 지역으로 확장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 포괄적용에 관한 협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하나의 공장 혹은 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공장 혹은 사업장 기타 직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지만, 교섭의 주체가 기업별노조이기 때문에 일반적 구속력이 실제 광범위하게 확장 적용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표 6> OECD 주요국가의 노조조직률과 협약적용률

(단위 : %)

	노조조직률			협약적용률		
	1980	1990	2000	1980	1990	2000
호 주	48	40	25	80+	80+	80+
프랑스	18	10	10	80+	90+	90+
독 일	35	31	25	80+	80+	68+
일 본	31	25	22	25+	20+	15+
한 국	15	17	11	15+	20+	10+
스웨덴	80	80	79	80+	80+	90+
영 국	51	39	31	70+	40+	30+
미 국	22	15	13	26	18	14

주 : 한국의 협약적용률은 교섭단위에 속한 노동자의 약 20%가 조합원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추정 한 값임.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p.145.

IV. 노동조합의 영향력 제고방안

－ 연대임금정책과 산별교섭의 확장 －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노동조합은 시장의 순조로운 작동에 의한 가격(임금) 및 수량(고용)결정을 왜곡시키

는 시장교란자로 이해되고, 노동조합에 의해 사회전체적 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Freeman과 Medoff(1984) 등 제도학파는 노조가 대변 및 견제(voice) 기능을 통해 이직률을 낮추고 기업 내 숙련을 보호하는 등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시키며, 근로조건 개선과 고충처리 등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등의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노동조합은 일차적으로 조직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추구하지만 이는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노동대중 전체의 임금과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자본과 노동간의 분배평등화에 기여하고 임금불평등을 개선함으로써 성별, 학력별, 산업별, 업종별 임금격차를 줄이고 노동내부의 분배 평등화에 기여한다는 주장이나 실증분석 결과도 존재한다(윤진호, 2004 ; 황덕순, 2004).

일단 노동조합이 조직내부의 그리고 사회전체의 불평등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할 때 노동조합의 조직률 하락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의 하락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사회적 불평등도를 높이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가져오게 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조직률을 상승시키기 위한 노동조합 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제조업, 남성,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조직화대상, 그리고 기업별 노조(혹은 기업별노조의 연합 형식을 띤 다소 왜곡된 형태의 산별연맹건설)라는 기존의 조직화방식으로는 더 이상 조직률의 제고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노동조합 내외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산별노조 건설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기업별노조로 조직되어있던 조직형식을 짧은 시기에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편으로는 산별노조로의 전환이라는 조직형식 변경과 더불어 산업구조의 변화, 고용구조의 변화에 조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업종, 여성, 비정규직 등 미조직부문에 대한 조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교섭의 집중화, 중소기업 및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격차 축소를 지향하는 연대임금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황덕순, 2004).

특히 산업별 교섭을 꾸준히 진행하여 산업별 교섭에 포함되는 노동조합의 규모를 확장하는 것은 협약적용률의 제고와 관련하여서도 여러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2003년과 2004년에 금속산업과 보건의료산업, 금융산업 등에서 산업별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등 보다 진전된 교섭의 내용을 확보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노조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산별노조로의 전환 등 다양한 조직확대 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연대임금정책을 강화하고 협약적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산별교섭의 포괄대상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현지, 『노동조합 조직규모의 변화와 조직확대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999.
- 김정환·정진호·김정우, 『2003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4.
- 윤진호,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와 조직화 문제」, 『산업노동연구』, 제8권 제2호, 2004.
- 이시균,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와 가입성향 결정요인」, 『매월노동동향』, 12월, 한국노동연구원, 2001.
- 한국노동연구원, 『2004 해외노동통계』, 2004.
- 홍성우, 「한국의 노조 조직률 하락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권 제2호, 1996.
- 황덕순, 「노동조합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와 연대임금정책」, 『매월노동동향』, 10월, 한국노동연구원, 2004.
- Freeman, R. B., Medoff, J. L., *What Do Unions Do?*, Basic Books, Inc. 1984.
-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자영업자의 근로소득 분석

최 효 미*

I.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경제활동인구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게다가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가장 심한 타격을 받으면서 이들의 소득수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들이 대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해서는 낮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편 자영업 부문의 과잉고용과 경쟁력 상실에 정부의 무분별한 창업지원 정책이 한 몫을 했다는 의견도 있다.²⁾ 따라서 현 시점에서 자영업자의 근로소득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노동시장 변화와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II. KLIPS에서의 자영업자의 정의와 측정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노동패널 1차~6차년도 조사 자료 중 농림어업 종사자를 제외한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chm@kli.re.kr).

1) 2002년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36.0%였으며, 일본 15.4%, 미국은 7.2% 등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 「최근 노동시장 동향과 2005년 전망」, 『노동리뷰』, 2005. 1월호 7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2) 1999년부터 정부는 1조 8,980억원을 들여 자영업 창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전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를 대상³⁾으로,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 변화와 근로소득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조사는 1998년에 1차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매년 1회 동일한 가구 및 개인들의 경제활동을 반복조사하고 있으며,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비임금근로자들에게도 매년 종사상 지위, 사업체 규모, 연간 매출액 등에 관한 정보를 측정하고 있다. 이 자료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자영업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로서, 자영업자 비중의 변화와 그들의 근로소득 수준을 살펴볼 때 가장 적절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비임금근로자란 종사상 지위가 고용주, 자영업자, 혹은 무급가족종사자인 자를 의미한다. 이때 고용주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하며, 자영업자는 프리랜서, 구멍가게 주인과 같이 자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종업원 없이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이고, 무급가족종사자는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하면서 돈을 받지 않고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⁴⁾ 본고는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도 특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임금근로자의 소득과 비교를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 특성을 살펴보았다.

III. 자영업 부문 종사자수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나타난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⁵⁾은 <표 1>에서 보듯이, 1998년에 17.1%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나,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이며 2003년에는 1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998년 68.3%이던 것이 2003년에는 72.3%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⁶⁾ 임금근로자가 증가하고,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3)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우, 임금근로 부문에 비해 비임금근로 부문 중 특히 자영업 부문에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우 저학력 고령자이면서 저소득층일 확률이 높으므로, 이들을 포함시킬 경우 임금근로자의 소득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자영업자의 소득만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과 관련된 분석에서는 농림어업 부문 종사자를 제외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4)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도우면서 18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파악된다.

5) 본 분석에서 사용하는 표본은 개인용과 신규용에 응답한 개인이 조사당시 주된 일자리라고 응답한 일자리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6)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 6차년도 자료까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가지고는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자영업자의 비중을 비교하여 관찰할 수 없다. 다만, 금재호 · 류재우 · 전병유 · 최강식(2002)의 연구에 따르면, 통계청의 경

〈표 1〉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노동패널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명, %)

〈노동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

	전 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1998	5,905 (100.0)	4,034 (68.3)	1,871 (31.7)	525 (8.9)	1,008 (17.1)	338 (5.7)
1999	5,654 (100.0)	3,949 (69.8)	1,705 (30.2)	491 (8.7)	856 (15.1)	358 (6.3)
2000	5,283 (100.0)	3,662 (69.3)	1,621 (30.7)	460 (8.7)	811 (15.4)	350 (6.6)
2001	5,293 (100.0)	3,773 (71.3)	1,520 (28.7)	446 (8.4)	749 (14.2)	325 (6.1)
2002	5,490 (100.0)	3,939 (71.8)	1,551 (28.2)	480 (8.8)	732 (13.3)	339 (6.2)
2003	5,749 (100.0)	4,156 (72.3)	1,593 (27.7)	506 (8.8)	764 (13.3)	323 (5.6)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전 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1998	17,330 (100.0)	11,856 (68.4)	5,474 (31.6)	1,363 (7.9)	2,974 (17.2)	1,138 (6.6)
1999	17,765 (100.0)	12,172 (68.5)	5,593 (31.5)	1,320 (7.4)	3,138 (17.7)	1,136 (6.4)
2000	18,650 (100.0)	12,859 (68.9)	5,792 (31.1)	1,425 (7.6)	3,194 (17.1)	1,173 (6.3)
2001	19,125 (100.0)	13,151 (68.8)	5,974 (31.2)	1,511 (7.9)	3,293 (17.2)	1,170 (6.1)
2002	19,771 (100.0)	13,654 (69.1)	6,117 (30.9)	1,576 (8.0)	3,390 (17.1)	1,151 (5.8)
2003	19,867 (100.0)	13,916 (70.0)	5,950 (30.0)	1,597 (8.0)	3,259 (16.4)	1,094 (5.5)

추세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됐다. 다만,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노동패널조사에 비해 종사상지위별 근로자 비중의 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패널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은 1998년에 17.1%이던 것이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며 2003년에는 13.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나타난 자영업자의 비중은 1998년에 17.2%로 노동패널과 유사한 비중을 보였으나,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가 2003년 들어서야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 추세는 자영업자의 상대적인 소득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위기 이후 임금근로 부문에서 탈락한 노동자들이 대거 자영업 시장에 들어왔다가, 지나친 경쟁과 사업의 실패 등으로 인해 저임금 근로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실제로 자영업자의 근로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환위기 직후 자영업자의 비중이 증가한 후, 해가 거듭될수록 차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V. 자영업자의 근로소득⁷⁾

<표 2>에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조사된 자영업자의 평균 명목소득과 실질소득(명목소득/소비자물가지수×100)을 제시하였다. 2003년에 전체 취업자의 명목 근로소득은 163만 1천원이었다. 또 자영업자의 명목 소득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25만 6천원이 높은 17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로자가 체감하는 임금수준인 실질소득으로는 1998년 전체 취업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123만 3천원이었으며, 1999년에 다소 감소하였다가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3년에는 147만3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임금근로자의 임금 추이에 서 동일하게 나타나, 1998년 114만 7천원이던 월평균 근로소득이 1999년 105만 5천원으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2000년부터 조금씩 늘어나 2003년에는 131만원3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영업자의 근로소득은 1998년에는 114만원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9년에는 115만 9천원, 2000년 116만 5천원, 2001년 137만8천원, 2002년 155만8천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 2003년에는 154만 5천원으로 다소 감소했다. 1998년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표 2〉 평균소득 변화 추이(비농 전산업)

(단위 : 만원, %)

	전 체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명목소득	실질소득	명목소득	실질소득	명목소득	실질소득
1998	119.6	123.3 (-)	110.6	114.0 (-)	111.3	114.7 (-)
1999	111.3	113.8 (-7.7)	113.3	115.9 (1.7)	103.1	105.5 (-8.0)
2000	119.7	119.7 (5.2)	116.5	116.5 (0.5)	109.0	109.0 (3.3)
2001	136.9	131.5 (9.9)	143.4	137.8 (18.3)	120.0	115.3 (5.8)
2002	150.7	141.0 (7.2)	166.5	155.8 (13.1)	131.0	122.5 (6.2)
2003	163.1	147.3 (4.5)	171.0	154.5 (-0.8)	145.4	131.3 (7.2)

주 : 1) 실질소득=명목소득/소비자물가지수×100(소비자물가지수 2000년=100)

2) 괄호 안은 전년대비 실질소득 상승률

7) 노동패널조사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임금은 얼마나 됩니까?’라고 질문하고 있으며, 비임금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일자리에서 얻은 소득은 월평균 얼마입니까?(비용제외)’라고 질문하고 있다. 해당 질문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제외하였으며,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적자의 액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득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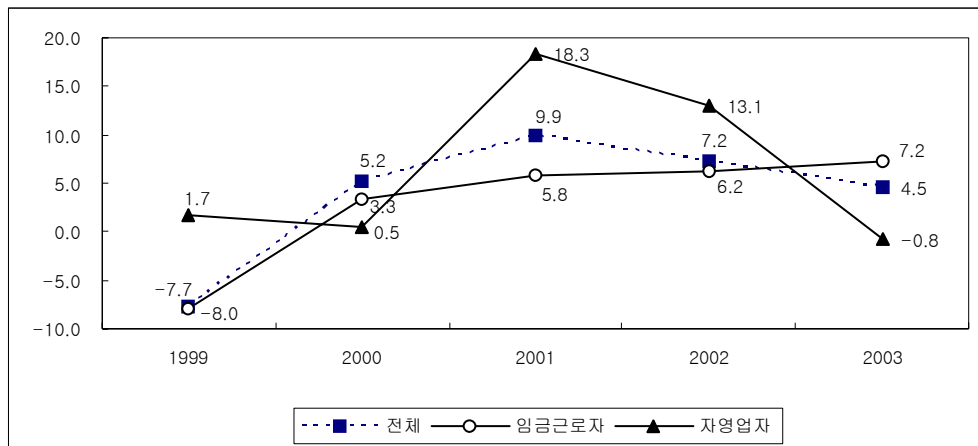
7천원이 적었던 자영업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1999년부터는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보다 오히려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3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실질근로소득의 전년대비 상승률에 있어서는 임금근로자인 경우 1998년에 비해 1999년에 실질소득이 8.0% 감소하였다가, 2000년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2003년에는 전년대비 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후 실질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2003년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즉 1999년에도 이들의 소득증가율은 임금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1.7% 상승하였고, 특히 2001년 실질소득상승률은 18.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금근로에 비해 서도 12.5%포인트나 더 높은 수치이다.

이에 따라 임금근로자의 실질근로소득이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으로 인해 1999년 크게 감소하였다가 이후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반해, 1998년에 낮은 수준이었던 자영업자의 소득은 큰 폭의 상승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그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실질근로소득 상승률

(단위 : %)



그러나 평균소득이 높다는 사실이 자영업자들 모두가 임금근로자들보다 소득이 높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약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이 임금근로자의 소득보다 높다는 것이 극소수의 초고소득자와 대다수의 극빈자에 의한 것이라면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훨씬 더 빈곤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의 평균적인 수준을 비교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소득의 분포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표 3>을 통해 대략적인 소득 분포⁸⁾를 살펴본 결과, ‘현재의 일자리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의 비중은 1998년에 20.6%에 달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3년에는 7.1%에 그쳤다.⁹⁾ 이와 같이 적자를 보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줄어든 원인은 적자에 시달리던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을 포기하고 적은 소득이라도 보장되는 임금근로 부문으로 이동을 했거나, 다행히도 적자상태를 벗어나긴 했으나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 명목 근로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자영업자의 비중은 1998년 33.8%였으나, 2003년에는 24.4%로 감소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근로소득으로 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저소득 자영업자의 비중이 41.2%로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00만원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의 비중 또한 점차 증가하여 2003년에는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 자영업자뿐 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의 비중 도 증가했으며, 이는 자영업부문 내에서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케한다.

<표 3> 구간별 자영업자의 소득분포 비중(비농 전산업)

(단위 : %)

	적자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1998	20.6 (20.6)	33.8 (33.8)	33.7 (33.7)	9.5 (9.5)	2.4 (2.4)
1999	16.1 (16.1)	36.4 (36.4)	36.3 (36.3)	8.7 (8.7)	2.6 (2.6)
2000	9.0 (9.0)	35.3 (35.3)	40.8 (40.8)	11.1 (11.1)	3.8 (3.8)
2001	10.5 (10.5)	31.7 (46.2)	35.4 (33.6)	16.7 (7.6)	5.7 (2.2)
2002	8.2 (8.2)	23.8 (38.5)	37.4 (36.2)	18.4 (11.6)	12.2 (5.5)
2003	7.1 (7.1)	24.4 (41.2)	35.8 (33.4)	20.6 (12.5)	12.1 (5.8)

주 : 1) 괄호 안은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구한 비중.

2) 실질소득=명목소득/소비자물가지수×100(소비자물가지수 2000년=100).

3) 소득이 0인 경우는 100만원 미만에 포함됨.

V. 분위별 평균 근로소득¹⁰⁾

소득분배에 관한 가장 간편하고 보편적인 방법은 소득수준별로 표본을 10등분하여

8) 본 분석에 사용된 자영업자의 표본수는 매해 700개 안팎으로 소득 구간을 이동하는 표본이 불과 몇 십개라 할지라도 그 비중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9)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비임금근로자가 현재 일자리를 통해 적자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을 뿐, 적자액 수 등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10) 이하에서 사용한 소득이라 함은 특별히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 근로소득을 의미한다.

〈표 4〉 분위별 평균소득

(단위: 만원, %)

	전 체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분위	306.4 (24.8)	279.4 (24.5)	299.5 (25.0)	375.3 (28.5)	392.8 (27.9)	404.7 (27.5)
2분위	194.3 (15.8)	177.9 (15.6)	185.0 (15.5)	196.0 (14.9)	214.0 (15.2)	228.9 (15.5)
3분위	155.7 (12.6)	145.9 (12.8)	150.0 (12.5)	156.7 (11.9)	176.2 (12.5)	180.4 (12.2)
4분위	130.8 (10.6)	119.1 (10.5)	127.7 (10.7)	135.6 (10.3)	142.5 (10.1)	150.7 (10.2)
5분위	107.2 (8.7)	102.2 (9.0)	105.1 (8.8)	111.8 (8.5)	123.5 (8.8)	132.0 (9.0)
6분위	99.8 (8.1)	91.2 (8.0)	96.3 (8.0)	96.1 (7.3)	101.1 (7.2)	109.7 (7.4)
7분위	82.9 (6.7)	76.9 (6.8)	80.1 (6.7)	84.1 (6.4)	90.3 (6.4)	90.9 (6.2)
8분위	67.9 (5.5)	64.2 (5.6)	67.3 (5.6)	71.4 (5.4)	73.5 (5.2)	77.9 (5.3)
9분위	54.6 (4.4)	51.5 (4.5)	54.4 (4.5)	55.5 (4.2)	60.2 (4.3)	61.5 (4.2)
10분위	33.9 (2.7)	29.9 (2.6)	31.4 (2.6)	33.2 (2.5)	36.2 (2.6)	37.0 (2.5)

주: 1) 적자라고 응답한 개인들은 제외하였으며, 소득이 0인 경우는 100만원 미만에 포함됨.

사용하는 10분위 소득지표이다. 이 방법은 우선 개인을 소득 순위별로 늘어놓은 다음, 순서대로 10등분하여 분위별 소득을 비교 관찰하는 방법이다. 이때 1분위란 소득수준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10분위란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상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를 최상위로, 하위 10%를 의미하는 10분위를 최하위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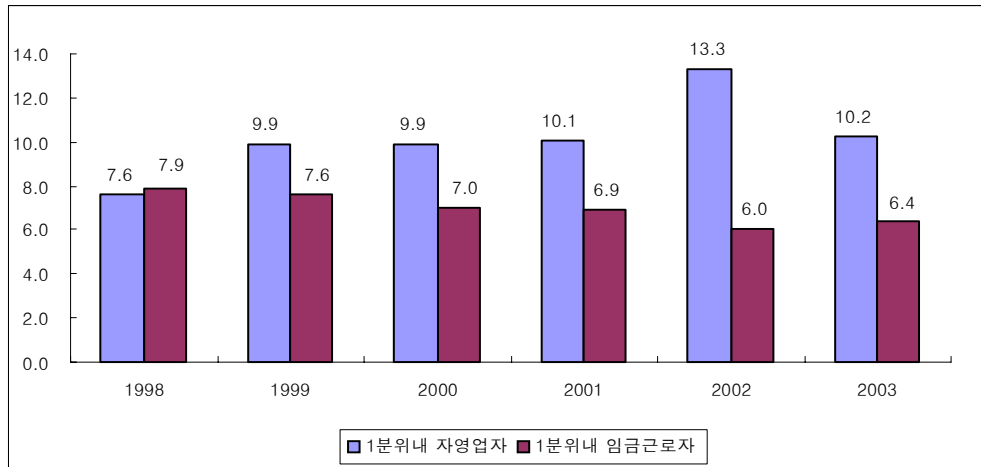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취업자 중 최상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평균소득은 1998년에 306만4천원이었고, 1999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그 후 계속 증가하여 2003년에는 404만7천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10분위에 속한 취업자들의 평균 근로소득은 1998년 33만9천원에서 2003년 37만원으로 단지 3만1천원이 증가했을 뿐이었다.

[그림 2]와 [그림 3]은 전체 근로자 평균소득 중에서 최상위와 최하위에 속해 있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비중을 보여준다. 전체 근로자 평균소득의 최상위에 속해 있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1998년 7.9%였으나, 그 비중은 해마다 감소하여 2003년에 이르면 6.4%에 불과했다.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이 비율이 1998년 7.6%에 지나지 않았으나,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 2003년에 조금 감소하여 10.2%를 차지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자영업자가 전체 근로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최상위에 속할 확률은 1998년을 제외하고는 임금근로자의 경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높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려준다.

하지만 전체 근로자 평균소득의 최하위에 속해 있는 자영업자의 비중 또한 2003년에 14.3%로, 임금근로자가 최하위에 속할 확률(10.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최상위뿐 아니라 최하위에도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자영업자의 소득이 보다 양극화 되어있음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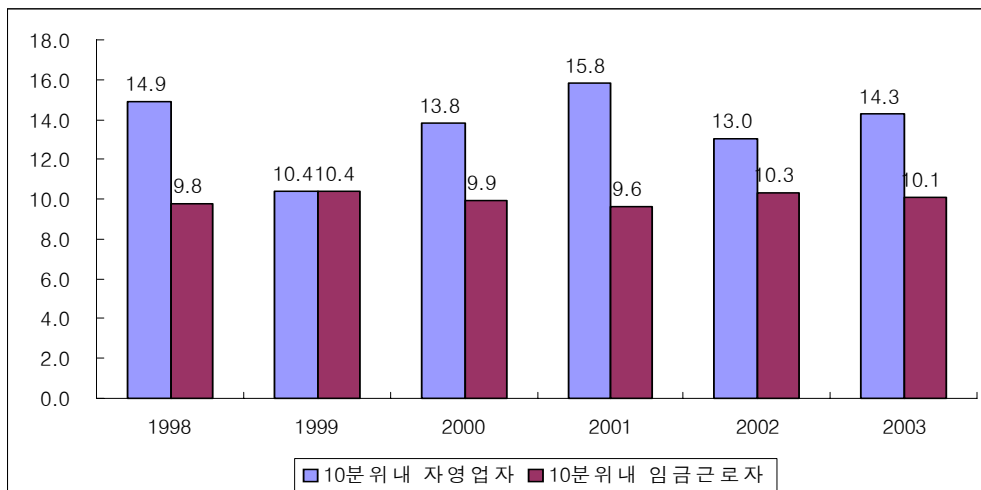
[그림 2] 최상위 분위내 임금근로자 : 자영업자의 비중

(단위 : %)



[그림 3] 최하위 분위내 임금근로자 : 자영업자의 비중

(단위 : %)



한편, 2003년에 분위별 근로소득을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최상위의 근로소득은 315만 4천원이었으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469만 6천원으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 참조) 그러나 최하위에 속한 자영업자의 근로소득은 임금근로자의 70.2% 수준에 불과한 26만 6천원이었다. 또한 1998년 최상위의 근로소득은 임금근로자가 258만 4천원, 자영업자가 265만 8천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그 격차가 점차 증가하여 2003년에 와서는 자영업자의 근로소득이 임금근로

〈표 5〉 종사상지위에 따른 분위별 평균소득(비농 전산업)

(단위 : 만원, %)

〈자영업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분위	265.8 (23.3)	301.2 (26.0)	271.2 (23.2)	424.0 (30.7)	452.4 (29.0)	469.6 (30.3)
2분위	188.4 (16.5)	177.8 (15.3)	190.3 (16.3)	194.6 (14.1)	243.7 (15.6)	239.7 (15.5)
3분위	153.7 (13.5)	152.2 (13.2)	150.0 (12.9)	177.5 (12.9)	187.1 (12.0)	180.8 (11.7)
4분위	118.3 (10.4)	118.3 (10.2)	134.0 (11.5)	144.1 (10.4)	164.2 (10.5)	165.4 (10.7)
5분위	103.1 (9.0)	102.2 (8.8)	100.7 (8.6)	123.1 (8.9)	140.3 (9.0)	135.5 (8.8)
6분위	99.9 (8.8)	97.2 (8.4)	100.0 (8.6)	96.1 (7.0)	113.8 (7.3)	107.0 (6.9)
7분위	78.7 (6.9)	77.4 (6.7)	83.7 (7.2)	87.8 (6.4)	93.5 (6.0)	90.3 (5.8)
8분위	61.0 (5.3)	60.3 (5.2)	68.3 (5.9)	65.1 (4.7)	83.0 (5.3)	79.7 (5.1)
9분위	47.4 (4.2)	48.1 (4.1)	47.8 (4.1)	46.9 (3.4)	55.8 (3.6)	53.2 (3.4)
10분위	23.9 (2.1)	23.6 (2.0)	20.9 (1.8)	20.8 (1.5)	27.0 (1.7)	26.6 (1.7)

〈임금근로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분위	258.4 (22.5)	241.8 (22.9)	243.7 (22.4)	268.3 (23.3)	289.7 (23.6)	315.4 (24.0)
2분위	179.4 (15.6)	163.8 (15.5)	166.2 (15.2)	179.1 (15.5)	190.2 (15.5)	201.5 (15.3)
3분위	148.0 (12.9)	134.5 (12.8)	141.3 (13.0)	144.0 (12.5)	152.9 (12.5)	169.2 (12.9)
4분위	124.7 (10.9)	112.1 (10.6)	119.2 (10.9)	123.2 (10.7)	133.6 (10.9)	140.1 (10.7)
5분위	104.7 (9.1)	100.3 (9.5)	101.0 (9.3)	104.1 (9.0)	112.9 (9.2)	123.1 (9.4)
6분위	95.5 (8.3)	85.5 (8.1)	89.3 (8.2)	93.9 (8.1)	95.2 (7.8)	102.9 (7.8)
7분위	79.7 (6.9)	74.0 (7.0)	76.5 (7.0)	80.2 (7.0)	83.9 (6.9)	88.8 (6.8)
8분위	66.8 (5.8)	61.9 (5.9)	65.4 (6.0)	69.8 (6.1)	71.0 (5.8)	74.3 (5.7)
9분위	54.7 (4.8)	50.7 (4.8)	54.2 (5.0)	55.7 (4.8)	59.2 (4.8)	59.8 (4.6)
10분위	35.4 (3.0)	29.9 (2.8)	33.3 (3.1)	35.1 (3.0)	37.0 (3.0)	37.9 (2.9)

주 : 1) 실질소득 = 명목소득/소비자물가지수*100(소비자물가지수 2000년=100).

2) 괄호 안은 전체소득 중 해당분위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3) 적자라고 응답한 개인들은 제외하였으며, 소득이 0인 경우는 100만원 미만에 포함됨.

자에 비해 154만2천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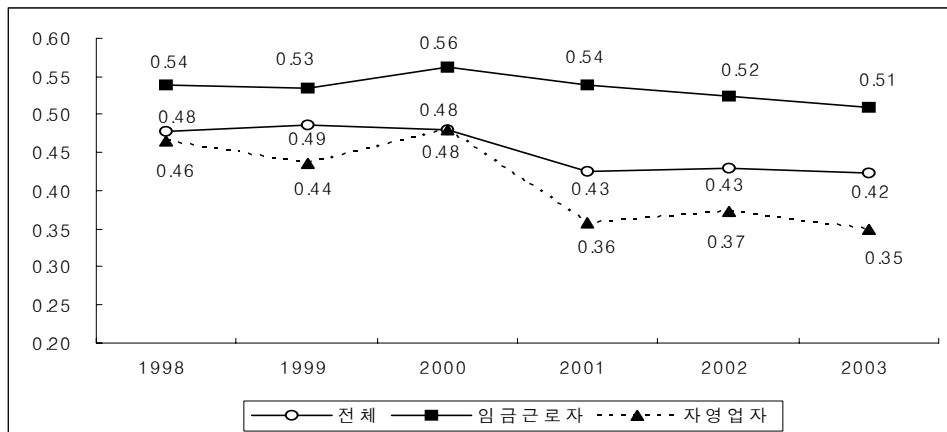
한편 2003년 최상위에 속한 자영업자들이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은 전체 자영업자 근로소득의 30.3%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임금근로자인 경우 최상위가 차지한 소득비중은 24.0%로 자영업자에 비해 6.3%포인트 가량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자영업자의 근로소득 편차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클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그림 4]에 제시된 10분위 분배율을 가지고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10분위 분배율이란 소득수준이 하위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을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으로,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이다. 따라서 10분위 분배율은 높을수록 소득격차가 적음을 의미하며, 소득격

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10분위 분배율의 값은 2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임금근로자의 10분위분배율은 1998년에 0.54, 1999년 0.53, 2000년 0.56으로 변동하며, 이후 다소 하락하여 2003년에 0.51의 값을 가진다. 즉 2000년 이후 소득분배가 다소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변동 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이에 반해 자영업자의 10분위 분배율은 1998년 0.46에서 2000년 0.48까지 증가하여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듯 했으나, 2001년 다시 0.36으로 감소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또 자영업자의 10분위 분배율은 전반적으로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70% 수준밖에 되지 않아 자영업 부문의 소득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종사상 지위별 십분위 분배율 추이



VI. 최상위 및 최하위 분위 자영업자의 특성

다음으로 소득 최상위와 최하위에 속하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우선 최상위에 속한 여성의 비중은 10%에 불과했으나, 최하위에서는 2/3가량인 66.2%가 여성이었다. 결국 남성 자영업자가 여성자영업자에 비해 보다 높은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최상위에 속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40~49세의 비중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최하위에 속한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이 39.4%로 가장 많았으며, 50~60세의 비중도 31%에 달했다. 이는 40대 자영업자의 경우 왕성한 사회활동을 기반으로 한 전문적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반해, 60대 자영업자들은 생계 혹은 소일거리로 자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6〉 최상위 및 최하위 자영업자의 특성(2003년)

(단위 : %)

		최상위	최하위
성 별	남성	90.0	33.8
	여성	10.0	66.2
연령별	15세 ~29세	1.4	4.2
	30세 ~39세	21.4	9.9
	40세 ~49세	48.6	15.5
	50세 ~59세	24.3	31.0
	60세 이상	4.3	39.4
교육정도별	고졸미만	17.1	66.2
	고졸	50.0	23.9
	전문대졸이하	12.9	5.6
	대졸	15.7	4.2
	대학원이상	4.3	0.0
산업별 ¹¹⁾	광공업	10.0	8.6
	건설업	8.6	0.0
	도소매음식숙박업	35.7	61.4
	운수통신업	10.0	1.4
	금융부동산업	14.3	5.7
	공공서비스업	21.4	22.9
일자리 지속기간별	12개월미만	8.6	11.3
	12개월이상 60개월 미만	52.9	28.2
	60개월 이상	38.6	60.6

이와 같은 특징은 교육수준별 특성에도 잘 반영되어 있는데, 자영업자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은 최상위에서는 20%에 달하였으나, 최하위의 경우엔 4.2%에 그쳤다. 그러나 최상위에 속한 자영업자의 절반 정도가 고등학교만을 졸업한 사람들로 자영업자의 학력수준이 소득수준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조건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의 일자리를 지속해 온 기간별로는 최하위에 속한 자영업자들이 최상위에 속한 자영업자에 비해 사업체를 오래도록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하위에 속한 자영업자가 연령이 높고 전문적 기술이 부족하여 사업체를 변경하는 것에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또 최상위에서는 1년~5년 정도 사업체를 운영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한 사업체를 오래도록 지속하는 것보다도 적절한 때에 사업

11)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2002)를 기준으로 하며, 금융부동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650~670) 혹은 부동산 및 임대업(700~713)인 경우를 의미한다. 공공서비스업은 정보처리·컴퓨터운용·연구개발·전문과학서비스·사업지원(720~750), 공공행정(760~765), 교육서비스(800~809), 보건사회복지(850~862), 오락문화운동(870~889), 기타공공·수리개인사업(900~939), 국제 및 외국기관(990)을 포함한다.

체를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높은 소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하여 산업별로는 분위에 상관없이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상위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은 도소매음식숙박업(35.7%) 뿐만 아니라, 금융부동산업(14.3%), 공공서비스업(21.4%) 등 비교적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도 높는데 반해, 최하위에 속한 사람들은 도소매음식숙박업(61.4%)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II.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자영업자의 근로소득의 특징을 임금근로자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에는 자영업자의 평균 근로소득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조금 낮았으나, 1999년부터는 오히려 자영업자의 평균근로소득이 임금근로자의 소득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2001~2002년 사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이다가 2003년 들어서는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의 비중은 1998년에 20.6%에 달했으나, 이후 크게 감소하면서 2003년에는 7.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기간 중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자영업자의 비중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월평균 실질근로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의 비중은 1998년 33.8%에서, 2003년에는 41.2%로 크게 증가해 저소득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전체 근로자 평균소득의 최상위에는 임금근로자(2003년 6.4%)보다 자영업자(2003년 10.2%)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하위층에서도 자영업자(2003년 14.3%)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자영업자의 소득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양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각 종사상 지위별로 소득을 순위에 따라 10등분하여 분석해 본 결과, 자영업 부분의 소득격차가 임금근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에 속한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003년 469만6천원(자영업자 전체 소득 중 30.3%)으로 최상위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 315만4천원(임금근로자 전체 소득 중 24.0%)에 비해 154만2천원이나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이러한 소득 양극화 현상은 최상위에 속한 자영업자는 40대 남성이면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해, 최하위에 속한 자영업자는 60세 이상의 고령자이

거나 여성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영업자의 근로소득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는 단순히 평균소득만으로 그들의 소득이 여전히 낮다거나, 반대로 낮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즉 이들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자영업자들의 양극화된 소득분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후, 관련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아가 향후 자영업 지원정책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여성 자영업자 혹은 고령 자영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조업의 해외 진출과 인사노무관리

조 성 재*

세계적으로 투자 및 무역의 자유화 정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해외 진출 역시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 발전 및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외 진출은 어떤 요인에 의하여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향후 해외 진출은 어느 정도나 확대될 것인가, 이러한 해외진출은 국내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인사노무관리 등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등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대두된다. 이러한 목적에 입각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2002년 이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체패널 조사에서 2004년(3차년도)에 해외진출 관련 항목을 포함시켰다(설문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본고에서는 조사결과 중 해외진출의 기본 현황과 인사노무관리와의 연관성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사업체패널 3차년도 조사 결과 중 해외진출에 대한 응답이 포함되어 있는 인사담당자 설문 결과를 주로 이용하였는데, 이에 응답한 사업체는 모두 2,004개이다. 그런데, ‘해외진출’에 관한 설문은 사업체 기준이 아니라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동일 회사의 여러 사업체가 표본에 들어 있는 경우에 응답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회사에 대해 하나의 사업체 자료만 남겨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험DB에서 본사 관리번호를 비교하여 동일한 본사 고용보험 관리번호를 가진 사업체는 한 회사의 사업체로 파악하고 이들 가운데 하나의 사업체 자료만 남겨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본사, 지사 여부를 보고 본사 자료를 선정하였으며, 동일하게 지사인 경우 사업체패널조사의 해당사업체 상시근로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체를 선정하였다. 본사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결측인 사업체 23개를 제외하고 이상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1,875개이며, 이 가운데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체는 754개이다. 한편 같은 기준에 따라 노조 유무는 사업체기준이 아닌 전사기준을 채택하였으며, 기업 규모 역시 회사 전체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중공업과 경공업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chosj@kli.re.kr).

표준산업분류 2자리를 기준으로 15, 16, 17, 18, 19, 20, 21, 22, 36을 경공업으로, 나머지 제조업을 중공업으로 분류하였다.

I. 해외진출 현황과 사유

우리나라 제조업은 2004년 현재 어느 정도나 해외에 진출해 있을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3차년도 조사에서는 단순한 수출입 영업망 확대나 기술 연락 사무소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주력사업의 진출 여부를 물어보았다. 응답은 ‘검토한 적이 없다’, ‘검토했으나 타당성이 없어 포기했다’, ‘현재 추진중이다’, ‘이미 수행하고 있다’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 1>은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비제조업을 포함하여 1,875개 기업 중 14.1%의 기업이 추진 중이며, 12.2%의 기업이 이미 해외 사업을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조차 안 해 본 기업이 66.5%로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등 아직은 해외 진출 기업은 1/8 수준, 그리고 검토 중인 기업을 포함하면 약 1/4 정도의 기업이 해외진출에 적극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기업규모별로는 고용 및 생산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의 진출 성향이 39%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8.8%만이 해외에 진출한 데 비하여 300인 이상 대기업은 19.8%나 이미 해외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으로 해외진출을 검토하지 않는 기업의 비중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¹⁾

<표 1> 기업규모별 해외진출 전략 여부

	빈 도					비 율			
	300-	300+	미분류	전 체		300-	300+	미분류	전 체
검토안함	927	305	14	1,246	검토안함	71.9	53.9	70.0	66.5
검토후포기	72	31	1	104	검토후포기	5.6	5.5	5.0	5.5
추진중	155	108	1	264	추진중	12.0	19.1	5.0	14.1
수행중	113	112	3	228	수행중	8.8	19.8	15.0	12.2
무응답	22	10	1	33	무응답	1.7	1.8	5.0	1.8
전 체	1,289	566	20	1,875	총 합계	100.0	100.0	100.0	100.0

1) 본고에서는 임의적으로 종업원수 300인 이상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지만, 이는 편의상 필요에 따른 것일 뿐 업종과 자본금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계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는 자본금 규모를 예외로 하면 대체로 300인을 기준으로 대-중소기업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를 채택하였다.

위 내용을 산업별로 나누어 살펴본 <표 2>에 따르면 비제조업은 검토조차 안 한 비중이 78%에 이르고 있는 반면 제조업은 그 비중이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40% 이상의 기업이 해외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제조업의 해외 진출 성향이 높은 데 비하여 비제조업의 경우는 내수 의존적인 사업구조, 서비스 발생의 공간적 제약(비이동성 혹은 비교역재) 등의 특성이 반영되어 해외 진출 성향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제조업 중에서도 중공업의 진출 성향이 경공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완구, 신발, 의류 등 전통적으로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었던 경공업의 해외 진출이 마무리 단계에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하지는 않지만, 표준산업분류 2자리(2digit) 기준으로 해외 진출 성향을 살펴본 결과 전자,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산업이거나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의 해외진출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편으로는 주력산업의 공동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 하에서 설명하듯이 높은 국제경쟁력으로 인한 해외 시장 개척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대산업별 해외진출 현황

		경공업	중공업	제조업	비제조업	전 체
빈 도	검토안함	143	229	372	874	1,246
	검토후포기	22	36	58	46	104
	추진중	43	105	148	116	264
	수행중	42	122	164	64	228
	무응답	4	8	12	21	33
	전 체	254	500	754	1,121	1,875
비 율	검토안함	56.3	45.8	49.3	78.0	66.5
	검토후포기	8.7	7.2	7.7	4.1	5.5
	추진중	16.9	21.0	19.6	10.3	14.1
	수행중	16.5	24.4	21.8	5.7	12.2
	무응답	1.6	1.6	1.6	1.9	1.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렇다면 해외에 진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응답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질문의 3번 ‘추진중’과 4번 ‘수행중’이라고 응답한 업체만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복수응답 결과를 전체로 두고 정리한 <표 3>에 따르면 약 30% 정도가 노동문제로 인해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인건비 요인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인력난이 7.6%를 차지하였으며, 직접적으로 노사관계가 영향을 미친 경우는 100건중 2건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 요인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시

장 개척을 위한 것으로서 40%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좋은 해외여건을 찾아서 진출한 경우가 11.7%에 이르며, 선진기술 흡수 등까지 포함하면 국내의 사업여건이 나빠서 해외로 탈출하는 경우(push 요인)보다는 해외의 시장이나 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유인 요소(pull 요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점에서 경제 전체적으로는 해외 진출 자체의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²⁾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보면 예상대로 중소기업일수록 높은 인건비와 인력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의 경우가 비제조업보다 노동요인에 따라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리 사회 일각의 우려가 일정한 근거를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대기업과 비제조업의 경우는 해외의 시장개척을 위한 요인과 선진 기술 흡수를 위한 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경우와 ‘수행 중’인 경우로 나누어보면 대체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추진 중인 경우가 시장개척의 의도가 보다 강하고, 수행 중인 경우는 인력난과 좋은 해외여건, 국내 역수입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중을 나타냈다. 이는 기존에는 인건비 등에 의한 밀어내기(push) 요인이 상대적으로 강했으나, 점차 해외에서의 기회 선취 의도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3〉 해외진출 이유(복수응답을 전체로 할 때)

	전 체			300-	300+	제조업	비제조업
	추진중	수행중	계				
인건비높아	20.6	21.1	20.8	22.7	18.3	25.2	11.4
노사관계	1.8	1.4	1.6	1.4	1.9	2.3	0.0
인력난	6.3	8.9	7.6	9.5	4.9	9.3	3.7
나쁜국내여건	6.0	6.1	6.1	6.2	6.0	7.0	4.0
시장개척위해	45.2	37.6	41.5	37.4	46.9	34.7	56.4
좋은해외여건	10.7	12.7	11.7	12.9	10.1	11.7	11.7
선진기술흡수	4.9	5.6	5.3	4.2	6.8	4.0	8.1
국내역수입	3.4	4.5	3.9	4.2	3.3	4.2	3.3
기타	1.1	2.1	1.6	1.4	1.9	1.7	1.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참고로 <표 4>는 <표 3>과 달리 복수응답을 전체로 두지 않고 하나라도 응답한 업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시장

2) 국내로 역수입하기 위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는 해외의 풀 요인과 국내의 푸쉬 요인이 복합되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 비중은 3.9%로 높지 않아 전체적인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개척을 위해 해외에 진출한다는 응답이 74.5%에 이르러 해외의 기회 요인이 없이는 단순히 국내 사업여건이 나쁘다고 하여 국외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건비가 높아서 나간다는 응답도 37.5%에 이르는 등 노동관련 요인이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절반에 이르는 기업이 인건비가 높아서 나간다고 응답하여 일자리를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국내 임금수준과 생산성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복응답률은 1.8 정도로 나타나 대체로 2개 이내의 주요 요인이 해외진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4〉 해외진출 이유(하나로도 응답한 업체를 기준으로 볼 때)

	전 체	중소기업	대기업	제조업	비제조업
인건비높아	37.45	42.48	31.02	49.19	17.32
노사관계	2.88	2.63	3.24	4.56	0.00
인력난	13.58	17.67	8.33	18.24	5.59
나쁜국내여건	10.91	11.65	10.19	13.68	6.15
시장개척위해	74.49	69.92	79.63	67.75	86.03
좋은해외여건	20.99	24.06	17.13	22.80	17.88
선진기술흡수	9.47	7.89	11.57	7.82	12.29
국내역수입	7.00	7.89	5.56	8.14	5.03
기타	2.88	2.63	3.24	3.26	2.23
전체(중복응답률)	179.6	186.8	167.0	195.4	152.5

한편 <표 5>에 의하면 제조업의 경우는 ‘추진 중’과 ‘수행 중’의 응답 비중 차이가 크지 않은 데 비하여 비제조업의 경우는 둘 사이의 차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비제조업의 경우 최근, 그리고 향후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해외 시장을 개척하거나 선진기술을 흡수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다는 점이다. 이는 해외 유인 요소(pull 요인)에 의한 국제화가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갈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표 6>에서 제조업 대분류별로 해외 진출 요인을 살펴보면 중공업보다는 경공업에서 노동요인에 따른 진출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섬유·의류, 신발, 완구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고인건비로 인하여 한계상황에 처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하여 동남아 등으로 진출해온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결과이다. 반면 중공업의 경우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진출이 37%로 가장 높고, 선진 기술 흡수를 위한 진출도 상대적으로 높아 아직은 경쟁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며, 해외 진출은 긍정적인 효과가 더 강할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중공업의 경우에도 인건비가 높아서 진출한다는 응답이

〈표 5〉 산업별, 진출단계별 해외진출 이유(복수응답)

	제조업			비제조업		
	추진중	수행중	계	추진중	수행중	전 체
인건비높아	27.3	23.3	25.2	9.1	14.8	11.4
노사관계	2.8	1.9	2.3	0.0	0.0	0.0
인력난	8.5	10.1	9.3	2.4	5.6	3.7
나쁜국내여건	7.4	6.6	7.0	3.6	4.6	4.0
시장개척위해	35.1	34.3	34.7	62.4	47.2	56.4
좋은해외여건	11.0	12.3	11.7	10.3	13.9	11.7
선진기술흡수	2.1	5.7	4.0	9.7	5.6	8.1
국내역수입	4.3	4.1	4.2	1.8	5.6	3.3
기타	1.4	1.9	1.7	0.6	2.8	1.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 제조업 대분류별 해외진출 요인

	빈 도			비 율		
	경공업	중공업	제조업	경공업	중공업	제조업
인건비높아	47	104	151	27.6	24.2	25.2
노사관계	5	9	14	2.9	2.1	2.3
인력난	22	34	56	12.9	7.9	9.3
나쁜국내여건	12	30	42	7.1	7.0	7.0
시장개척위해	49	159	208	28.8	37.0	34.7
좋은해외여건	22	48	70	12.9	11.2	11.7
선진기술흡수	4	20	24	2.4	4.7	4.0
국내역수입	7	18	25	4.1	4.2	4.2
기타	2	8	10	1.2	1.9	1.7
전 체	170	430	600	100.0	100.0	100.0

두 번째로 높은 24.2%에 달하여 역시 국내의 임금수준에 대한 노사정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I. 인사노무관리와 해외진출

제조 기업들의 인사관리 시스템은 해외진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하에서는 해외진출 업체들의 진출 요인을 노동요인(인건비, 노사관계, 인력난)과 여타 요인(주로 해외의 유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인사관리의 특성에 따라 해외진출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7>에서 경영전략과 인사관리의 정합성의 정도가 해외진출과 어떻게 결부되는가를 알아보았다. ‘사업장의 전략적 미션(목표)을 전 직원이 잘 이해하고 있다’, ‘경영진은 인적자원을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보고 있다’, ‘인사관리를 사업전략에 맞추려고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타 부서원들은 인사부서를 변화 주도자이자 사업 파트너로 본다’, ‘인사관리는 사업전략 목표의 달성을 잘 지원하고 있다’의 다섯 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노동요인으로 진출하는 업체들의 경우 인사관리와 경영전략과의 정합도가 여타요인으로 진출하는 경우보다 체계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그 수치가 제조업 전체와 거의 비슷하거나 ‘전직원이 전략목표 이해’에서는 낮게 나타나 노동요인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업체들에서 전략적 인사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여타요인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인사관리와 경영전략과의 정합도가 높아 시장 개척 등 외부의 유인 요인에 따라 해외에 진출하는 업체들의 경우 인사 시스템도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7〉 전략적 인사관리 여부에 따른 해외진출 성향(5점 척도)

	제조업 전체	해외진출제조업 전체	노동요인으로 해외진출	여타요인으로 해외진출
전직원이 전략목표 이해	3.23	3.24	3.15	3.34
경영진이 인적자원가치인정	3.45	3.51	3.47	3.57
인사관리를 사업전략에 맞춤	3.39	3.45	3.41	3.50
타부서원이 인사부서 고평가	3.06	3.13	3.04	3.23
인사관리가 사업전략목표지원	3.32	3.39	3.35	3.42

주: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전적으로 그렇다’까지 설문한 결과임.

다음으로 비정규직 비율과 해외진출과의 관련성을 보면 해외에 진출하는 업체들의 전체 비정규직 비율이 제조업 평균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산직으로 한정해서 보면 거꾸로 해외진출 제조업체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서 일관된 해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다만 노동요인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업체들의 경우는 여타 요인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업체들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두 가지 기준으로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떤 이유에서건 비정규직 활용에 애로나 제약이 있는 업체들일수록 인건비가 높거나 인력난을 겪게 되어 해외진출로 돌파하려는 전략이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³⁾

3)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인데, 예를 들어 여타 요인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업체들은 대기

〈표 8〉 비정규직 비율과 해외진출

	제조업 전체	해외진출제조업전체	노동요인해외진출	여타요인해외진출
전체 비정규직 비율	5.66	5.28	5.11	5.47
생산직 비정규직 비율	9.14	9.57	9.24	9.94

이번에는 해외진출 여부와 요인에 따라 비정규직 활용이 변화하는 양상을 분석해보았다.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대체로 해외진출 제조업은 비정규직 채용을 시작하거나 유사하거나 늘리는 비중이 높아, 생산량의 국내외 배분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활용을 더욱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앞서 <표 8>과는 달리 노동요인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업체들의 경우가 더욱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흥미로운 것은 여타 요인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업체들의 경우 제조업 전체와 비교했을 때 사용한 적 없음의 비율은 낮으나 비중이 유사하거나 줄여온 업체들의 비율이 높아서 비정규직 활용에서 타 업체들보다 제한적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와 <표 8>을 비교해보면 노동요인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업체들의 경우는 비정규직 비율이 낮았으나 최근 해외진출 등과 관련하여 그 비율을 늘려오고 있으며, 반대로 여타 요인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업체들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원래 높았으나 그것이 한계에 도달하거나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활용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풀이된다.

〈표 9〉 해외진출 여부에 따른 비정규직 활용도의 변화

	제조업 전체	해외진출 제조업전체	노동요인 해외진출	여타요인 해외진출
사용한적 없음	40.1	32.4	32.3	32.5
비중줄여옴	15.8	16.7	14.3	19.2
비중유사	33.4	38.1	37.9	38.4
채용시작	4.5	5.8	7.5	4.0
비중늘림	5.8	7.1	8.1	6.0
무응답	0.4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다음으로는 인력난으로 인하여 해외에 진출한다고 응답한 업체와 그 밖의 요인으로

업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노동 요인으로 진출하는 업체들은 중소기업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면, 중소기업에서는 임금수준이 낮아 굳이 비정규직을 활용할 유인이 없고 따라서 비정규직 비율이 낮게 도출될 것이다.

진출하는 업체들의 인력난에 대한 응답을 비교해보았다. <표 10>과 같이 인력난으로 진출하는 업체들의 인력난 정도가 더 큰 것이 확인된다. 특히 기능인력과 노무인력의 인력난 정도가 심하며, 기술인력의 경우에도 중간값인 2.5를 넘어서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여타요인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업체들의 경우 기능인력과 노무인력의 인력난 정도가 제조업 전체보다도 낮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여타 요인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업체들의 경우는 경쟁력이 있어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 10〉 지난 3년간 인력부족 경험(4점 척도)과 해외진출

	제조업 전체	해외진출제조업전체	인력난요인 해외진출	여타요인해외진출
관리인력	1.95	2.02	2.27	1.96
기술인력	2.29	2.32	2.55	2.27
사무인력	2.02	2.09	2.26	2.05
영업인력	2.18	2.21	2.36	2.17
기능인력	2.50	2.51	2.88	2.41
노무인력	2.31	2.34	2.61	2.25

주: 1 - 전혀 없음, 2 - 없는 편, 3 - 있는 편, 4 - 매우 많음.

각 기업이 보유한 인적자원의 특성은 해외진출과 어떤 상관성을 나타내는가에 대해 알아본 결과가 <표 11>이다. 제조업 전체 평균과 해외진출 제조업 평균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노동요인에 의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업체들의 경우가 여성비율과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고, 반면 평균근속은 짧고 이직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요인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업체는 노동집약적 산업이거나 인건비로 인하여 한계에 처한 기업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결과이다. 여기서도 여타 요인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업체들은 제조업 평균보다 낮은 이직률과 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 비율, 그리고 긴 평균근속년수 등을 나타내 보다 안정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11〉 인적특성과 해외진출

	제조업 전체	해외진출 제조업전체	노동요인 해외진출	여타요인 해외진출
여성비율	26.8	25.9	31.2	20.2
외국인근로자	3.6	4.8	6.7	2.7
평균연령	36.7	36.2	36.4	36.0
평균근속	6.9	7.2	6.5	8.0
월이직률	2.1	2.1	2.6	1.6

그렇다면 교육훈련과 해외진출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표 12>는 교육훈련의 실시 여부에 대하여 우선 알아본 것인데, 해외진출 업체들의 경우 교육훈련 실시 정도가 높으며, 특히 노동요인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업체들의 경우도 제조업 평균보다 높은 실시 비율을 나타낸 점이 다른 표들에서 본 것과 구별되는 점이다.

〈표 12〉 교육훈련 실시 여부와 해외진출

	제조업 전체	해외진출 제조업전체	노동요인 해외진출	여타요인 해외진출
실시	74.1	82.4	80.7	84.1
미실시	25.3	17.0	18.6	15.2
무응답	0.5	0.6	0.6	0.7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훈련의 내용을 훈련받은 근로자의 비중과 동종업체 대비 교육훈련 투자 정도, 그리고 다기능 교육 실시 여부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노동요인으로 해외에 진출한 업체들의 경우는 훈련받은 근로자 비중이 제조업 평균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타 요인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업체들의 경우는 훈련받은 근로자 비중이나 교육훈련 투자 정도, 그리고 다기능화 교육 실시 여부가 제조업 평균보다 높아서 역시 경쟁력 있는 우수한 업체들의 진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13〉 교육훈련과 해외진출

	제조업 전체	해외진출제조업전체	노동요인해외진출	여타요인해외진출
훈련받은 근로자비중(%)	46.1	46.4	39.4	53.6
동종업체 대비 교육훈련 투자정도(5점 척도)	2.82	2.92	2.84	3.01
다기능 훈련 실시 여부(%)	18.4	23.7	19.9	27.8

주: 1) 중복 훈련받은 근로자도 1인으로 계산.

2) 투자정도 측정은 1-매우 낮음, 2-낮음, 3-유사, 4-높음, 5-매우 높음.

3) 다기능훈련 실시 여부는 '예'로 응답한 업체의 비중.

다음으로는 인건비로 인한 해외진출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하여 관리자급, 일반사원, 대졸초임연봉으로 나누어 <표 14>를 작성해보았다. 인건비 요인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업체들의 임금 수준이 제조업 평균보다 각 부문에서 모두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인건비 이외 요인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업체들의 경우가 인건비 요인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업체들보다 각 부문에서 임금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역시 경쟁력 있

고 임금 지불능력이 높은 업체들이 시장 개척 등을 위해 해외에 진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한계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기업의 해외 진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표 14〉 해외진출과 인건비 수준

(단위 : 원)

	제조업 전체	해외진출 제조업전체	인건비요인 해외진출	여타요인 해외진출
관리자급	35,079.4	36,926.6	36,296.7	37,507.2
일반사원	22,705.4	23,950.1	23,152.1	24,680.8
초임연봉	19,141.2	20,160.1	19,507.8	20,745.0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는 동종업계 대비 임금수준과 인건비 부담 정도에 대한 응답을 정리해보았다. 그 결과 <표 15>와 같이 해외에 진출하는 업체들은 진출 요인과 무관하게 제조업 전체보다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 인건비 요인으로 진출하는 업체들은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나, 여타 요인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경쟁력과 지불능력의 차이에 의하여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5〉 동종업계 대비 임금수준과 인건비 부담 정도(5점 척도)

	제조업 전체	해외진출 제조업전체	인건비요인 해외진출	여타요인해외진출
임금수준 동종비교	2.87	3.00	3.03	2.97
인건비 부담	2.52	2.57	2.43	2.70

주 : 1) 동종비교 임금수준은 1 매우 낮음에서 5 매우 높음까지 응답

2) 인건비 부담은 1 '매우 부담스럽다'에서 5 '전혀 부담 없다'까지 응답

이상의 내용은 노동력 이용의 양적 지표와 관련된 항목들과 해외진출의 상관성을 알아본 것인데, 이제 노동력 이용의 질적 내용이 해외진출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자. <표 16>은 작업조직의 특성 중 제안활동 및 소집단 활동 정도, 그리고 직무순환과 더불어 보전 및 품질 등에서 간접업무 통합 정도를 설문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해외진출 제조업체들에서 작업조직의 고도화 정도가 모든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노동요인으로 진출하는 업체들의 경우는 제안건수나 제안 채택률, 그리고 직무순환의 정도가 높은 반면, 여타요인으로 진출하는 업체들의 경우는 소집단활동 참가율이나 보전이나 품질 등 간접업무의 통합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단히 흥미로운 결과로서 여타요인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업체들의 경우가 보다

조직적인 작업장 개선을 이루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노동요인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업체들이 제안활동이나 직무순환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서 사례 연구 등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⁴⁾

〈표 16〉 작업조직의 특성과 해외진출

	제조업 전체	해외진출 제조업전체	노동요인 해외진출	여타요인 해외진출
제안건수	3.0	3.4	3.5	3.3
채택률(%)	39.2	39.3	41.6	36.9
소집단활동참가율(%)	20.3	21.0	20.4	21.6
직무순환(5점)	1.54	1.67	1.74	1.60
보전담당(5점)	2.24	2.28	2.23	2.34
품질담당(5점)	2.40	2.47	2.43	2.52

주: 직무순환의 5점 척도는 1점 '업무 로테이션이 없다'에서 5점 '팀내 로테이션은 물론 '팀 간에서도 로테이션이 자주 이루어진다'까지로 측정된 것이며, 보전과 품질 업무의 통합 정도는 직접 생산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전문부서에서 전담하는 것(1점)에서 관련 간접 업무의 상당한 부분을 직접 생산자가 담당하는 것(5점)까지를 측정된 것임.

이번에는 업무량, 업무수행방식, 업무속도, 업무배분, 팀내 순환 등에서 직무 자율성의 정도와 해외진출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표 17>에서 역시 모든 항목에서 해외 진출 제조업체의 수치가 제조업 평균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요인으로 진출하는 업체와 여타 요인으로 진출하는 업체들의 차이는 항목별로 차별화되었는데, 여타 요인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업체들의 경우 업무수행방식, 업무배분, 그리고 팀내 직무순환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그 밖의 항목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타 요인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업체가 작업현장의 조직능력이 더 우수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표 17〉 직무 자율성과 해외진출

	제조업 전체	해외진출제조업전체	노동요인해외진출	여타요인해외진출
업 무 량	3.05	3.07	3.08	3.06
수행방식	3.30	3.35	3.28	3.42
업무속도	3.29	3.33	3.34	3.32
업무배분	3.42	3.49	3.44	3.53
팀내순환	2.69	2.82	2.73	2.91

주: 각 항목에 대하여 대표적 작업단위의 자율성의 정도를 1점 '전혀 없다'에서 5점 '전적으로 자율권을 갖는다'까지로 측정된 것임.

- 4) 한가지 가능한 해석은 인력난 등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업체들의 경우 안정적인 직무 분담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혹은 작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직무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란 점이다.

노사관계와 해외진출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앞서 <표 3>에서 제조업 중 노사관계를 해외진출 요인으로 꼽은 업체의 비율은 2.3%에 불과하였다. <표 18>에서도 노조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해외진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근로자 대표 응답에서 노조가 있는 업체의 경우에 노사협력의 정도가 낮았으나, 이는 해외 진출 여부와 상관없이 일관된 응답이다.

〈표 18〉 해외진출과 노조 유무에 따른 노사관계의 협력성 정도(5점 척도)

응답자	제조업 전체				해외진출 추진중 혹은 수행중 업체			
	노조 없음		노조 있음		노조 없음		노조 있음	
	빈도	척도	빈도	척도	빈도	척도	빈도	척도
노무관리자	461	3.84	243	3.72	175	3.82	112	3.84
근로자대표	241	3.83	175	3.47	99	3.82	79	3.53

주: 매우 대립적(1점) ~ 매우 협력적(5점)으로 노무관리자와 근로자대표에게 각각 설문한 결과

그러나 다음 <표 19>에 의하면 근로자 대표(노조 대표 혹은 노사협의회 대표) 응답에서 노동요인으로 진출하는 업체들의 노사관계가 여타 요인으로 진출한 업체보다 상당한 정도로 ‘덜 협력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노무관리자의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는 해외진출의 요인과 노사협력의 정도는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노사의 입장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요인으로 진출하는 업체들의 경우에 노무관리자의 노사 협력정도에 대한 응답이 여타 요인으로 진출하는 업체보다 더 높은 것은 대단히 흥미롭다. 결국 노동요인으로 진출하는 업체들의 경우는 일단 노사협력의 정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이 해외 진출을 선택한 이유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렇지만 이 설문만으로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 자본의 해외이동 때문에 고용불안을 느낀 근로자들의 문제제기로 인하여 노사관계가 대립적으로 변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노동요인으로 진출한 업체들의 노사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대립적이라는 점은 제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구조조정이 노사관계의 악화를 수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표 19〉 해외진출 요인에 따른 노사관계의 협력성 정도(5점 척도)

	제조업 전체		해외진출 추진중 혹은 수행중 업체					
			소 계		노동요인으로 진출		여타요인으로 진출	
	빈도	척도	빈도	척도	빈도	척도	빈도	척도
노무관리자	704	3.80	287	3.83	13	3.92	274	3.82
근로자대표	416	3.68	178	3.69	11	3.27	167	3.72

III. 맺음말

본 장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3차년도 조사에 새로 추가된 해외진출 관련 문항을 중심으로 인사관리 및 노사관계 등이 해외진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빈도 및 비율 등을 간략히 알아본 결과 2004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진출하는 제조업체들은 중공업 대기업 부문의 국제 경쟁력이 뛰어난 업체들과 중소 한계 기업들로 크게 구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심층분석 결과는 노동연구원의 다른 보고서를 통하여 소개하고자 하며, 일단 여기서는 이 두 집단에 대한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만을 제기하고자 한다.

노동시장 동향

경제일반

◆ 제조업 생산 증가,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는 부진

○ 산업활동은 수출활황으로 생산은 증가세가 확대되고 투자도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 및 소비부진으로 경기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그림 1, 표 1 참조).

- 7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던 제조업 생산은 11월에 큰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여전히 부진을 지속하고 있음(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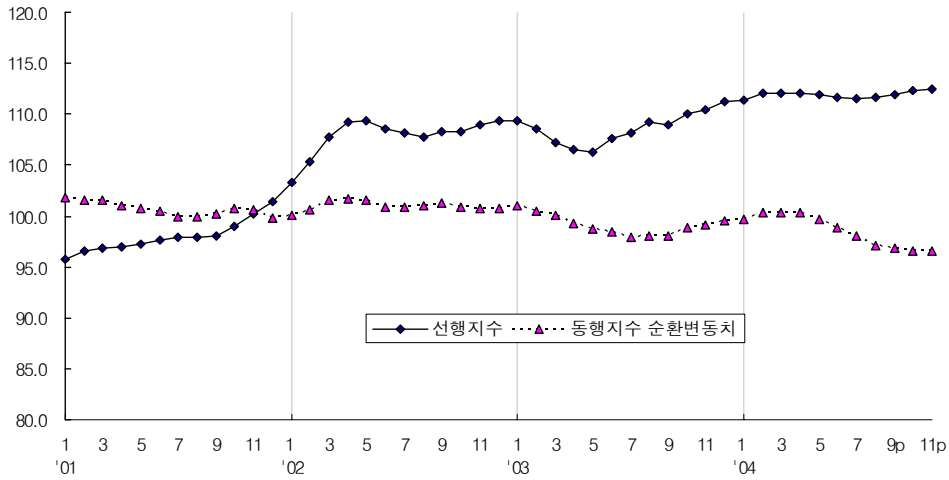
- 제조업 생산은 사무회계용기계(-8.9%), 섬유제품(-6.8%), 기타제조업(-10.3%)이 감소하였으나 반도체(28.7%), 자동차(20.8%), 영상 음향 통신(17.1%), 기계장비(7.7%) 등의 증가로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

- 서비스업은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등에서 생산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나머지 업종에서 감소세를 지속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1.6% 감소

- 도소매판매액 지수는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와 도매업, 소매업에서의 판매가 모두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하였으나, 설비투자는 통신기기 및 정밀기기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3.1% 증가

[그림 1] 경기지수 동향

(단위 : 2000=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

		2002		2003					2004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1월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p	4/4 분기p
광공업	생 산	6.9	11.4	6.1	3.2	3.2	7.8	4.9	11.0	12.3	11.0	10.1
	제조업	7.2	11.3	5.8	3.1	3.1	8.3	5.3	11.5	12.8	11.2	10.5
	출 하	6.3	10.9	4.5	2.8	2.5	6.8	3.7	9.9	10.5	9.8	9.3
	수 출	9.5	12.7	7.9	10.7	11.9	18.5	15.4	22.4	23.7	21.4	21.9
	내 수	4.7	10.0	2.7	-1.0	-2.4	0.7	-2.6	3.0	3.0	2.7	1.4
서비스업	생산	9.9	8.8	3.2	1.1	0.1	0.4	0.0	1.7	0.1	-1.4	-1.6
소비	도소매판매	7.4	7.1	1.7	-1.5	-2.3	-2.0	-3.6	0.1	-0.3	-0.9	-1.3
투자	설비투자	8.3	13.8	2.6	0.2	-6.4	-5.3	-12.0	-3.8	2.5	2.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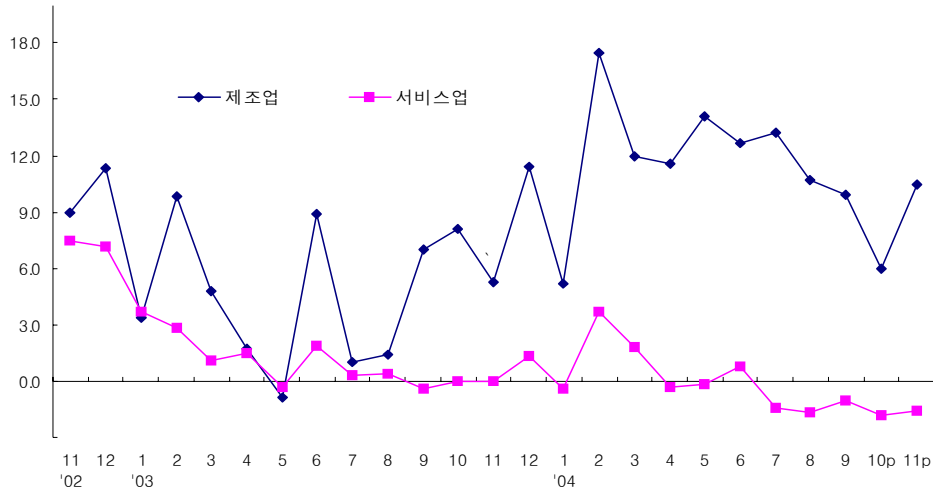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 8차 개정, 2000. 1. 7.)상의 20개 대분류 중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11개(도소매업(G), 숙박·음식점업(H), 운수업(I), 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사업서비스업(M), 교육서비스업(O), 보건복지사업(P),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산업을 포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동태조사』 및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그림 2] 제조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통계청, 『2004년 11월 산업활동동향』, 2004. 12.

——, 『2004년 11월 서비스업활동동향』, 2005. 1.

고용 동향

◆ 2004년 경제활동참가율 62.0%, 취업자 증가율 1.9%, 실업률 3.5% 기록

- 2004년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대비 454천명(2.0%)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전년대비 0.6%포인트 상승
- 2004년 취업자는 22,557천명으로 전년대비 418천명(1.9%) 증가하였는데, 여성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남성: 162천명(1.2%), 여성: 256천명(2.8%))(그림 3 참조).
- 2004년 실업자는 813천명으로 전년(777천명)대비 36천명(4.7%)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5%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증가
- 2004년의 고용동향은 지표상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호조를 보였지만, 반드시 개선이라고 할 수 없음.
 - 취업자 증가는 내수 거시경제지표의 뚜렷한 개선에 의한 것이 아닌 2003년 취

- 업자 감소(-0.1%)에 의한 반등작용일 수 있으며,
- 경제활동인구증가가 취업자 증가율을 상회하고, 실업률이 전년에 비해 1%포인트 높으며, 청년층 실업률이 7.9%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36시간 미만 단시간 취업자(155천명, 6.4%)의 증가는 체감실업률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였으며, 취업자의 업종별 증가를 보면, 주로 저 부가가치 서비스업 업종인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많이 증가(174천명, 17.5%)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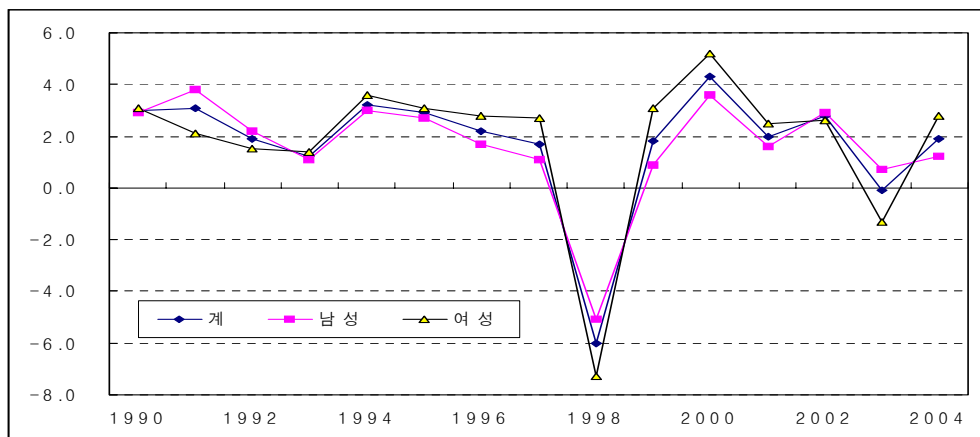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4/4분기			4/4분기	
						12월			12월
경 제 활 동 인 구	22,069 (1.9)	22,417 (1.6)	22,877 (2.1)	22,916 (0.2)	23,119 (0.6)	22,922 (0.7)	23,370 (2.0)	23,531 (1.8)	23,349 (1.9)
참 가 율	61.0	61.3	61.9	61.4	61.7	61.1	62.0	62.2	61.7
취 업 자	21,156 (4.3)	21,572 (2.0)	22,169 (2.8)	22,139 (-0.1)	22,325 (0.0)	22,096 (0.2)	22,557 (1.9)	22,733 (1.8)	22,495 (1.8)
실 업 자	913	845	708	777	794	826	813	802	855
실 업 륜	4.1	3.8	3.1	3.4	3.4	3.6	3.5	3.4	3.7
비 경 제 활 동 인 구	14,118 (0.2)	14,162 (0.3)	14,086 (-0.5)	14,424 (2.4)	14,357 (1.8)	14,584 (1.5)	14,347 (-0.5)	14,313 (-0.3)	14,521 (-0.4)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2004년 12월 고용동향』, 2005. 1.

〔그림 3〕 취업자 증감률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2004년 12월 고용동향』, 2005. 1.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에서 취업자 증가

- 2004년 산업별 취업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419천명, 6.8%), 제조업(85천명, 2.0%), 전기·운수·통신·금융업(26천명, 1.2%), 도소매·음식·숙박업(10천명, 0.2%), 건설업(4천명, 0.2%)에서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28천명, -6.8%)에서는 감소하였음.
- 단일 산업단위로 전년대비 취업자가 많이 증가한 산업은 사업서비스업(158천명, 12.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174천명, 17.5%)임.
- 산업별 성별 취업자 증가율을 보면, 제조업에서 남성 취업자는 67천명(2.4%) 증가하였고, 여성은 19천명(1.3%) 증가
- 사업서비스업은 남성 취업자가 많이 증가한 반면(남성: 53천명(13.2%), 여성: 0.3천명(1.0%)),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은 여성 취업자 증가(131천명, 31.8%)가 남성(44천명, 7.5%)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2004년 이후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그림 4 참조).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4/4분기			4/4분기	
						12월			12월
전 산 업	21,156 (-)	21,572 (2.0)	22,169 (2.8)	22,139 (-0.1)	22,325 (0.0)	22,096 (0.2)	22,557 (1.9)	22,733 (1.8)	22,495 (1.8)
농림어업	2,243 (-)	2,148 (-4.2)	2,069 (-3.7)	1,950 (-5.8)	1,882 (-8.0)	1,575 (-11.0)	1,825 (-6.4)	1,789 (-4.9)	1,549 (-1.7)
제조업	4,293 (-)	4,267 (-0.6)	4,241 (-0.6)	4,205 (-0.9)	4,246 (-0.1)	4,257 (0.4)	4,290 (2.0)	4,296 (1.2)	4,261 (0.1)
건설업	1,580 (-)	1,585 (0.3)	1,746 (10.2)	1,816 (4.0)	1,854 (2.3)	1,851 (2.6)	1,820 (0.2)	1,864 (0.6)	1,843 (-0.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752 (-)	5,874 (2.1)	5,998 (2.1)	5,852 (-2.4)	5,851 (-2.1)	5,902 (-1.6)	5,862 (0.2)	5,853 (0.0)	5,886 (-0.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5,195 (-)	5,540 (6.6)	5,940 (7.2)	6,139 (3.4)	6,322 (4.5)	6,325 (4.8)	6,558 (6.8)	6,711 (6.1)	6,723 (6.3)
전기·운수·창고 및 금융업	2,076 (-)	2,141 (3.1)	2,157 (0.7)	2,160 (0.2)	2,153 (-1.0)	2,167 (-0.9)	2,187 (1.2)	2,205 (2.4)	2,218 (2.4)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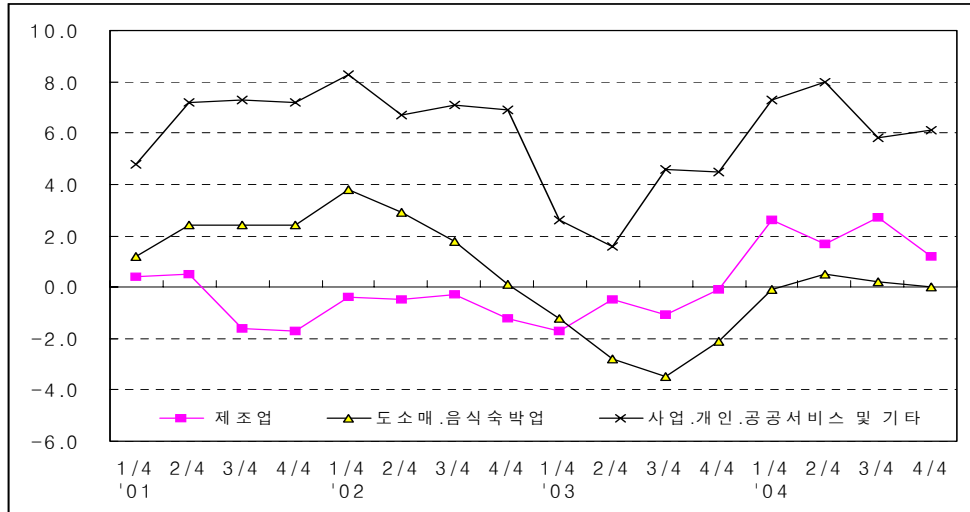
2) 자세한 업종별 취업자 현황은 부표 참고

자료: 통계청, 『2004년 12월 고용동향』, 2005. 1.

- 서비스업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004년 기준 전체취업자 대비 종사하는 취업자: 25.9%)에서의 취업자는 소폭 증가하였음(그림 4 참조).

[그림 4] 업종별 취업자 증감률

(단위: %)



자료: 통계청, 『2004년 12월 고용동향』, 2005. 1.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취업자 증가 주도

- 2004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임금근로자는 14,894천명으로 전년대비 492천명(3.4%) 증가하고, 비임금근로자는 7,663천명으로 전년대비 73천명(-0.9%) 감소
 - 임금근로자는 1999년 이후부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비임금 근로자는 2002년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음(그림 5 참조).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356천명, 5.4%)가 많이 증가하고, 일용근로자(58천명, 2.7%)와 임시근로자(78천명, 1.6%)는 소폭증가 하여 전체적으로 임시·일용 근로자는 전년대비 139천명(1.9%) 증가

〈표 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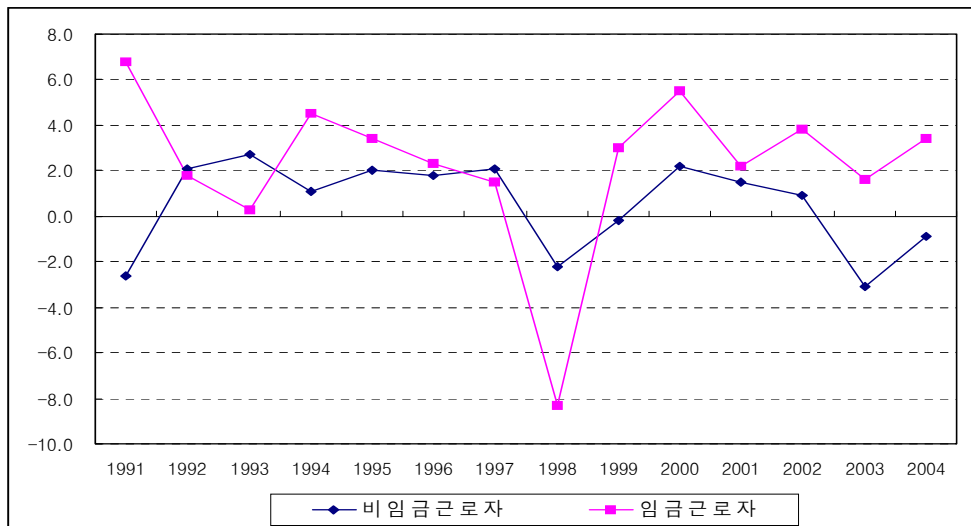
	2000	2001	2002		2003			2004	
					4/4분기			4/4분기	
						12월			12월
전 체	21,156 (4.3)	21,572 (2.0)	22,169 (2.8)	22,139 (-0.1)	22,325 (0.0)	22,096 (0.2)	22,557 (1.9)	22,733 (1.8)	22,495 (1.8)
비임금근로자	7,795 (2.2)	7,913 (1.5)	7,988 (0.9)	7,736 (-3.1)	7,748 (-2.5)	7,472 (-2.3)	7,663 (-0.9)	7,631 (-1.5)	7,385 (-1.2)
임금근로자	13,360 (5.5)	13,659 (2.2)	14,181 (3.8)	14,402 (1.6)	14,577 (1.4)	14,624 (1.5)	14,894 (3.4)	15,102 (3.6)	15,109 (3.3)
상용근로자	6,395 (4.2)	6,714 (5.0)	6,862 (2.2)	7,269 (5.9)	7,383 (6.1)	7,411 (6.2)	7,625 (4.9)	7,781 (5.4)	7,776 (4.9)
임시·일용 근로자	6,966 (6.7)	6,945 (-0.3)	7,319 (5.4)	7,133 (-2.5)	7,194 (-3.2)	7,213 (-2.9)	7,270 (1.9)	7,321 (1.8)	7,334 (1.7)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04년 12월 고용동향』, 2005. 1.

〔그림 5〕 임금근로자의 증감률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04년 12월 고용동향』, 2005. 1.

◆ 청년층(15~29세) 실업자와 실업률 증가

○ 2004년 청년층 실업자 391천명, 실업률은 7.9%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 모든 연령범주에서 실업자와 실업률 증가

- 전체실업률과 비교한 청년층의 실업률 변동폭은 비교적 높은 편이며, 2002년 이후부터 청년층 실업률은 전체실업률의 2배를 넘고 있음(그림 6참조).

〈표 5〉 연령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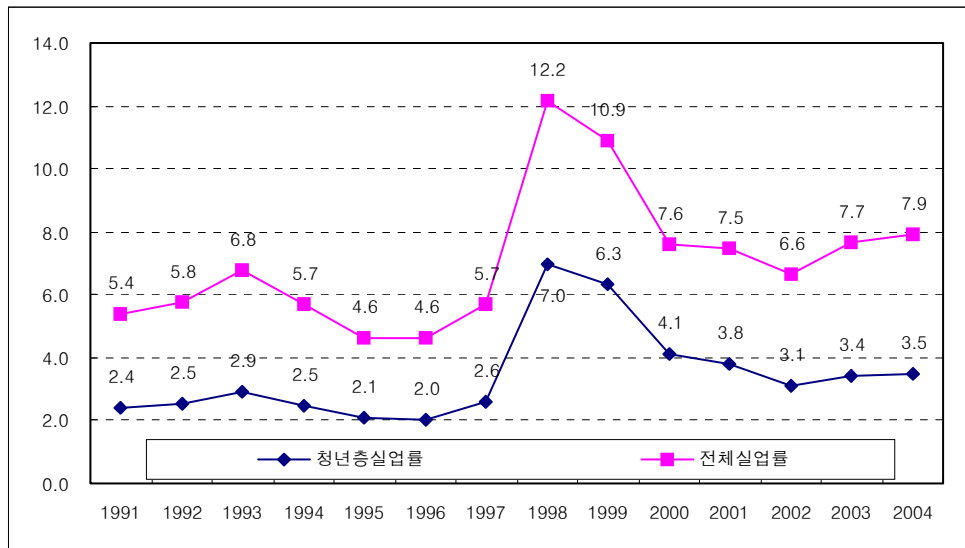
	2000	2001	2002	2003			2004		
					4/4분기			4/4분기	
						12월			12월
전 체	913 (4.1)	845 (3.8)	708 (3.1)	777 (3.4)	794 (3.4)	826 (3.6)	813 (3.5)	802 (3.4)	855 (3.7)
15~29세	402 (7.6)	388 (7.5)	341 (6.6)	383 (7.7)	394 (8.0)	432 (8.6)	391 (7.9)	378 (7.7)	420 (8.5)
30~39세	217 (3.4)	193 (3.0)	177 (2.8)	182 (2.9)	188 (3.0)	180 (2.8)	186 (2.9)	193 (3.0)	201 (3.2)
40~49세	180 (3.3)	162 (2.8)	111 (1.9)	128 (2.1)	129 (2.1)	129 (2.1)	139 (2.2)	134 (2.1)	134 (2.1)
50~59세	88 (2.9)	79 (2.6)	56 (1.8)	66 (2.0)	61 (1.8)	60 (1.8)	74 (2.2)	75 (2.0)	81 (2.3)
60세 이상	26 (1.3)	23 (1.1)	22 (1.0)	19 (0.9)	23 (1.0)	24 (1.2)	24 (1.1)	21 (0.9)	19 (0.9)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 『2004년 12월 고용동향』, 2005. 1.

〔그림 6〕 전체와 청년층의 실업률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04년 12월 고용동향』, 2005. 1.

임금 동향

◆ 임금상승률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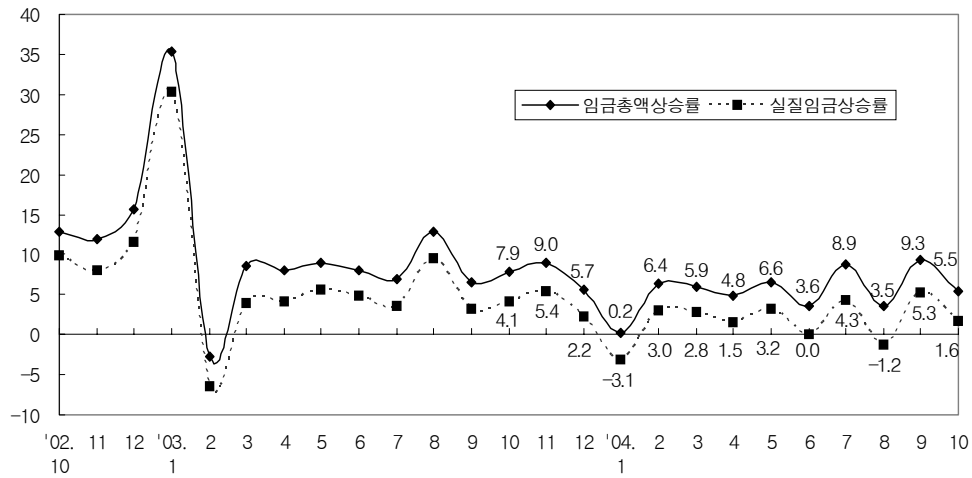
- 2004년 10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145천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5.5% 상승
 - － 이는 전년동기의 임금총액 상승률 7.9%보다 2.4%포인트 낮은 수치임.
 - － 1~10월 임금총액은 2,201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4% 상승
- 실질임금은 1.6% 상승
 - － 2004년 10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전년동기에 비해 1.6% 상승함.
 - － 1~10월의 실질임금은 1월 및 8월의 실질임금이 하락한 영향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1.6% 상승에 그침.

◆ 2004년 협약임금 인상률 하락

- 협약임금 인상률은 전년보다 1.2%포인트 낮게 나타남.
 - － 2004년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5.2%를 기록하여 전년의 6.4%보다 1.2%포인트 하락
 - － 임금교섭 타결업체 중 임금인상업체의 비율은 76.0%를 기록하여 전년의 83.7%보다 감소
 - － 반면 동결업체 비중은 23.6%로 전년의 16.0%보다 증가하였으며, 하향 조정업체의 비중은 0.4%로 전년의 0.4%와 동일
 - － 민간부문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5.3%로 전년의 6.4%보다 하락하였으며, 공공부문은 3.4%를 기록하여 전년의 5.5%에 비해 대폭 하락
- 임금교섭 진도율을 전년보다 높게 나타남
 - － 2004년 100인 이상 사업장 5,909개소 중 5,514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어 전년(92.2%)보다 약간 높은 93.3%의 진도율을 기록
 - － 민간부문의 임금교섭 진도율은 93.6%로 5,727개소 중 5,360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었으며, 공공부문은 182개소 중 154개소가 타결되어 84.6%의 진도율을 기록

[그림 7]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원/월, 2000=100.0, %)

	2003				2004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0월		
		8월	9월	10월						
임 금 총 액	2,127 (9.2)	2,165 (8.6)	2,227 (7.3)	2,185 (3.9)	2,115 (5.0)	2,324 (7.3)	2,220 (3.5)	2,495 (9.3)	2,145 (5.5)	2,201 (5.4)
정 액 급 여	1,532 (8.8)	1,536 (8.6)	1,583 (9.0)	1,599 (7.0)	1,613 (6.6)	1,643 (6.9)	1,638 (6.6)	1,652 (7.0)	1,653 (7.0)	1,621 (6.8)
초 과 급 여	135 (7.3)	133 (4.7)	145 (8.5)	132 (3.1)	138 (2.5)	137 (2.5)	136 (1.8)	141 (1.6)	148 (0.0)	137 (2.4)
특 별 급 여	460 (11.4)	496 (9.7)	499 (2.0)	455 (-5.4)	364 (-0.5)	544 (9.8)	447 (-5.9)	702 (17.1)	344 (0.9)	443 (1.4)
실 질 임 금 지 수	115.2 (5.5)	117.2 (5.3)	119.6 (3.7)	115.5 (0.6)	111.1 (1.6)	120.5 (2.9)	114.9 (-1.2)	129.1 (5.3)	111.0 (1.6)	115.2 (1.6)
소 비 자 물 가 지 수	110.7 (3.6)	110.8 (3.2)	111.7 (3.5)	113.4 (3.3)	114.2 (3.3)	115.6 (4.3)	115.9 (4.8)	115.9 (3.9)	115.9 (3.8)	114.6 (3.7)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7〉 주요 임금교섭 동향(2004년)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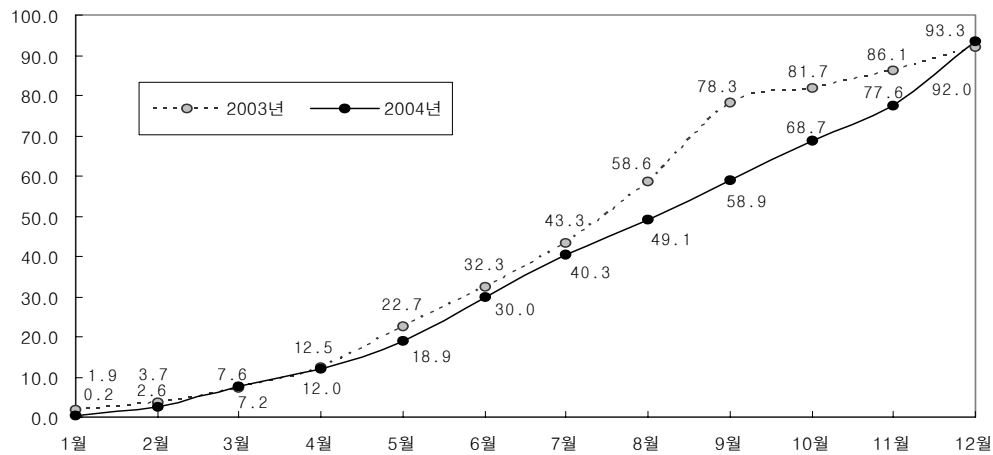
	지도대상업체(A)	타결업체(B)	임금교섭 진도율 (B/A)	협약임금 인상률 (임금총액 기준)
전 체	5,909 (5,751)	5,514 (5,303)	93.3 (92.2)	5.2 (6.4)
민간부문	5,727 (5,575)	5,360 (5,163)	93.6 (92.6)	5.3 (6.4)
공공부문	182 (176)	154 (140)	84.6 (79.5)	3.4 (5.5)

주: 1) 10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2) ()안의 수치는 전년 자료임.

자료: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

〔그림 8〕 임금교섭 진도율 월별 추이(2003, 2004년)



자료: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

표명

- 한국노총은 “대통령이 밝힌 경제활성화 방안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공허하고 비정규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며 아쉬움을 표명
- 민주노총 역시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정책적 비전을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은 기업 측에 있음에도 이 문제를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 것은 비정규직을 모독한 것”이라며 강한 실망감을 표명
- 경총은 경제활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표명에 대해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힘.
 -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힘쓰겠다는 대통령의 지적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정규직·비정규직간 문제 해결을 위해 직업훈련의 강화와 대기업 노조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공감을 표명
 - 아울러 앞으로 경영계는 투명경영과 투자확대에 적극 노력하고 노동계는 생산성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을 주장

주요노동일지

(2004. 12. 1~2004. 12. 15)

년·월·일	노 동 정 책	노 사 단 체	기업 및 노동조합
2004. 12. 16			· 철도노조: 특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가결
12. 17		· 경총: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관련 성명 발표	· 현대자동차노조: 협력업체 불법파견 관련 기자회견 개최
12. 20	· (사)한국노동복지센터: 제1회 노동복지 심포지움 개최		
12. 21		·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12. 22			· 씨티은행노사: 노조의 전면파업 중('04. 10. 5~) 단체협약 합의, 업무복귀
			· 경인방송이사회: 방송위원회의 방송재허가 추천거부에 따라 폐업 의결
12. 25			·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3개사: 사내하청 노조의 전면파업 중('04. 12. 21~) 직장폐쇄
12. 27			· 한진중공업(주) 마산공장: 촉탁계약 해지 비관, 촉탁근로자 자살
12. 30		· 민주노총: 한진중공업 촉탁근로자 자살사건 관련 기자회견 개최	
2005. 1. 3			· 우리증권노조: 전면파업 중('04. 12. 6~)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가결
1. 4		· 금속연맹: 중앙위원회 개최, 재선거 일정 등 확정	
1. 7		· 민주노총: '05년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1. 10		· 한국노총: 산별대표자회의 개최	
1. 11		· 대구시 노사정협의회: 경제살리기 노사정 공동선언문 채택	· 부산지하철노조: 구조조정저지 결의대회 개최
1. 14		· 민주노총: 하이닉스 하청업체 불법파견 관련 성명서 발표 · 민주노총: 05년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개최	

〈표 1〉 주요 거시경제지표(2000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십억원, 전년동기대비 %)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최소비지출	총 고 정 자본형성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서비스업1)		
실 질 민 간 맥	1997	523,034.7	544,131.5	115,274.3	53,667.3	10,778.6	257,324.0	363,911.2	192,033.8
	1998	487,183.5	499,004.0	106,173.0	48,295.2	10,742.0	247,182.1	325,361.8	147,991.7
	1999	533,399.3	545,970.1	129,287.5	44,458.6	11,708.4	263,424.6	357,016.3	160,336.3
	2000	578,664.5	576,160.0	151,243.0	42,926.7	13,212.5	279,605.0	382,398.2	179,907.7
	2001	600,865.9	592,408.5	154,503.3	45,279.0	14,169.1	293,128.9	401,191.4	179,576.3
	2002	642,748.1	633,842.1	166,242.9	46,529.4	15,258.0	316,104.8	431,484.2	191,464.6
	2003	662,474.4	645,497.0	174,201.2	50,308.7	16,128.9	321,719.7	429,315.6	198,378.6
	2000. 2/4	144,171.4	142,942.8	37,838.2	11,681.4	3,200.3	69,542.9	93,900.6	47,819.5
	3/4	144,350.1	143,441.3	38,088.3	11,338.5	3,320.7	69,825.0	94,829.4	46,053.3
	4/4	156,759.7	155,274.2	39,207.9	12,238.6	3,222.7	72,334.8	99,709.9	47,895.1
	2001. 1/4	138,047.3	136,026.1	37,329.3	7,800.4	4,000.4	70,831.8	96,068.8	36,714.4
	2/4	149,503.6	146,555.5	39,382.8	11,828.2	3,326.2	72,580.0	97,856.4	46,148.2
	3/4	149,311.5	147,117.0	38,085.9	12,316.5	3,437.0	73,284.1	100,245.4	45,842.2
	4/4	164,003.6	162,710.0	39,705.2	13,333.9	3,405.5	76,432.9	107,020.9	50,871.6
	2002. 1/4	147,076.1	145,751.7	39,253.9	8,360.7	4,190.9	75,744.3	105,129.6	39,528.2
	2/4	159,990.3	156,554.3	41,828.8	12,145.1	3,567.2	78,628.4	106,140.3	49,501.8
	3/4	159,407.1	157,215.8	40,909.0	11,724.1	3,771.1	79,708.3	107,562.3	46,947.6
	4/4	176,274.6	174,320.2	44,251.1	14,299.5	3,728.8	82,023.9	112,652.0	55,487.0
	2003. 1/4	152,491.3	146,454.9	41,237.1	9,064.1	4,488.9	77,167.9	106,121.8	41,363.9
	2/4	163,493.5	158,940.5	42,906.2	13,076.6	3,883.7	79,504.0	105,260.5	51,347.1
	3/4	163,301.5	160,545.6	42,277.2	12,673.3	3,888.8	81,023.5	106,576.3	48,190.3
	4/4	183,188.1	179,556.0	47,780.7	15,494.6	3,867.5	84,024.2	111,357.0	57,477.2
	2004. 1/4	160,540.2	153,069.5	46,236.5	9,470.6	4,746.1	78,300.6	105,475.7	42,112.7
	2/4	172,559.6	166,184.6	48,725.9	13,548.2	4,119.2	80,839.1	105,608.0	53,637.0
	3/4	170,736.5	166,127.1	47,175.9	12,923.5	4,154.1	82,093.5	106,453.2	49,642.9
성 장 률	1997	4.7	2.7	4.9	2.8	10.0	5.1	3.2	-2.3
	1998	-6.9	-8.3	-7.9	-10.0	-0.3	-3.9	-10.6	-22.9
	1999	9.5	9.4	21.8	-7.9	9.0	6.6	9.7	8.3
	2000	8.5	5.5	17.0	-3.4	12.8	6.1	7.1	12.2
	2001	3.8	2.8	2.2	5.5	7.2	4.8	4.9	-0.2
	2002	7.0	7.0	7.6	2.8	7.7	7.8	7.6	6.6
	2003	3.1	1.8	4.8	8.1	5.7	1.8	-0.5	3.6
	2000. 2/4	9.4	6.1	17.7	-3.1	14.3	6.7	8.7	14.8
	3/4	8.2	6.1	19.2	-2.2	11.8	4.4	5.8	10.8
	4/4	4.3	1.0	8.1	-2.7	7.6	4.5	4.0	3.5
	2001. 1/4	3.5	1.1	3.4	1.7	15.3	4.3	2.2	-3.7
	2/4	3.7	2.5	4.1	1.3	3.9	4.4	4.2	-3.5
	3/4	3.4	2.6	0.0	8.6	3.5	5.0	5.7	-0.5
	4/4	4.6	4.8	1.3	8.9	5.7	5.7	7.3	6.2
	2002. 1/4	6.5	7.1	5.2	7.2	4.8	6.9	9.4	7.7
	2/4	7.0	6.8	6.2	2.7	7.2	8.3	8.5	7.3
	3/4	6.8	6.9	7.4	-4.8	9.7	8.8	7.3	2.4
	4/4	7.5	7.1	11.4	7.2	9.5	7.3	5.3	9.1
	2003. 1/4	3.7	0.5	5.1	8.4	7.1	1.9	0.9	4.6
	2/4	2.2	1.5	2.6	7.7	8.9	1.1	-0.8	3.7
	3/4	2.4	2.1	3.3	8.1	3.1	1.7	-0.9	2.6
	4/4	3.9	3.0	8.0	8.4	3.7	2.4	-1.1	3.6
	2004. 1/4	5.3	4.5	12.1	4.5	5.7	1.5	-0.6	1.8
	2/4	5.5	4.6	13.6	3.6	6.1	1.7	0.3	4.5
	3/4	4.6	3.5	11.6	2.0	6.8	1.3	-0.1	3.0

주: 1) 서비스업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포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표 2〉 주요 기관의 2005년 경제전망

(단위: %, 원/달러)

	한국은행 (12/09)	한국개발 연구원 (12/14)	한국경제 연구원 (12/08)	현대경제 연구원 (12/08)	삼성경제 연구소 (11/22)	LG경제 연구원 (12/14)	GDP구성비 (2003년 기준)
경제성장률	4.0 (4.7)	4.0 (4.7)	4.1 (4.8)	4.0 (4.8)	3.7 (4.8)	3.8 (4.7)	
민간소비	1.8 (-0.8)	2.5 (-0.8)	3.2 (-0.8)	2.5 (-0.3)	2.1 (-0.7)	1.9 (-0.9)	53.8
설비투자	5.3 (4.1)	8.3 (3.8)	8.2 (5.0)	4.3 (4.1)	3.9 (4.1)	5.1 (4.1)	9.5
건설투자	0.5 (2.3)	2.8 (2.3)	1.5 (2.0)	2.0 (2.8)	2.4 (3.6)	0.6 (2.3)	18.5
수출	7.3 (31.3)	14.1 (30.0)	7.4 (29.7)	9.5 (29.1)	9.3 (29.9)	8.0 (31.5)	38.2
수입	9.1 (25.5)	18.3 (24.4)	14.2 (24.4)	17.8 (23.4)	14.2 (25.2)	11.9 (25.9)	35.6
소비자물가	3.0 (3.6)	2.9 (3.6)	3.2 (3.6)	3.4 (3.6)	3.3 (3.7)	2.8 (3.6)	정부소비 13.3
대미환율	-	-	1,024(1,145)	1,030(1,140)	1,060(1,152)	1,000(1,145)	무형투자 5.3
실업률	3.6 (3.5)	3.6 (3.5)	3.5 (3.4)	3.6 (3.5)	3.6 (3.5)	3.6 (3.5)	재고증감 -0.3

주: 1) ()안은 2004년 전망수치임.

2) 수출 및 수입은 집계기준의 차이로 일치하지 않음.

자료: 개별 기관.

〈표 3〉 생산지수, 대외거래, 환율 및 물가지수

(2000=100.0)

(단위 : 백만달러, 원)

	생산지수		국제수지			대미 기준 환율	물가지수	
	산업	서비스	경상수지	수출(FOB)	수입(CIF)	평균자료	생산자	소비자
1999	85.6	91.9	24,521.9	143,685	119,752	1,189.5	98.0	97.8
2000	100.0	100.0	12,250.8	172,268	160,481	1,130.6	100.0	100.0
2001	100.7	105.8	8,032.6	150,439	141,098	1,290.8	99.5	104.1
2002	108.8	116.1	5,393.9	162,471	152,126	1,251.2	99.2	106.9
2003	114.4	117.2	12,320.7	193,817	178,827	1,191.9	101.4	110.7
2004	-	-	-	254,221	224,469	1,144.9	107.6	114.7
2001. 4/4	104.4	110.5	442.2	36,349	34,342	1,291.8	98.1	104.5
2002. 1/4	103.7	110.5	1,400.6	35,656	33,788	1,319.6	98.3	105.5
2/4	109.1	117.0	1,569.7	40,252	37,192	1,270.7	99.7	106.9
3/4	106.2	116.8	547.2	41,255	38,884	1,196.3	99.2	107.4
4/4	116.3	120.0	1,876.4	45,307	42,262	1,221.0	99.7	107.9
2003. 1/4	110.0	113.2	-1,758.8	43,036	44,223	1,201.1	101.2	109.8
2/4	112.6	118.2	2,486.8	46,053	41,711	1,209.8	101.0	110.5
3/4	109.6	116.9	3,992.3	47,828	42,971	1,175.8	101.1	110.8
4/4	125.4	120.5	7,660.6	56,900	49,922	1,181.3	102.3	111.7
2004. 1/4	122.1	115.1	6,146.0	59,302	52,785	1,171.9	105.5	113.4
2/4	126.4	118.3	7,035.3	63,930	55,257	1,161.9	107.3	114.2
3/4	121.7	115.3	7,097.9	61,615	54,685	1,155.2	108.5	115.6
4/4	-	-	-	69,374	61,743	1,094.0	108.9	115.5
2002. 9	105.0	117.7	315.4	13,901	12,992	1,208.5	99.4	108.0
10	117.0	119.7	1,470.9	15,085	13,817	1,241.1	99.6	107.7
11	116.6	117.9	1,137.8	15,197	13,993	1,211.9	99.8	107.8
12	115.5	122.4	-732.3	15,026	14,452	1,208.9	99.8	108.3
2003. 1	110.0	113.0	-432.3	14,320	14,495	1,179.3	100.5	109.0
2	103.4	107.9	-118.4	13,337	13,858	1,191.2	101.1	109.6
3	116.6	118.8	-1,208.1	15,379	15,870	1,232.4	102.1	110.9
4	113.7	118.3	-380.5	15,721	14,759	1,232.8	101.5	110.7
5	111.6	118.5	1,168.0	14,676	13,524	1,199.8	101.0	110.5
6	112.4	117.8	1,699.3	15,656	13,428	1,194.0	100.5	110.2
7	108.3	117.5	417.8	15,432	14,898	1,181.6	100.7	110.1
8	108.2	116.1	1,377.5	15,375	13,541	1,178.4	101.1	110.6
9	112.3	117.2	2,197.0	17,021	14,531	1,166.2	101.5	111.6
10	126.1	119.7	2,485.6	18,930	16,537	1,166.3	101.8	111.7
11	122.3	117.9	2,948.0	18,242	15,761	1,184.9	102.2	111.5
12	127.8	124.0	2,452.3	19,729	17,624	1,193.0	102.9	112.0
2004. 1	115.1	112.5	2,343.7	18,988	16,201	1,184.3	104.3	112.7
2	120.9	111.9	2,887.5	19,135	17,463	1,166.7	105.6	113.2
3	130.1	120.9	914.8	21,168	19,111	1,166.3	106.6	114.3
4	126.4	117.9	1,141.9	21,484	18,822	1,150.9	107.1	114.3
5	126.7	118.3	3,711.6	20,816	17,895	1,177.4	107.4	114.2
6	126.3	118.8	2,181.8	21,610	18,540	1,158.7	107.3	114.2
7	122.4	115.8	3,231.6	21,001	18,383	1,157.7	107.7	114.9
8	119.7	114.1	1,056.5	19,797	18,111	1,159.0	108.7	115.9
9	123.0	116.0	2,809.8	20,836	18,179	1,148.0	109.1	115.9
10	133.3	117.7	2,403.0	22,756	20,353	1,144.0	109.2	115.9
11	134.6	116.0	2,942.8	23,128	20,370	1,091.2	109.2	115.2
12	-	-	-	23,582	21,017	1,050.9	108.4	115.4

주 : 1) 경상수지는 한국은행집계(소유권 이전기준), 수출·수입은 통관기준(한국무역협회집계).

2) 대미 기준환율은 평균자료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생산자물가 동향』.

통계청 KOSIS, 산업활동 DB., 『소비자물가 동향』.

〈표 4〉 주요 노동시장지표

(단위: 천명, 천원, 시간, %)

	생산 가능인구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고용률	임금근로자 비율
1998	35,347	21,428	60.6	19,938	1,490	7.0	56.4	61.7
1999	35,757	21,666	60.6	20,291	1,374	6.3	56.7	62.4
2000	36,186	22,069	61.0	21,156	913	4.1	58.5	63.2
2001	36,579	22,417	61.3	21,572	845	3.8	59.0	63.3
2002	36,963	22,877	61.9	22,169	708	3.1	60.0	64.0
2003	37,340	22,916	61.4	22,139	777	3.4	59.3	65.1
2004	37,717	23,370	62.0	22,557	813	3.5	59.8	66.0
2002. 1/4	36,824	22,339	60.7	21,511	829	3.7	58.4	64.5
2/4	36,919	23,112	62.6	22,423	689	3.0	60.7	63.6
3/4	37,012	23,067	62.3	22,416	652	2.8	60.6	63.5
4/4	37,097	22,989	62.0	22,326	663	2.9	60.2	64.4
2003. 1/4	37,193	22,439	60.3	21,633	806	3.6	58.2	65.5
2/4	37,297	23,055	61.8	22,303	751	3.3	59.8	65.1
3/4	37,391	23,050	61.6	22,295	756	3.3	59.6	64.4
4/4	37,476	23,119	61.7	22,325	794	3.4	59.6	65.3
2004. 1/4	37,577	22,982	61.2	22,104	878	3.8	58.8	66.1
2/4	37,672	23,531	62.5	22,744	787	3.3	60.4	65.9
3/4	37,771	23,434	62.0	22,647	787	3.4	60.0	65.7
4/4	37,848	23,534	62.2	22,733	802	3.4	60.1	66.4
2002. 9	37,038	23,095	62.4	22,490	605	2.6	60.7	63.6
10	37,072	23,177	62.5	22,538	639	2.8	60.8	63.7
11	37,094	23,037	62.1	22,389	648	2.8	60.4	64.3
12	37,124	22,754	61.3	22,052	702	3.1	59.4	65.3
2003. 1	37,161	22,352	60.1	21,562	789	3.5	58.0	65.6
2	37,193	22,320	60.0	21,498	822	3.7	57.8	65.3
3	37,226	22,644	60.8	21,837	807	3.6	58.7	65.6
4	37,262	22,912	61.5	22,156	756	3.3	59.5	65.4
5	37,300	23,114	62.0	22,370	744	3.2	60.0	64.9
6	37,330	23,138	62.0	22,383	755	3.3	60.0	64.9
7	37,366	23,238	62.2	22,456	781	3.4	60.1	65.0
8	37,390	22,883	61.2	22,126	756	3.3	59.2	63.9
9	37,418	23,031	61.6	22,301	730	3.2	59.6	64.2
10	37,448	23,218	62.0	22,452	765	3.3	60.0	64.5
11	37,475	23,218	62.0	22,425	792	3.4	59.8	65.2
12	37,506	22,922	61.1	22,096	825	3.5	58.9	66.2
2004. 1	37,546	22,790	60.7	21,936	854	3.7	58.4	66.1
2	37,577	22,906	61.0	22,005	900	3.9	58.6	66.1
3	37,608	23,249	61.8	22,371	879	3.8	59.5	66.1
4	37,639	23,482	62.4	22,673	809	3.4	60.2	65.9
5	37,670	23,527	62.5	22,738	788	3.3	60.4	65.7
6	37,707	23,585	62.5	22,822	763	3.2	60.5	66.0
7	37,744	23,564	62.4	22,750	814	3.5	60.3	66.2
8	37,771	23,182	61.4	22,382	801	3.5	59.3	65.2
9	37,798	23,556	62.3	22,809	747	3.2	60.3	65.7
10	37,825	23,673	62.6	22,901	772	3.3	60.5	65.8
11	37,848	23,581	62.3	22,802	779	3.3	60.3	66.3
12	37,870	23,340	61.7	22,495	855	3.7	59.4	67.2

주: 1)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2)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 임금근로자 비율=임금근로자/취업자×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5〉 경제활동참가율(성별·연령대별)

(단위: %)

	남 자						여 자					
	전 체	15~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전 체	15~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1998	75.1	51.2	96.3	94.8	87.2	51.6	47.1	41.7	53.2	62.7	53.4	27.9
1999	74.4	50.5	95.7	93.9	85.8	50.7	47.6	41.7	53.7	63.1	53.9	29.5
2000	74.2	50.5	95.5	93.6	84.0	49.6	48.6	43.6	53.9	64.1	53.3	30.1
2001	74.2	50.0	94.9	93.5	83.4	50.4	49.2	45.2	54.2	63.9	53.8	29.9
2002	74.8	50.3	95.0	93.5	84.7	51.7	49.7	46.4	54.4	63.9	54.2	30.1
2003	74.6	49.5	94.9	93.9	85.4	48.6	48.9	46.8	53.8	62.9	52.6	27.8
2004	74.8	49.7	94.5	93.7	85.5	49.6	49.8	48.4	54.4	64.1	53.1	28.3
2001.3/4	74.7	50.3	95.0	93.8	84.2	52.6	49.7	45.1	53.9	64.0	55.1	32.7
4/4	74.5	49.7	95.1	94.2	84.0	51.4	49.7	45.6	54.7	64.1	55.0	30.5
2002.1/4	73.7	50.9	94.3	92.7	81.7	47.8	48.4	46.6	53.5	63.0	51.7	26.1
2/4	75.3	50.3	95.3	94.0	85.3	53.3	50.7	46.4	55.6	64.6	55.8	32.4
3/4	75.3	50.1	95.1	93.6	85.8	53.6	50.2	46.3	54.5	63.9	55.1	32.1
4/4	75.1	49.6	95.3	93.8	85.8	52.1	49.6	46.3	54.1	64.2	54.1	29.9
2003.1/4	73.9	49.9	94.7	93.5	84.2	45.8	47.5	47.0	53.7	61.3	49.4	23.9
2/4	74.9	48.9	95.3	94.4	86.3	49.6	49.5	46.3	54.6	63.6	54.0	29.3
3/4	74.7	49.4	94.7	93.9	85.6	49.5	49.3	47.1	53.5	62.7	53.5	29.8
4/4	74.9	49.9	95.0	93.8	85.7	49.4	49.2	46.8	53.6	63.8	53.3	28.1
2004.1/4	74.3	50.5	94.6	93.1	83.9	47.1	48.8	48.3	53.7	63.2	51.6	25.2
2/4	75.2	49.5	94.7	94.1	86.1	51.0	50.5	48.3	55.2	64.6	53.8	30.0
3/4	74.7	49.1	94.2	93.7	85.6	50.4	50.1	48.7	54.2	63.9	53.1	29.6
4/4	75.1	49.8	94.3	94.1	86.5	49.9	50.0	48.2	54.5	64.6	53.9	28.3
2002. 9	75.1	48.9	95.2	93.8	86.4	53.6	50.4	45.6	55.0	64.6	55.3	32.8
10	75.3	49.0	95.4	94.0	86.7	53.9	50.5	45.8	55.0	64.8	55.9	32.6
11	75.2	49.6	95.3	93.9	86.1	52.6	49.8	46.2	54.1	64.1	54.6	30.6
12	74.8	50.3	95.1	93.6	84.5	49.8	48.6	47.0	53.2	63.6	51.7	26.6
2003. 1	73.8	50.3	94.6	93.2	83.9	44.9	47.3	47.2	53.6	60.8	48.9	23.2
2	73.8	50.2	94.5	93.4	83.5	45.2	47.0	47.3	53.1	60.7	48.3	22.8
3	74.2	49.2	95.0	93.9	85.1	47.2	48.2	46.3	54.3	62.4	50.9	25.7
4	74.7	49.1	95.2	94.2	86.0	48.8	49.1	46.0	54.4	63.4	53.4	28.2
5	75.0	49.0	95.5	94.4	86.5	49.9	49.7	46.1	54.8	64.0	54.3	29.7
6	74.9	48.8	95.3	94.5	86.3	50.0	49.8	46.9	54.6	63.5	54.3	29.8
7	75.3	51.0	95.0	94.2	85.7	49.5	49.9	48.4	54.0	62.8	53.9	29.7
8	74.3	49.1	94.4	93.6	85.2	48.9	48.8	47.1	52.5	61.9	53.0	29.3
9	74.5	48.0	94.7	94.1	85.9	50.1	49.3	45.8	53.8	63.3	53.7	30.5
10	75.0	49.0	95.1	94.1	86.2	51.0	49.7	46.2	53.8	64.2	54.4	30.5
11	75.1	49.7	94.9	94.1	85.9	50.3	49.6	46.5	54.1	64.1	53.9	29.3
12	74.7	50.9	95.0	93.4	85.0	46.8	48.3	47.8	52.8	63.2	51.7	24.7
2004. 1	74.1	51.4	94.3	92.6	83.3	45.3	48.1	48.4	53.0	62.5	50.9	23.5
2	74.0	50.4	94.4	92.9	83.2	46.7	48.6	48.6	53.9	62.9	51.3	24.2
3	74.8	49.6	94.9	93.7	85.2	49.4	49.6	47.9	54.3	64.2	52.4	27.8
4	75.1	49.2	94.8	94.1	86.0	50.9	50.4	47.8	55.4	65.0	53.7	29.8
5	75.2	49.6	94.6	94.0	85.8	51.1	50.5	48.5	54.9	64.7	53.7	29.9
6	75.3	49.7	94.7	94.1	86.4	51.0	50.5	48.5	55.2	64.2	53.9	30.2
7	75.2	50.8	94.3	93.9	85.2	50.4	50.4	49.9	54.4	63.9	53.2	29.2
8	74.2	48.0	94.2	93.3	85.3	49.9	49.2	47.6	53.3	63.0	52.2	29.4
9	74.8	48.4	94.3	93.9	86.2	50.8	50.6	48.5	55.0	64.9	53.8	30.1
10	75.3	49.6	94.2	94.3	86.6	51.4	50.6	47.8	54.7	65.0	54.6	30.7
11	78.2	49.8	94.3	94.1	86.8	50.6	50.1	47.9	54.4	64.7	54.2	29.1
12	74.8	49.9	94.3	93.8	86.1	47.8	49.3	48.8	54.2	64.0	52.9	25.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6〉 경제활동참가율(성별·교육수준별)

(단위: %)

	남 자				여 자			
	중졸이하	고 졸	(초)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 졸	(초)대졸	대졸이상
1998	57.6	79.7	93.2	90.7	42.1	48.5	65.3	56.8
1999	57.3	79.0	93.0	88.5	42.9	48.7	64.1	56.9
2000	57.4	78.4	91.1	87.8	43.6	49.5	64.6	58.1
2001	57.0	77.7	91.4	88.2	43.4	50.5	65.8	58.4
2002	57.3	78.2	92.6	88.4	43.1	51.4	66.4	59.1
2003	55.3	77.3	92.1	89.0	40.3	51.4	67.5	58.2
2004	55.1	77.7	91.1	88.7	40.1	53.0	66.8	60.0
2001. 3/4	57.9	78.2	91.1	88.2	44.7	50.6	65.7	57.7
4/4	56.8	78.4	92.6	88.6	43.6	51.5	66.9	58.1
2002. 1/4	55.0	77.7	91.1	88.3	40.8	51.2	65.9	58.2
2/4	58.9	78.0	92.5	88.3	45.0	51.5	67.3	59.2
3/4	58.1	78.5	92.5	88.3	44.2	51.4	65.9	59.1
4/4	57.2	78.4	94.0	88.8	42.5	51.5	66.6	59.7
2003. 1/4	53.7	76.9	92.5	89.1	37.7	50.8	68.4	57.6
2/4	56.8	76.8	92.2	89.1	41.9	50.9	68.3	58.3
3/4	55.8	77.4	91.4	88.7	41.4	51.4	66.6	58.4
4/4	54.8	78.3	92.2	89.1	40.3	52.3	66.9	58.3
2004. 1/4	53.8	77.4	91.5	88.6	38.4	52.6	66.5	58.7
2/4	56.4	77.6	91.6	88.4	41.4	52.8	67.4	60.8
3/4	55.2	77.5	90.6	88.5	40.6	53.1	66.8	60.0
4/4	55.0	78.3	90.8	89.2	39.9	53.5	66.4	60.5
2002. 9	58.2	78.0	92.9	88.5	44.5	51.5	66.1	59.5
10	58.3	78.1	94.0	88.8	44.5	51.6	66.0	60.1
11	57.5	78.5	93.8	88.7	42.9	51.5	66.5	59.6
12	55.7	78.7	94.1	88.8	40.2	51.5	67.1	59.3
2003. 1	52.2	77.9	92.9	89.3	36.9	51.5	68.1	57.5
2	53.5	76.6	92.3	88.9	36.8	50.5	67.8	57.5
3	55.5	76.1	92.4	89.0	39.3	50.4	69.3	57.8
4	56.5	76.5	91.9	89.1	41.4	50.6	68.4	57.6
5	57.0	76.9	92.4	89.0	42.3	50.9	68.6	58.4
6	56.9	76.8	92.3	89.3	42.1	51.3	67.9	58.9
7	56.2	78.2	91.9	88.8	41.6	52.2	67.4	58.8
8	55.3	77.0	91.2	88.5	40.8	51.1	65.9	57.7
9	55.7	77.0	91.2	88.7	41.7	51.1	66.6	58.6
10	56.0	77.8	92.2	89.0	41.8	51.9	66.9	58.6
11	55.2	78.4	92.3	89.0	41.0	52.4	67.3	58.3
12	53.3	78.6	92.2	89.2	38.2	52.5	66.4	58.1
2004. 1	51.9	78.4	92.0	88.9	37.1	53.2	65.4	58.1
2	54.0	76.6	91.1	88.3	38.1	52.4	66.5	58.7
3	55.7	77.1	91.3	88.5	40.1	52.3	67.5	59.3
4	56.3	77.3	91.8	88.3	41.4	52.7	67.4	60.7
5	56.3	77.5	91.9	88.3	41.4	52.8	67.5	60.8
6	56.4	77.8	91.3	88.4	41.4	52.9	67.3	61.0
7	55.4	78.4	90.9	88.5	40.6	53.7	67.1	60.1
8	54.7	76.9	90.3	88.3	40.0	51.9	66.0	59.3
9	55.5	77.4	90.6	88.7	41.0	53.6	67.2	60.8
10	55.9	78.2	90.7	89.1	41.4	53.4	66.5	60.5
11	55.3	78.4	90.8	89.2	40.3	53.4	66.2	60.7
12	53.8	78.3	91.0	89.3	38.0	53.7	66.7	60.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7〉 산업별 취업자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 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2000	2,243	17	4,293	64	1,580	3,833	1,919	1,068	192	752
2001	2,148	18	4,267	58	1,585	3,931	1,943	1,114	208	760
2002	2,069	18	4,241	52	1,746	3,991	2,007	1,140	231	734
2003	1,950	17	4,205	76	1,816	3,871	1,981	1,084	249	751
2004	1,825	16	4,290	72	1,820	3,805	2,057	1,128	248	738
2001. 3/4	2,379	19	4,228	56	1,642	3,958	1,955	1,124	207	752
4/4	2,131	18	4,302	55	1,679	4,017	1,958	1,141	215	750
2002. 1/4	1,727	20	4,242	53	1,601	3,996	1,996	1,126	220	751
2/4	2,251	19	4,258	56	1,791	3,980	2,024	1,134	230	725
3/4	2,252	16	4,214	50	1,781	4,000	2,018	1,140	238	731
4/4	2,046	17	4,251	50	1,812	3,988	1,989	1,159	238	729
2003. 1/4	1,699	16	4,168	74	1,734	3,972	1,947	1,085	255	754
2/4	2,127	17	4,238	77	1,854	3,890	1,944	1,081	252	768
3/4	2,090	17	4,166	78	1,821	3,801	2,004	1,078	243	744
4/4	1,882	17	4,246	75	1,854	3,821	2,029	1,094	246	738
2004. 1/4	1,609	19	4,274	74	1,762	3,851	2,061	1,102	244	743
2/4	1,967	15	4,308	73	1,864	3,811	2,055	1,129	240	740
3/4	1,933	14	4,278	71	1,790	3,762	2,057	1,135	255	736
4/4	1,789	15	4,296	72	1,864	3,797	2,056	1,144	255	734
2002. 6	2,289	17	4,241	55	1,811	4,001	2,012	1,144	236	713
7	2,249	16	4,213	52	1,817	4,043	2,036	1,148	244	726
8	2,237	15	4,190	52	1,718	3,962	2,015	1,133	232	735
9	2,270	16	4,239	46	1,807	3,994	2,002	1,139	237	732
10	2,276	16	4,254	47	1,810	3,985	1,977	1,155	240	729
11	2,094	18	4,257	51	1,822	3,980	1,988	1,159	236	724
12	1,769	17	4,240	53	1,805	4,000	2,001	1,164	237	733
2003. 1	1,596	15	4,144	74	1,704	4,034	1,993	1,084	260	751
2	1,646	15	4,152	73	1,698	3,973	1,947	1,091	254	754
3	1,855	18	4,209	75	1,801	3,908	1,902	1,082	253	755
4	2,076	17	4,238	74	1,844	3,910	1,907	1,084	249	771
5	2,154	16	4,252	78	1,852	3,889	1,956	1,078	253	774
6	2,152	18	4,225	80	1,864	3,870	1,969	1,080	255	759
7	2,102	18	4,220	78	1,843	3,858	2,024	1,075	255	750
8	2,078	16	4,115	78	1,799	3,768	2,004	1,073	240	741
9	2,090	18	4,164	77	1,820	3,776	1,985	1,085	234	741
10	2,112	17	4,236	77	1,834	3,823	1,981	1,089	235	738
11	1,958	16	4,246	75	1,876	3,806	2,040	1,092	252	733
12	1,575	20	4,257	73	1,851	3,836	2,066	1,100	250	744
2004. 1	1,489	20	4,254	74	1,740	3,866	2,073	1,094	249	750
2	1,555	20	4,272	72	1,728	3,842	2,077	1,108	244	741
3	1,781	18	4,309	75	1,817	3,845	2,033	1,105	238	738
4	1,932	17	4,323	74	1,869	3,840	2,033	1,116	236	739
5	1,981	16	4,286	72	1,858	3,791	2,070	1,131	240	744
6	1,989	14	4,316	73	1,865	3,801	2,061	1,141	244	737
7	1,924	13	4,311	71	1,786	3,789	2,099	1,141	256	735
8	1,933	13	4,226	71	1,751	3,713	2,024	1,126	253	734
9	1,942	15	4,297	72	1,832	3,786	2,047	1,138	256	740
10	1,990	16	4,323	73	1,873	3,780	2,031	1,140	255	732
11	1,829	15	4,304	71	1,877	3,814	2,049	1,139	253	732
12	1,549	15	4,261	70	1,843	3,798	2,089	1,153	257	737

주 : 2000년부터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단위: 천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351	1,010	758	1,191	428	365	886	186	19
381	1,149	701	1,236	484	393	975	206	16
413	1,251	702	1,335	551	418	1,038	215	18
423	1,303	757	1,484	539	425	994	192	22
453	1,461	768	1,507	594	458	1,169	125	24
387	1,179	684	1,243	486	398	984	204	15
399	1,180	691	1,250	505	396	999	222	15
405	1,205	697	1,299	510	413	1,015	220	16
405	1,256	713	1,315	551	425	1,056	218	18
416	1,275	689	1,341	564	423	1,038	212	19
425	1,266	709	1,383	578	412	1,043	211	21
401	1,201	738	1,471	538	415	960	180	24
420	1,261	764	1,489	521	409	973	196	21
427	1,361	761	1,503	542	439	996	205	21
445	1,391	763	1,472	555	437	1,048	188	23
448	1,404	758	1,465	568	451	1,099	144	25
451	1,438	771	1,522	588	457	1,171	118	25
456	1,480	770	1,517	603	461	1,196	111	24
456	1,524	771	1,523	615	465	1,209	125	23
410	1,273	711	1,318	562	420	1,072	213	18
416	1,284	693	1,334	561	426	1,042	214	18
413	1,261	687	1,320	570	423	1,034	206	19
419	1,281	687	1,368	560	420	1,039	215	20
430	1,271	705	1,377	573	417	1,044	213	21
424	1,268	713	1,386	579	412	1,046	212	21
421	1,260	708	1,387	581	408	1,040	206	21
401	1,191	727	1,453	547	418	970	177	23
393	1,171	734	1,489	548	411	951	172	26
408	1,240	752	1,470	518	417	959	191	24
407	1,238	756	1,479	531	404	954	192	24
420	1,267	769	1,491	512	407	982	199	21
433	1,276	767	1,498	520	418	984	196	20
436	1,302	768	1,523	538	444	998	205	21
420	1,370	757	1,486	541	438	986	196	20
424	1,412	758	1,499	547	434	1,004	213	21
446	1,385	764	1,477	548	436	1,020	211	22
440	1,400	766	1,469	559	430	1,058	186	24
450	1,388	760	1,470	556	446	1,065	166	24
452	1,398	741	1,459	559	450	1,086	157	26
448	1,389	762	1,452	570	461	1,104	136	25
443	1,424	772	1,486	576	442	1,106	138	24
448	1,433	782	1,499	589	448	1,136	136	25
452	1,447	770	1,522	585	466	1,174	108	25
454	1,434	762	1,544	590	459	1,204	110	25
457	1,448	772	1,548	598	468	1,199	113	25
447	1,481	760	1,483	597	455	1,184	108	24
464	1,510	778	1,519	616	459	1,204	113	23
458	1,502	768	1,523	621	467	1,206	121	23
455	1,539	772	1,529	612	461	1,204	126	23
456	1,531	774	1,516	612	466	1,216	129	24

〈표 8〉 산업별 취업자(여자)

	농림 어업	광업	제 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 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2000	1,072	0	1,535	11	134	1,774	1,304	94	56	405
2001	1,016	1	1,519	14	136	1,847	1,321	98	58	417
2002	984	1	1,518	11	150	1,865	1,364	96	59	397
2003	923	1	1,475	12	148	1,832	1,349	89	78	385
2004	866	1	1,493	13	162	1,795	1,421	104	79	374
2001. 3/4	1,164	1	1,494	14	141	1,863	1,320	99	56	408
4/4	1,015	1	1,555	15	147	1,893	1,329	99	60	405
2002. 1/4	760	1	1,503	14	141	1,867	1,349	100	59	408
2/4	1,112	1	1,537	13	160	1,868	1,380	93	59	388
3/4	1,100	1	1,511	9	149	1,872	1,377	94	61	395
4/4	963	2	1,521	9	150	1,855	1,349	99	59	399
2003. 1/4	749	1	1,452	9	138	1,880	1,310	87	82	383
2/4	1,041	1	1,496	13	148	1,850	1,322	91	78	396
3/4	1,013	1	1,450	13	154	1,800	1,365	84	76	381
4/4	889	1	1,501	11	151	1,798	1,401	94	74	380
2004. 1/4	717	1	1,485	12	148	1,823	1,421	101	76	383
2/4	961	1	1,506	14	167	1,806	1,420	104	76	377
3/4	934	1	1,482	14	163	1,773	1,426	105	81	365
4/4	851	1	1,501	13	170	1,781	1,419	107	83	370
2002. 6	1,1491	1	1,537	12	160	1,872	1,374	94	60	377
7	,104	1	1,509	10	150	1,890	1,389	96	65	389
8	1,081	1	1,492	10	146	1,839	1,377	91	58	396
9	1,115	2	1,534	7	152	1,887	1,365	93	59	399
10	1,117	2	1,545	8	146	1,852	1,347	95	62	402
11	955	3	1,519	9	149	1,852	1,347	103	57	396
12	778	2	1,499	9	155	1,860	1,353	99	58	399
2003. 1	687	1	1,437	8	136	1,905	1,336	86	80	380
2	715	0	1,429	9	133	1,873	1,306	86	86	382
3	846	1	1,490	9	143	1,864	1,288	90	79	386
4	1,001	1	1,494	10	147	1,855	1,298	94	76	395
5	1,055	0	1,498	14	147	1,848	1,328	89	79	403
6	1,067	1	1,495	14	150	1,848	1,341	91	79	391
7	1,020	1	1,475	13	157	1,828	1,370	86	81	386
8	1,000	1	1,414	14	153	1,775	1,370	81	75	379
9	1,017	1	1,461	13	154	1,797	1,354	85	72	379
10	1,031	1	1,503	11	148	1,810	1,362	92	73	380
11	943	1	1,511	12	155	1,783	1,408	93	74	379
12	694	2	1,489	10	150	1,800	1,432	96	76	381
2004. 1	639	2	1,471	11	144	1,833	1,423	99	77	386
2	682	1	1,480	12	151	1,821	1,429	103	78	382
3	829	1	1,502	14	149	1,814	1,410	100	74	381
4	931	1	1,518	14	168	1,818	1,411	103	75	382
5	971	1	1,497	14	165	1,801	1,422	106	77	379
6	981	1	1,502	15	168	1,800	1,427	103	76	370
7	923	1	1,497	15	157	1,788	1,456	106	82	367
8	932	1	1,446	13	156	1,740	1,403	102	79	362
9	948	1	1,504	13	176	1,789	1,418	107	81	367
10	981	1	1,524	13	173	1,768	1,399	107	83	371
11	880	1	1,502	12	170	1,791	1,409	106	83	368
12	691	1	1,477	12	166	1,783	1,448	107	82	371

주: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단위: 천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98	321	223	730	304	135	389	183	1
111	365	205	768	349	146	419	200	2
127	402	199	844	394	158	438	212	3
129	399	188	956	385	156	410	188	7
139	451	213	991	419	173	540	121	7
115	375	196	768	351	149	421	197	2
116	389	192	776	370	141	428	217	2
120	398	191	809	366	152	424	217	2
121	406	207	830	397	164	452	215	3
131	399	194	846	401	159	435	208	3
137	405	206	892	413	157	442	208	4
121	371	176	927	384	150	393	176	7
130	388	190	957	380	151	396	191	7
130	414	196	980	384	161	407	201	7
133	422	190	960	393	161	444	184	6
131	428	194	950	401	166	489	141	6
137	445	209	1,006	417	172	543	115	6
145	458	226	998	425	175	560	108	7
143	474	224	1,010	434	179	569	121	7
123	403	206	835	405	161	470	211	3
129	406	197	842	398	159	436	210	3
131	390	195	824	408	160	436	202	3
132	401	188	873	395	159	434	212	3
142	407	206	884	407	160	440	210	3
137	405	209	896	414	158	442	210	3
133	402	202	896	417	155	444	203	4
117	373	175	907	387	155	396	173	7
118	356	175	933	389	148	392	169	7
129	386	178	942	375	147	392	186	7
126	385	183	948	388	147	386	186	7
132	389	195	958	374	148	404	196	7
131	389	191	964	378	158	397	192	5
130	398	200	988	385	164	402	201	6
130	412	196	968	382	163	408	193	6
130	431	194	984	384	156	410	208	7
135	423	193	969	389	157	417	206	6
130	423	190	953	397	159	451	183	6
134	419	187	957	393	168	463	164	6
135	420	184	945	394	166	483	155	6
132	425	198	933	403	169	493	134	6
128	440	199	973	405	164	493	134	6
133	443	208	990	417	170	518	132	6
138	451	210	1,007	413	177	546	105	6
140	441	209	1,021	420	169	565	107	6
144	446	220	1,019	421	174	563	109	6
142	460	217	970	419	172	549	105	6
148	467	241	1,004	436	180	567	110	7
148	458	230	1,009	436	177	566	119	7
143	482	223	1,016	429	181	571	122	7
140	483	220	1,006	438	178	571	124	8

〈표 9〉 직업별 취업자

(단위: 천명)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 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임 업 및 어업숙 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 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 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2000		465	1,403	2,074	2,512	2,675	2,826	2,115	2,688	2,292	2,107
2001		524	1,498	2,079	2,671	2,723	2,933	2,035	2,638	2,332	2,138
2002		570	1,577	2,115	2,822	2,843	2,952	1,964	2,697	2,373	2,255
2003		598	1,702	2,140	3,172	2,735	2,835	1,834	2,407	2,387	2,329
2004		576	1,731	2,324	3,188	2,895	2,749	1,700	2,455	2,490	2,449
2001.	1/4	484	1,465	2,072	2,565	2,673	2,867	1,633	2,556	2,313	1,998
	2/4	525	1,520	2,065	2,702	2,726	2,936	2,247	2,658	2,322	2,138
	3/4	526	1,504	2,096	2,704	2,728	2,950	2,256	2,639	2,321	2,176
	4/4	562	1,506	2,082	2,714	2,764	2,980	2,004	2,700	2,372	2,240
2002.	1/4	573	1,519	2,112	2,764	2,803	2,963	1,644	2,629	2,334	2,170
	2/4	581	1,579	2,107	2,807	2,864	2,943	2,126	2,749	2,381	2,286
	3/4	571	1,598	2,131	2,815	2,859	2,964	2,151	2,709	2,377	2,239
	4/4	555	1,612	2,111	2,902	2,847	2,938	1,937	2,699	2,401	2,324
2003.	1/4	604	1,702	2,029	3,184	2,639	2,918	1,603	2,346	2,380	2,228
	2/4	585	1,707	2,109	3,212	2,696	2,834	2,001	2,437	2,379	2,343
	3/4	601	1,713	2,190	3,160	2,771	2,792	1,976	2,393	2,365	2,333
	4/4	600	1,684	2,234	3,132	2,833	2,798	1,756	2,453	2,424	2,411
2004.	1/4	580	1,697	2,271	3,154	2,873	2,818	1,501	2,110	2,441	2,329
	2/4	580	1,744	2,329	3,181	2,891	2,765	1,827	2,476	2,494	2,457
	3/4	580	1,729	2,330	3,213	2,881	2,712	1,817	2,432	2,508	2,445
	4/4	565	1,754	2,364	3,205	2,933	2,701	1,655	2,474	2,519	2,563
2002.	7	581	1,584	2,147	2,811	2,893	2,998	2,150	2,728	2,369	2,272
	8	567	1,593	2,128	2,802	2,843	2,939	2,141	2,676	2,367	2,166
	9	566	1,618	2,118	2,831	2,841	2,956	2,162	2,724	2,395	2,278
	10	554	1,613	2,111	2,861	2,849	2,943	2,154	2,719	2,399	2,335
	11	554	1,618	2,106	2,898	2,852	2,921	1,988	2,715	2,403	2,335
	12	555	1,605	2,115	2,949	2,841	2,951	1,668	2,665	2,400	2,302
2003.	1	611	1,707	1,968	3,205	2,654	2,996	1,508	2,332	2,372	2,209
	2	600	1,715	2,037	3,168	2,640	2,924	1,558	2,308	2,383	2,165
	3	601	1,683	2,081	3,179	2,624	2,835	1,742	2,399	2,384	2,309
	4	580	1,702	2,090	3,183	2,641	2,837	1,965	2,436	2,384	2,339
	5	583	1,710	2,105	3,234	2,721	2,839	2,027	2,452	2,375	2,324
	6	591	1,709	2,133	3,220	2,726	2,825	2,010	2,425	2,379	2,365
	7	594	1,726	2,179	3,220	2,802	2,822	1,981	2,397	2,377	2,359
	8	605	1,704	2,184	3,132	2,756	2,772	1,973	2,362	2,354	2,285
	9	605	1,710	2,208	3,130	2,756	2,782	1,973	2,419	2,365	2,354
	10	606	1,695	2,211	3,142	2,767	2,805	1,980	2,430	2,412	2,404
	11	608	1,687	2,231	3,123	2,837	2,787	1,817	2,489	2,414	2,432
	12	586	1,671	2,260	3,131	2,896	2,800	1,470	2,438	2,445	2,398
2004.	1	580	1,683	2,263	3,150	2,875	2,843	1,409	2,407	2,425	2,301
	2	579	1,690	2,246	3,177	2,891	2,816	1,451	2,421	2,438	2,296
	3	581	1,718	2,304	3,135	2,853	2,794	1,644	2,491	2,460	2,391
	4	579	1,731	2,321	3,161	2,878	2,798	1,794	2,498	2,476	2,436
	5	576	1,754	2,326	3,186	2,906	2,753	1,847	2,468	2,485	2,436
	6	580	1,744	2,329	3,181	2,891	2,765	1,827	2,476	2,494	2,457
	7	580	1,751	2,333	3,235	2,926	2,722	1,808	2,417	2,514	2,464
	8	584	1,711	2,303	3,172	2,825	2,694	1,834	2,396	2,496	2,367
	9	576	1,725	2,354	3,232	2,892	2,720	1,809	2,482	2,513	2,505
	10	568	1,749	2,361	3,211	2,896	2,697	1,843	2,490	2,525	2,562
	11	562	1,770	2,367	3,199	2,925	2,703	1,690	2,475	2,517	2,594
	12	565	1,743	2,363	3,205	2,979	2,703	1,433	2,457	2,514	2,533

주: 2000년 이후의 자료는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임(이전자료는 제4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10〉 직업별 취업자(여자)

(단위 : 천명)

	고위임 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 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임업 및 어업수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 능 종사자	장치/기 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2000	23	615	587	1,285	1,815	1,549	984	623	305	983
2001	31	632	627	1,382	1,873	1,618	935	590	308	994
2002	32	669	670	1,476	1,965	1,613	907	540	302	1,051
2003	35	777	729	1,496	1,852	1,535	829	436	305	1,116
2004	40	786	756	1,582	2,006	1,493	764	424	345	1,168
2001. 1/4	31	631	620	1,328	1,824	1,588	676	591	308	929
2/4	30	635	626	1,384	1,887	1,622	1,061	597	312	996
3/4	30	624	633	1,390	1,872	1,628	1,078	576	308	997
4/4	33	638	631	1,425	1,910	1,634	924	597	306	1,054
2002. 1/4	35	644	654	1,440	1,922	1,620	698	558	295	1,016
2/4	35	667	667	1,476	1,987	1,613	1,019	555	298	1,089
3/4	30	668	679	1,475	1,982	1,621	1,027	527	306	1,030
4/4	27	695	682	1,512	1,967	1,598	885	519	312	1,070
2003. 1/4	35	785	707	1,474	1,763	1,567	674	429	303	1,060
2/4	32	790	721	1,500	1,819	1,543	934	446	301	1,138
3/4	36	779	741	1,517	1,877	1,513	921	426	297	1,111
4/4	38	754	746	1,492	1,949	1,516	784	440	319	1,155
2004. 1/4	35	756	746	1,515	1,974	1,538	625	437	335	1,112
2/4	41	796	763	1,577	2,005	1,508	846	431	346	1,169
3/4	41	790	753	1,613	2,008	1,467	841	416	351	1,165
4/4	43	803	763	1,621	2,035	1,459	746	412	349	1,226
2002. 7	31	658	681	1,479	2,004	1,633	1,031	526	300	1,040
8	30	665	680	1,466	1,969	1,595	1,013	522	306	993
9	29	681	677	1,479	1,974	1,635	1,037	531	311	1,057
10	27	693	684	1,493	1,973	1,601	1,028	531	315	1,090
11	27	701	679	1,510	1,966	1,591	919	526	313	1,069
12	27	692	683	1,534	1,961	1,600	709	500	307	1,051
2003. 1	39	784	690	1,481	1,768	1,601	624	421	307	1,033
2	32	791	709	1,463	1,760	1,562	648	423	297	1,018
3	35	780	722	1,478	1,761	1,536	750	444	304	1,128
4	32	790	720	1,469	1,783	1,546	904	451	301	1,132
5	31	793	712	1,512	1,834	1,547	952	448	300	1,135
6	33	786	730	1,520	1,840	1,537	947	439	302	1,148
7	35	790	742	1,540	1,885	1,525	925	429	300	1,122
8	37	770	738	1,504	1,873	1,492	917	417	292	1,078
9	37	776	742	1,506	1,872	1,520	922	432	299	1,132
10	39	762	745	1,509	1,895	1,522	927	435	309	1,164
11	37	749	744	1,490	1,953	1,509	818	452	322	1,176
12	37	752	748	1,478	1,999	1,517	607	434	326	1,124
2004. 1	34	753	744	1,498	1,976	1,558	567	427	328	1,086
2	34	749	737	1,522	1,976	1,536	596	435	340	1,106
3	38	764	757	1,526	1,971	1,520	711	449	338	1,143
4	38	777	766	1,556	1,994	1,525	815	444	349	1,173
5	41	804	760	1,584	2,004	1,504	865	428	341	1,155
6	44	805	762	1,592	2,018	1,495	858	421	348	1,178
7	41	805	758	1,616	2,045	1,478	832	411	345	1,163
8	42	774	735	1,583	1,962	1,449	849	405	349	1,130
9	40	792	767	1,639	2,017	1,474	841	433	359	1,201
10	42	799	764	1,625	2,005	1,453	865	419	355	1,242
11	43	809	764	1,619	2,027	1,459	769	411	351	1,243
12	43	800	762	1,618	2,071	1,466	603	407	351	1,192

주 : 2000년 이후의 자료는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임(이전자료는 제4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11〉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단위 : 천명)

	비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가족 종사자	임금근로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1998	7,641	1,392	4,225	2,025	12,296	6,534	4,043	1,720
1999	7,628	1,351	4,351	1,925	12,663	6,135	4,255	2,274
2000	7,795	1,458	4,407	1,931	13,360	6,395	4,608	2,357
2001	7,913	1,554	4,497	1,863	13,659	6,714	4,726	2,218
2002	7,988	1,617	4,574	1,797	14,181	6,862	4,886	2,433
2003	7,736	1,629	4,413	1,694	14,402	7,269	5,004	2,130
2004	7,663	1,679	4,431	1,553	14,894	7,625	5,082	2,188
2000.3/4	8,087	1,487	4,547	2,053	13,399	6,429	4,615	2,356
4/4	7,842	1,507	4,432	1,903	13,578	6,551	4,655	2,372
2001.1/4	7,430	1,504	4,248	1,678	13,197	6,593	4,588	2,017
2/4	8,070	1,558	4,544	1,967	13,769	6,762	4,760	2,247
3/4	8,166	1,558	4,642	1,967	13,734	6,739	4,722	2,273
4/4	7,987	1,596	4,552	1,840	13,936	6,764	4,835	2,237
2002.1/4	7,647	1,613	4,387	1,646	13,864	6,759	4,821	2,283
2/4	8,168	1,631	4,662	1,876	14,255	6,855	4,908	2,492
3/4	8,190	1,630	4,669	1,892	14,225	6,878	4,889	2,459
4/4	7,944	1,593	4,576	1,775	14,382	6,957	4,927	2,498
2003.1/4	7,465	1,567	4,298	1,601	14,168	7,176	4,904	2,088
2/4	7,794	1,590	4,433	1,771	14,509	7,250	5,082	2,177
3/4	7,939	1,669	4,502	1,767	14,356	7,268	4,989	2,099
4/4	7,748	1,690	4,421	1,637	14,577	7,383	5,059	2,155
2004.1/4	7,490	1,676	4,325	1,489	14,614	7,460	5,067	2,087
2/4	7,762	1,676	4,459	1,626	14,983	7,686	5,199	2,197
3/4	7,769	1,684	4,493	1,593	14,878	7,671	5,035	2,172
4/4	7,631	1,680	4,446	1,505	15,102	7,781	5,026	2,295
2002. 7	8,182	1,634	4,656	1,891	14,352	6,860	4,940	2,552
8	8,193	1,634	4,674	1,884	14,030	6,851	4,806	2,372
9	8,196	1,621	4,675	1,900	14,294	6,923	4,919	2,452
10	8,192	1,605	4,692	1,896	14,346	6,944	4,899	2,503
11	7,995	1,592	4,607	1,796	14,394	6,950	4,943	2,501
12	7,646	1,582	4,431	1,634	14,405	6,977	4,940	2,489
2003. 1	7,426	1,560	4,272	1,594	14,137	7,142	4,893	2,102
2	7,451	1,571	4,295	1,586	14,047	7,158	4,853	2,035
3	7,518	1,570	4,326	1,622	14,320	7,227	4,966	2,127
4	7,672	1,568	4,378	1,726	14,484	7,237	5,079	2,168
5	7,851	1,592	4,460	1,800	14,519	7,266	5,082	2,171
6	7,859	1,611	4,460	1,788	14,525	7,245	5,086	2,193
7	7,855	1,639	4,439	1,777	14,601	7,239	5,152	2,210
8	7,978	1,680	4,535	1,762	14,149	7,236	4,872	2,041
9	7,983	1,689	4,533	1,761	14,318	7,331	4,942	2,045
10	7,973	1,692	4,510	1,771	14,479	7,350	5,025	2,104
11	7,799	1,702	4,443	1,653	14,627	7,388	5,045	2,194
12	7,472	1,677	4,311	1,485	14,624	7,411	5,048	2,166
2004. 1	7,428	1,676	4,289	1,463	14,508	7,426	5,005	2,077
2	7,456	1,668	4,313	1,475	14,549	7,453	5,044	2,053
3	7,585	1,683	4,374	1,529	14,785	7,501	5,152	2,132
4	7,724	1,673	4,437	1,612	14,948	7,553	5,203	2,192
5	7,797	1,673	4,482	1,641	14,942	7,600	5,167	2,174
6	7,764	1,679	4,460	1,624	15,058	7,606	5,228	2,225
7	7,688	1,666	4,445	1,577	15,063	7,569	5,303	2,191
8	7,797	1,685	4,507	1,606	14,584	7,700	4,813	2,071
9	7,822	1,700	4,527	1,595	14,987	7,744	4,989	2,254
10	7,835	1,699	4,511	1,626	15,066	7,776	4,981	2,310
11	7,673	1,678	4,475	1,521	15,129	7,792	5,020	2,317
12	7,385	1,665	4,352	1,369	15,109	7,776	5,076	2,25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12〉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여성)

(단위 : 천명)

	비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 종사자	임금근로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1998	3,345	243	1,304	1,798	4,745	1,650	2,257	839
1999	3,313	248	1,388	1,677	5,025	1,562	2,289	1,174
2000	3,372	263	1,421	1,688	5,397	1,679	2,496	1,222
2001	3,382	296	1,457	1,629	5,609	1,861	2,589	1,159
2002	3,368	304	1,482	1,582	5,857	1,968	2,682	1,207
2003	3,138	290	1,328	1,519	5,970	2,109	2,826	1,036
2004	3,127	321	1,420	1,387	6,237	2,289	2,869	1,079
2000.3/4	3,547	270	1,476	1,800	5,409	1,698	2,510	1,201
4/4	3,378	279	1,428	1,671	5,524	1,764	2,539	1,220
2001.1/4	3,111	287	1,359	1,465	5,413	1,802	2,523	1,088
2/4	3,493	300	1,463	1,729	5,659	1,865	2,626	1,168
3/4	3,530	294	1,520	1,717	5,606	1,869	2,574	1,163
4/4	3,394	302	1,485	1,606	5,759	1,908	2,633	1,217
2002.1/4	3,173	303	1,435	1,435	5,708	1,913	2,623	1,173
2/4	3,494	313	1,519	1,662	5,911	1,979	2,695	1,237
3/4	3,482	308	1,504	1,670	5,862	1,977	2,684	1,202
4/4	3,323	293	1,468	1,562	5,944	2,005	2,725	1,215
2003.1/4	2,969	270	1,260	1,439	5,827	2,067	2,733	1,027
2/4	3,192	283	1,309	1,600	6,033	2,070	2,894	1,069
3/4	3,252	303	1,372	1,576	5,966	2,130	2,824	1,011
4/4	3,138	304	1,372	1,463	6,055	2,169	2,851	1,036
2004.1/4	3,002	307	1,367	1,328	6,073	2,188	2,849	1,036
2/4	3,207	319	1,425	1,464	6,274	2,260	2,939	1,075
3/4	3,182	324	1,438	1,420	6,262	2,327	2,844	1,091
4/4	3,117	334	1,449	1,334	6,340	2,379	2,844	1,116
2002. 7	3,485	311	1,503	1,671	5,898	1,965	2,709	1,224
8	3,468	312	1,496	1,659	5,772	1,969	2,629	1,174
9	3,494	302	1,514	1,678	5,917	1,996	2,714	1,207
10	3,491	295	1,521	1,674	5,944	2,006	2,702	1,236
11	3,357	291	1,477	1,588	5,946	2,001	2,738	1,206
12	3,122	292	1,406	1,424	5,943	2,007	2,735	1,202
2003. 1	2,942	263	1,246	1,434	5,805	2,084	2,680	1,041
2	2,951	276	1,259	1,415	5,754	2,048	2,713	993
3	3,015	273	1,275	1,467	5,923	2,068	2,807	1,048
4	3,111	269	1,277	1,564	6,017	2,054	2,900	1,062
5	3,229	285	1,316	1,628	6,036	2,080	2,894	1,062
6	3,236	296	1,333	1,606	6,047	2,075	2,889	1,083
7	3,224	296	1,343	1,585	6,069	2,085	2,911	1,073
8	3,253	307	1,380	1,566	5,866	2,133	2,762	971
9	3,278	307	1,394	1,576	5,962	2,174	2,799	989
10	3,274	302	1,386	1,586	6,032	2,173	2,848	1,011
11	3,166	307	1,379	1,480	6,085	2,164	2,858	1,063
12	2,973	301	1,350	1,322	6,048	2,170	2,846	1,032
2004. 1	2,959	303	1,358	1,298	6,015	2,168	2,827	1,020
2	2,976	303	1,358	1,315	6,055	2,177	2,837	1,042
3	3,070	314	1,384	1,372	6,148	2,219	2,882	1,046
4	3,176	314	1,411	1,451	6,262	2,248	2,934	1,079
5	3,228	320	1,430	1,478	6,257	2,265	2,930	1,062
6	3,218	323	1,433	1,462	6,302	2,267	2,952	1,082
7	3,155	322	1,424	1,409	6,336	2,262	2,989	1,086
8	3,180	323	1,430	1,427	6,096	2,348	2,708	1,040
9	3,210	327	1,459	1,424	6,352	2,373	2,834	1,146
10	3,235	333	1,462	1,439	6,336	2,376	2,828	1,132
11	3,142	332	1,458	1,352	6,353	2,381	2,845	1,127
12	2,974	336	1,427	1,211	6,330	2,380	2,860	1,09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13〉 성별·연령대별 실업자

(단위: 천명)

		남 자						여 자					
		전 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 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998		1,005	404	258	189	120	33	486	251	106	84	35	11
1999		926	355	236	182	119	35	448	219	100	85	35	9
2000		613	242	159	124	68	20	300	160	58	56	20	6
2001		561	229	141	112	60	19	284	159	52	49	20	4
2002		467	207	126	77	42	16	241	135	51	35	14	6
2003		488	220	122	82	49	15	289	163	59	46	17	5
2004		509	224	127	86	54	18	304	167	59	52	20	5
2001.3/4		497	211	126	93	52	15	258	135	49	52	18	4
4/4		493	222	121	86	48	16	258	147	48	40	19	5
2002.1/4		531	235	136	87	52	20	298	175	55	44	16	8
2/4		455	199	122	78	41	16	234	128	51	32	15	7
3/4		435	187	120	75	38	15	217	118	48	32	14	6
4/4		449	206	127	67	36	13	215	118	49	32	12	4
2003.1/4		503	239	121	76	54	13	303	185	56	42	15	4
2/4		470	208	116	82	49	15	281	154	62	44	18	3
3/4		478	205	123	88	48	14	278	145	60	50	18	5
4/4		499	228	129	82	44	16	295	166	59	47	16	7
2004.1/4		527	244	119	93	53	18	350	205	61	58	20	7
2/4		482	215	120	76	53	19	304	168	56	53	21	7
3/4		502	208	132	89	54	18	285	147	60	52	19	7
4/4		526	229	136	87	55	18	276	149	57	47	20	3
2002.	9	407	175	114	69	32	16	199	106	43	32	13	5
	10	434	190	127	72	31	15	205	112	52	27	12	2
	11	441	198	132	67	34	11	207	115	47	30	10	4
	12	470	231	122	62	42	13	232	127	47	38	15	5
2003.	1	487	236	117	72	47	15	302	188	56	39	16	3
	2	518	250	124	78	54	12	304	192	54	41	13	3
	3	503	231	121	79	60	13	303	176	58	46	17	7
	4	471	210	115	79	51	17	285	152	66	46	17	4
	5	465	207	116	82	47	14	278	152	60	44	19	4
	6	474	207	118	85	50	14	281	159	60	41	18	2
	7	485	218	120	86	46	16	296	167	58	46	20	5
	8	480	200	123	94	50	13	277	144	59	53	17	4
	9	469	196	127	83	49	14	261	124	64	50	17	6
	10	492	218	133	81	46	14	274	139	63	47	19	7
	11	486	219	129	81	41	16	306	175	58	50	16	7
	12	519	247	124	84	45	19	306	185	56	44	15	6
2004.	1	540	264	125	83	48	19	315	185	56	48	18	8
	2	536	244	118	98	57	19	364	216	68	54	19	7
	3	506	223	116	98	54	16	372	213	60	71	23	6
	4	481	198	126	82	56	19	328	178	62	58	23	7
	5	489	220	117	77	54	21	300	164	55	53	20	7
	6	476	226	118	68	48	16	286	161	51	48	20	6
	7	521	229	136	84	54	19	292	158	56	52	20	7
	8	510	203	137	92	59	19	291	149	59	59	16	8
	9	473	193	122	92	50	16	273	133	66	46	22	7
	10	501	212	136	83	53	17	270	143	57	50	18	4
	11	520	223	132	90	55	21	259	138	53	46	20	3
	12	555	253	139	88	59	17	299	167	62	46	22	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14〉 성별·연령대별 실업률

(단위: %)

	남 자						여 자					
	전 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 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998	7.8	14.1	6.2	6.3	6.6	3.3	5.7	9.9	4.8	4.4	3.1	1.3
1999	7.2	12.8	5.7	5.8	6.5	3.3	5.1	8.8	4.5	4.2	3.0	1.0
2000	4.7	8.9	3.9	3.8	3.7	1.9	3.3	6.3	2.6	2.6	1.7	0.6
2001	4.3	8.7	3.4	3.3	3.2	1.6	3.1	6.2	2.3	2.2	1.6	0.4
2002	3.5	8.0	3.1	2.1	2.2	1.3	2.5	5.3	2.2	1.5	1.2	0.6
2003	3.6	8.9	3.0	2.2	2.4	1.2	3.1	6.5	2.6	1.9	1.4	0.5
2004	3.7	9.2	3.1	2.3	2.6	1.4	3.1	6.6	2.6	2.1	1.5	0.6
2001.3/4	3.7	8.0	3.1	2.7	2.8	1.3	2.7	5.3	2.2	2.3	1.5	0.4
4/4	3.7	8.6	3.0	2.4	2.6	1.3	2.7	5.7	2.1	1.7	1.5	0.5
2002.1/4	4.0	8.9	3.3	2.5	2.9	1.8	3.2	6.7	2.5	1.9	1.4	0.9
2/4	3.4	7.7	2.9	2.2	2.1	1.3	2.4	5.0	2.2	1.3	1.2	0.7
3/4	3.2	7.3	2.9	2.1	1.9	1.2	2.3	4.6	2.1	1.3	1.1	0.6
4/4	3.3	8.2	3.1	1.8	1.8	1.0	2.3	4.7	2.2	1.3	1.0	0.4
2003.1/4	3.8	9.5	2.9	2.1	2.7	1.2	3.3	7.3	2.5	1.8	1.3	0.5
2/4	3.5	8.5	2.8	2.2	2.4	1.2	3.0	6.2	2.7	1.8	1.4	0.3
3/4	3.5	8.3	3.0	2.3	2.4	1.2	2.9	5.7	2.7	2.0	1.4	0.5
4/4	3.7	9.2	3.1	2.2	2.2	1.3	3.1	6.7	2.6	1.9	1.3	0.7
2004.1/4	3.9	9.8	2.9	2.5	2.6	1.5	3.7	8.0	2.7	2.3	1.6	0.8
2/4	3.5	8.9	2.9	2.0	2.5	1.4	3.1	6.6	2.4	2.1	1.6	0.6
3/4	3.7	8.7	3.2	2.3	2.6	1.4	2.9	5.7	2.7	2.0	1.5	0.7
4/4	3.8	9.5	3.3	2.3	2.6	1.4	2.8	5.9	2.5	1.8	1.5	0.3
2002. 9	3.0	7.0	2.8	1.9	1.6	1.2	2.1	4.2	1.9	1.3	1.0	0.5
10	3.2	7.6	3.1	2.0	1.6	1.1	2.1	4.5	2.3	1.1	0.9	0.2
11	3.3	7.9	3.2	1.8	1.7	0.9	2.2	4.5	2.1	1.2	0.8	0.4
12	3.5	9.1	3.0	1.7	2.2	1.1	2.5	4.9	2.1	1.6	1.3	0.5
2003. 1	3.7	9.3	2.9	2.0	2.4	1.3	3.3	7.3	2.5	1.7	1.4	0.4
2	3.9	9.9	3.0	2.1	2.8	1.1	3.4	7.5	2.4	1.8	1.2	0.4
3	3.8	9.3	2.9	2.2	3.0	1.1	3.3	7.0	2.6	1.9	1.5	0.8
4	3.5	8.5	2.8	2.1	2.5	1.4	3.0	6.1	2.9	1.9	1.4	0.4
5	3.4	8.4	2.8	2.2	2.3	1.1	2.9	6.1	2.6	1.8	1.5	0.4
6	3.5	8.5	2.8	2.3	2.5	1.1	2.9	6.3	2.6	1.7	1.4	0.2
7	3.6	8.6	2.9	2.3	2.3	1.3	3.1	6.4	2.6	1.9	1.6	0.5
8	3.6	8.2	3.0	2.5	2.5	1.1	2.9	5.7	2.7	2.2	1.4	0.4
9	3.5	8.2	3.1	2.2	2.4	1.1	2.7	5.1	2.9	2.0	1.4	0.6
10	3.6	9.0	3.2	2.2	2.2	1.1	2.9	5.6	2.8	1.9	1.4	0.7
11	3.6	8.9	3.1	2.2	2.0	1.3	3.2	7.1	2.6	2.0	1.2	0.7
12	3.8	9.8	3.0	2.3	2.2	1.6	3.3	7.3	2.5	1.8	1.2	0.6
2004. 1	4.0	10.4	3.0	2.2	2.4	1.6	3.4	7.2	2.6	1.9	1.5	0.9
2	4.0	9.8	2.9	2.6	2.9	1.6	3.9	8.4	3.0	2.2	1.5	0.9
3	3.7	9.1	2.8	2.6	2.6	1.2	3.9	8.4	2.6	2.8	1.8	0.6
4	3.5	8.2	3.1	2.2	2.7	1.4	3.4	7.0	2.7	2.2	1.8	0.6
5	3.6	9.1	2.8	2.0	2.6	1.6	3.1	6.4	2.4	2.1	1.5	0.7
6	3.5	9.3	2.9	1.8	2.3	1.2	2.9	6.3	2.2	1.9	1.5	0.6
7	3.8	9.2	3.3	2.2	2.6	1.4	3.0	6.0	2.5	2.0	1.5	0.6
8	3.7	8.7	3.4	2.4	2.8	1.5	3.0	6.0	2.7	2.3	1.2	0.8
9	3.4	8.2	3.0	2.4	2.3	1.2	2.8	5.2	2.9	1.8	1.6	0.7
10	3.6	8.8	3.3	2.2	2.4	1.3	2.7	5.7	2.5	1.9	1.3	0.3
11	3.8	9.2	3.2	2.3	2.5	1.6	2.7	5.5	2.3	1.8	1.5	0.3
12	4.0	10.5	3.4	2.3	2.7	1.3	3.1	6.6	2.7	1.8	1.6	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15〉 성별 교육수준별 실업률

(단위 : %)

	남 자				여 자			
	중졸이하	고 졸	(초)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 졸	(초)대졸	대졸이상
1998	8.1	8.9	8.7	5.0	3.9	7.3	8.2	4.8
1999	7.3	8.1	8.1	4.7	3.4	6.8	6.9	4.1
2000	4.7	5.1	6.6	3.2	2.1	4.2	5.1	2.9
2001	4.1	4.5	5.8	3.3	1.8	4.0	4.8	2.8
2002	2.9	3.8	4.9	2.9	1.4	3.1	4.4	2.7
2003	2.6	4.3	4.9	2.7	1.5	3.8	4.8	3.4
2004	3.1	4.5	4.2	2.6	1.6	3.9	4.8	3.3
2001. 3/4	3.2	4.1	5.3	3.0	1.6	3.5	4.7	2.7
4/4	3.3	4.0	5.3	3.0	1.5	3.8	4.1	2.2
2002. 1/4	3.6	4.4	4.9	3.3	1.8	4.1	5.1	3.4
2/4	2.8	3.6	4.6	3.0	1.3	2.9	4.7	2.6
3/4	2.7	3.5	4.6	2.6	1.3	2.7	3.9	2.5
4/4	2.6	3.5	5.5	2.9	1.3	2.7	3.9	2.5
2003. 1/4	2.6	4.5	5.3	2.9	1.5	3.9	5.9	3.9
2/4	2.4	4.0	5.2	2.8	1.2	3.7	5.0	3.6
3/4	2.8	4.1	4.6	2.7	1.6	3.7	4.3	2.8
4/4	2.7	4.6	4.7	2.5	1.7	4.0	4.2	3.1
2004. 1/4	3.3	4.7	4.6	2.8	1.9	4.5	5.6	4.2
2/4	2.8	4.2	4.3	2.6	1.6	3.5	5.5	3.4
3/4	3.3	4.3	4.2	2.6	1.5	3.8	4.3	2.8
4/4	3.2	5.0	3.9	2.3	1.5	3.7	3.7	2.8
2002. 9	2.4	3.2	4.9	2.6	1.2	2.4	3.5	2.5
10	2.5	3.4	5.4	2.8	0.9	2.6	4.0	2.8
11	2.4	3.4	5.2	3.0	1.2	2.6	4.1	2.2
12	2.8	3.7	5.9	2.8	1.7	2.8	3.8	2.6
2003. 1	2.5	4.6	5.2	2.4	1.7	4.3	4.8	3.2
2	2.8	4.7	5.3	3.0	1.2	4.1	6.1	4.1
3	2.6	4.3	5.3	3.3	1.5	3.5	6.7	4.3
4	2.5	3.9	5.5	3.0	1.3	3.7	5.2	3.5
5	2.3	4.0	5.4	2.7	1.2	3.5	5.2	3.8
6	2.6	4.1	4.8	2.7	1.2	3.8	4.5	3.5
7	2.8	4.3	4.5	2.6	1.6	4.1	4.2	3.0
8	3.0	4.0	4.7	2.8	1.6	3.5	4.9	2.9
9	2.6	4.1	4.6	2.8	1.7	3.4	3.9	2.6
10	2.5	4.4	5.0	2.7	1.5	3.7	3.8	3.1
11	2.5	4.5	4.5	2.5	1.7	3.9	4.7	3.5
12	3.1	4.8	4.7	2.2	1.9	4.3	4.2	2.7
2004. 1	3.4	5.0	4.7	2.4	1.9	4.6	3.7	2.7
2	3.5	4.7	4.4	2.9	1.8	4.3	6.7	5.1
3	2.8	4.3	4.6	3.0	1.9	4.5	6.3	4.6
4	2.6	4.2	4.6	2.7	1.8	3.6	6.2	4.1
5	2.7	4.2	4.8	2.7	1.6	3.4	5.9	3.1
6	3.1	4.1	3.6	2.6	1.6	3.6	4.4	2.9
7	3.7	4.5	3.7	2.6	1.5	3.9	4.6	2.5
8	3.4	4.3	4.9	2.7	1.7	3.6	4.7	3.2
9	3.0	4.2	3.9	2.5	1.4	3.7	3.5	2.6
10	3.0	4.5	4.1	2.4	1.4	3.6	3.8	2.6
11	3.3	4.8	4.0	2.2	1.5	3.3	3.5	2.6
12	3.2	5.5	3.5	2.3	1.5	4.1	3.6	3.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16〉 주요 노동이동지표

(단위: 천명, %)

	당월입직(입직률)	신규채용(신규채용률)	당월이직(이직률)	퇴직 및 해고 (퇴직 및 해고율)
1998	86.4 (1.78)	64.9 (1.34)	129.7 (2.68)	103.4 (2.13)
1999	155.7 (2.75)	129.9 (2.29)	142.3 (2.51)	105.0 (1.85)
2000	165.6 (2.89)	144.1 (2.52)	152.4 (2.66)	120.6 (2.10)
2001	138.1 (2.34)	123.0 (2.08)	150.4 (2.55)	122.3 (2.07)
2002	152.2 (2.52)	137.0 (2.27)	151.1 (2.50)	122.0 (2.02)
2003	153.5 (2.39)	139.9 (2.18)	158.7 (2.47)	142.8 (2.22)
2001. 1/4	157.6 (2.65)	134.6 (2.26)	165.8 (2.79)	127.1 (2.14)
2/4	137.7 (2.32)	122.5 (2.07)	148.7 (2.51)	120.9 (2.04)
3/4	133.7 (2.27)	121.3 (2.06)	147.6 (2.51)	122.6 (2.08)
4/4	123.4 (2.11)	113.5 (1.94)	139.5 (2.39)	118.5 (2.03)
2002. 1/4	161.3 (2.68)	142.5 (2.37)	158.4 (2.63)	130.7 (2.17)
2/4	156.1 (2.59)	140.3 (2.32)	158.3 (2.62)	123.9 (2.05)
3/4	149.5 (2.48)	134.2 (2.22)	146.8 (2.43)	116.5 (1.93)
4/4	142.1 (2.35)	131.2 (2.17)	140.8 (2.33)	116.9 (1.94)
2003. 1/4	187.2 (2.90)	167.5 (2.60)	186.3 (2.89)	165.0 (2.56)
2/4	154.8 (2.40)	139.7 (2.17)	165.2 (2.56)	146.9 (2.28)
3/4	137.6 (2.14)	126.6 (1.97)	144.0 (2.24)	130.8 (2.04)
4/4	134.6 (2.11)	125.8 (1.97)	139.4 (2.18)	128.4 (2.01)
2004. 1/4	171.6 (2.73)	152.0 (2.42)	172.0 (2.73)	150.6 (2.39)
2/4	132.5 (2.11)	118.4 (1.88)	147.0 (2.34)	130.7 (2.08)
3/4	124.1 (1.99)	109.0 (1.75)	135.3 (2.17)	117.7 (1.89)
2002. 6	142.0 (2.35)	130.5 (2.16)	149.0 (2.47)	114.2 (1.89)
7	160.4 (2.66)	145.3 (2.41)	148.0 (2.46)	115.0 (1.91)
8	145.7 (2.41)	128.5 (2.13)	153.3 (2.54)	121.5 (2.01)
9	142.5 (2.36)	128.6 (2.13)	139.0 (2.30)	113.0 (1.87)
10	151.2 (2.51)	139.0 (2.30)	153.0 (2.53)	126.6 (2.10)
11	150.3 (2.49)	140.0 (2.32)	138.1 (2.29)	116.6 (1.93)
12	124.8 (2.06)	114.7 (1.90)	131.3 (2.17)	107.6 (1.78)
2003. 1	180.7 (2.80)	160.4 (2.49)	177.2 (2.67)	146.6 (2.27)
2	168.4 (2.61)	148.2 (2.30)	179.7 (2.78)	158.9 (2.46)
3	212.4 (3.29)	193.9 (3.01)	207.1 (3.21)	189.5 (2.94)
4	175.6 (2.72)	154.1 (2.39)	170.5 (2.64)	148.0 (2.29)
5	143.6 (2.22)	129.8 (2.01)	169.6 (2.63)	148.0 (2.29)
6	145.1 (2.26)	135.3 (2.10)	155.7 (2.42)	144.5 (2.25)
7	144.9 (2.26)	132.8 (2.07)	146.1 (2.27)	131.8 (2.05)
8	134.9 (2.10)	124.1 (1.93)	146.8 (2.29)	133.4 (2.08)
9	132.9 (2.07)	122.9 (1.92)	139.0 (2.17)	127.3 (1.99)
10	147.2 (2.30)	137.4 (2.15)	154.8 (2.42)	143.0 (2.23)
11	128.9 (2.02)	120.6 (1.89)	139.9 (2.19)	128.1 (2.00)
12	127.7 (2.00)	119.4 (1.87)	123.5 (1.98)	114.2 (1.79)
2004. 1	158.1 (2.51)	140.1 (2.22)	166.1 (2.63)	148.8 (2.36)
2	165.8 (2.63)	145.8 (2.32)	171.5 (2.72)	144.7 (2.30)
3	190.8 (3.03)	170.3 (2.71)	178.5 (2.84)	158.4 (2.52)
4	143.5 (2.28)	128.9 (2.05)	155.8 (2.47)	136.3 (2.16)
5	127.6 (2.03)	116.6 (1.85)	145.2 (2.31)	127.7 (2.03)
6	126.2 (2.01)	109.8 (1.75)	140.2 (2.23)	128.1 (2.04)
7	131.3 (2.10)	115.6 (1.85)	142.6 (2.28)	123.5 (1.97)
8	123.7 (1.98)	106.9 (1.71)	140.6 (2.25)	122.5 (1.96)
9	117.3 (1.88)	104.6 (1.68)	122.7 (1.97)	107.2 (1.72)
10	120.2 (1.93)	106.7 (1.71)	133.3 (2.14)	113.2 (1.82)

주: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9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17〉 사업체 규모별 노동이동

(단위: 천명)

	1규모		2규모		3규모		4규모		5규모		6규모	
	입직자	이직자	입직자	이직자	입직자	이직자	입직자	이직자	입직자	이직자	입직자	이직자
1998	-	-	26.7	36.3	26.6	37.4	18.0	26.3	4.1	8.3	10.9	21.5
1999	26.2	23.3	41.0	38.2	40.0	34.4	25.0	23.1	5.5	5.3	17.9	18.0
2000	24.3	21.5	43.0	41.0	43.2	39.9	29.1	26.9	5.7	6.0	20.3	17.2
2001	24.9	24.0	39.4	41.0	34.8	39.3	21.6	25.3	3.9	5.6	13.5	15.2
2002	27.0	26.5	43.8	44.0	41.3	39.8	22.7	23.1	5.8	5.9	11.7	11.8
2003	25.2	21.9	44.9	44.9	38.0	41.3	22.8	24.8	7.7	7.8	15.0	14.0
2001. 1/4	28.4	25.7	45.9	43.2	38.0	42.0	23.7	27.0	4.3	8.3	17.3	19.6
2/4	25.4	23.9	40.5	42.8	34.4	39.1	20.0	24.8	3.6	4.9	13.8	13.2
3/4	23.7	23.8	36.1	41.3	35.4	38.3	22.2	26.1	4.3	5.2	12.0	13.1
4/4	22.1	22.7	35.2	36.7	31.6	37.9	20.5	23.5	3.4	3.8	10.7	14.9
2002. 1/4	28.8	27.1	43.3	42.8	43.8	42.2	25.2	24.5	6.1	6.9	14.2	14.8
2/4	27.3	28.3	47.8	48.9	40.0	39.7	22.8	24.2	5.6	6.0	12.6	11.2
3/4	26.4	25.7	42.3	42.8	42.3	39.5	22.3	22.5	5.7	5.4	10.6	10.8
4/4	25.6	25.0	41.8	41.4	39.1	37.8	20.6	21.2	5.7	5.1	9.3	10.3
2003. 1/4	31.4	31.1	51.9	52.7	45.2	48.2	28.7	27.1	9.8	9.2	20.2	18.1
2/4	27.4	27.8	46.0	45.3	38.2	45.5	22.7	26.2	7.2	8.0	13.3	12.5
3/4	20.5	24.5	40.1	40.2	34.5	35.9	20.6	23.8	7.3	6.9	14.6	12.7
4/4	21.4	20.2	41.6	41.6	34.2	35.6	19.1	22.1	6.7	7.3	11.6	12.6
2004. 1/4	28.9	30.3	51.1	53.1	39.4	39.9	24.5	24.7	7.5	7.1	20.1	16.9
2/4	24.4	27.5	37.4	41.7	32.9	35.9	18.9	21.9	5.9	6.5	13.0	13.6
3/4	21.3	23.9	35.2	38.9	28.2	31.9	18.5	21.7	6.1	6.1	14.8	12.9
2002. 7	29.0	28.0	45.7	42.5	43.5	38.7	23.9	21.6	6.0	5.2	12.3	12.1
8	26.1	23.8	40.6	47.9	43.0	43.2	21.4	23.3	5.4	5.3	9.2	9.9
9	24.0	25.2	40.5	38.2	40.5	36.6	21.6	22.7	5.6	5.8	10.4	10.5
10	27.0	28.9	44.6	44.9	42.9	39.0	20.8	24.0	5.9	5.5	10.1	10.7
11	28.9	22.8	42.4	39.5	42.0	39.0	21.6	20.9	5.5	5.0	9.8	10.8
12	20.9	23.5	38.3	39.7	32.4	35.2	19.5	18.6	5.5	4.9	8.1	9.4
2003. 1	29.0	29.7	52.7	49.4	38.7	43.3	30.6	25.9	10.2	8.1	19.5	15.7
2	28.4	31.1	47.5	48.8	41.0	45.8	25.2	27.6	8.6	9.1	17.6	17.3
3	36.7	32.5	55.6	59.7	55.9	55.4	30.2	27.7	10.6	10.4	23.5	21.4
4	31.7	30.2	50.5	46.9	43.4	45.2	26.0	26.7	7.7	8.4	16.5	13.1
5	25.7	26.6	40.8	46.0	35.7	49.2	22.7	27.3	7.1	7.6	11.7	13.0
6	24.7	26.7	46.7	43.1	35.7	42.1	19.4	24.6	6.8	7.9	11.8	11.3
7	21.4	22.2	44.1	42.9	34.7	36.1	20.9	24.0	7.8	7.1	16.0	13.8
8	19.1	26.4	39.1	39.9	35.0	35.8	20.2	24.8	6.8	6.9	14.7	13.0
9	20.9	24.8	37.0	37.7	33.9	35.9	20.7	22.5	7.2	6.7	13.1	11.3
10	24.2	25.1	46.8	43.7	35.8	39.8	20.7	25.4	6.5	8.3	13.1	12.7
11	19.0	18.2	39.6	44.3	34.5	36.7	18.8	21.0	6.1	7.4	10.9	12.3
12	21.0	17.4	38.4	36.8	32.4	30.4	17.8	19.9	7.5	6.2	10.7	12.7
2004. 1	28.3	30.9	46.5	52.3	36.3	38.8	22.0	22.5	7.1	6.7	17.9	14.9
2	28.7	26.5	52.6	57.4	37.0	37.3	24.3	26.0	6.5	7.2	16.7	17.1
3	29.7	33.6	54.3	49.6	44.8	43.6	27.3	25.5	9.0	7.3	25.7	18.9
4	25.6	29.2	40.9	41.1	36.5	39.1	20.7	25.1	6.1	6.6	13.7	14.7
5	24.6	25.9	35.7	44.3	30.3	34.8	18.5	20.4	5.8	7.0	12.8	12.8
6	22.9	27.4	35.6	39.7	32.1	33.8	17.3	20.2	5.7	5.9	12.5	13.3
7	25.0	25.9	35.2	42.6	29.8	30.7	19.7	22.2	6.4	6.6	15.2	14.6
8	19.6	22.9	36.9	40.5	27.3	35.5	18.2	23.6	6.3	5.8	15.4	12.4
9	19.3	22.9	33.5	33.6	27.3	29.5	17.7	19.2	5.6	5.8	14.0	11.8
10	19.9	20.5	35.2	35.1	29.9	30.7	16.5	17.9	5.5	7.2	13.2	22.0

주: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9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규모: 5~9인, 2규모: 10~29인, 3규모: 30~99인, 4규모: 100~299인, 5규모: 300~499인, 6규모: 500~999인을 의미.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18〉 주요 업종 노동이동

(단위: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음식점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1998	1.79	2.90	2.55	3.33	1.87	3.36	1.35	3.15	1.71	2.04	1.38	2.18	2.32	3.07
1999	2.75	2.47	3.38	2.87	3.22	3.06	3.62	3.28	2.33	2.02	2.20	2.06	3.19	3.20
2000	2.88	2.59	3.44	3.36	3.29	3.18	3.16	3.18	2.64	2.13	2.02	2.05	3.81	3.43
2001	2.14	2.45	2.91	3.28	2.82	2.86	2.94	3.15	2.14	2.49	1.76	2.04	3.44	3.27
2002	2.56	2.54	2.93	2.87	2.65	2.70	3.46	3.41	2.26	2.25	1.89	1.84	3.33	3.29
2003	2.38	2.52	2.76	2.68	2.48	2.72	3.11	3.20	1.97	2.31	1.75	1.73	3.36	2.83
2001. 1/4	2.28	2.52	3.08	3.98	3.28	2.93	3.33	3.63	2.10	2.68	2.47	2.65	4.08	3.50
2/4	2.20	2.50	2.96	3.47	2.81	2.86	3.07	3.04	2.08	2.38	1.49	1.85	3.23	3.32
3/4	2.07	2.35	2.82	3.10	2.68	2.88	2.33	3.04	2.19	2.50	1.82	1.98	3.33	3.21
4/4	2.00	2.45	2.75	2.55	2.52	2.79	3.04	2.90	2.17	2.38	1.25	1.66	3.14	3.05
2002. 1/4	2.39	2.59	3.33	3.29	2.65	2.62	3.37	3.03	2.53	2.21	2.12	2.02	3.62	3.24
2/4	2.56	2.66	3.22	3.18	2.62	2.85	3.67	3.19	2.36	2.28	2.05	1.91	3.46	3.27
3/4	2.57	2.42	2.53	2.66	2.70	2.59	3.40	3.77	2.24	2.31	2.11	1.85	3.21	3.42
4/4	2.53	2.43	2.73	2.48	2.66	2.49	3.12	3.47	2.09	2.13	1.37	1.69	3.18	3.20
2003. 1/4	2.76	2.92	3.35	3.18	3.01	2.95	3.19	2.92	2.28	2.25	2.33	2.47	3.67	3.84
2/4	2.42	2.66	2.70	2.73	2.57	2.98	2.83	3.26	1.99	2.50	1.84	1.81	3.53	3.31
3/4	2.15	2.22	2.45	2.39	2.00	2.58	3.15	3.62	1.81	2.07	1.45	1.50	3.58	3.24
4/4	2.18	2.28	2.56	2.43	2.34	2.36	3.27	2.99	1.78	2.42	1.39	1.14	3.15	3.11
2004. 1/4	2.55	2.49	3.21	3.23	2.87	3.07	2.72	3.62	1.92	2.09	2.37	2.55	3.17	3.40
2/4	2.13	2.38	2.54	2.87	2.24	2.39	2.86	3.69	1.81	2.16	1.68	1.51	1.86	2.37
3/4	2.03	2.07	2.60	2.39	2.01	2.16	2.69	3.40	1.64	1.91	1.54	1.91	1.76	2.31
2002. 8	2.47	2.54	2.41	2.78	2.69	2.50	3.06	3.76	2.14	2.13	2.51	2.52	3.25	3.35
9	2.41	2.29	2.19	2.05	2.49	2.53	3.81	3.73	2.31	2.22	1.56	1.13	3.22	3.70
10	2.67	2.61	2.85	2.64	2.74	3.01	3.99	4.07	2.08	1.98	1.36	2.05	3.29	3.38
11	2.70	2.43	2.59	2.23	2.87	2.28	2.91	2.32	2.24	2.47	1.62	1.48	3.51	3.20
12	2.23	2.24	2.74	2.59	2.36	2.19	2.46	4.01	1.95	1.94	1.14	1.55	2.75	3.02
2003. 1	2.63	2.71	3.58	2.89	3.34	2.98	2.15	2.79	2.21	2.07	2.51	2.56	4.15	3.77
2	2.50	2.83	3.32	3.21	3.01	2.64	3.12	2.87	2.06	2.36	2.35	2.30	3.61	3.54
3	3.16	3.23	3.15	3.43	2.69	3.23	4.30	3.09	2.56	2.31	2.14	2.55	3.27	4.20
4	2.69	2.66	3.18	3.40	3.12	3.46	3.23	3.44	2.42	2.25	2.64	2.02	3.32	3.27
5	2.22	2.70	3.01	2.89	2.03	2.95	2.73	3.43	1.74	3.03	1.69	2.12	3.36	3.33
6	2.34	2.64	1.92	1.91	2.55	2.54	2.53	2.90	1.82	2.22	1.20	1.30	3.90	3.32
7	2.25	2.19	2.91	3.03	2.28	2.63	2.69	3.40	1.86	2.28	1.59	1.59	3.78	3.33
8	2.15	2.30	2.24	1.95	1.80	2.79	2.81	3.37	1.75	1.91	1.58	1.73	3.85	3.34
9	2.05	2.15	2.19	2.18	1.93	2.30	3.95	4.10	1.80	2.02	1.17	1.17	3.10	3.05
10	2.36	2.49	2.23	2.36	2.94	2.73	2.93	2.75	1.90	2.85	1.85	1.36	3.12	3.04
11	2.20	2.36	2.42	2.36	1.98	2.43	2.52	2.81	1.76	2.37	1.27	1.20	3.67	3.53
12	1.98	2.00	3.02	2.56	2.09	1.91	4.35	3.41	1.67	2.02	1.06	0.88	2.65	2.75
2004. 1	2.29	2.36	3.40	3.80	2.93	3.27	2.48	3.12	1.90	2.19	2.04	2.07	2.85	2.80
2	2.53	2.60	3.13	3.07	3.58	2.50	1.60	4.37	1.92	2.08	2.72	2.96	3.03	5.18
3	2.84	2.50	3.08	2.83	2.12	3.43	4.13	3.37	1.93	2.00	2.34	2.61	3.65	2.19
4	2.30	2.38	2.42	2.92	2.29	2.65	2.92	3.35	2.13	2.68	2.10	2.01	1.67	2.28
5	1.95	2.42	2.41	2.76	2.37	2.05	3.02	4.52	1.76	1.98	1.51	1.27	2.15	3.04
6	2.13	2.32	2.78	2.93	2.07	2.47	2.63	3.20	1.55	1.83	1.42	1.25	1.77	1.79
7	2.12	2.15	2.75	2.81	1.77	2.25	3.25	2.62	1.83	2.10	1.73	2.32	1.92	2.19
8	2.02	2.14	2.65	2.56	2.23	2.10	2.21	3.69	1.49	1.84	1.99	2.42	1.61	2.62
9	1.95	1.93	2.42	2.18	2.04	2.12	2.60	3.88	1.60	1.79	0.90	1.00	1.75	2.14
10	2.06	2.42	1.80	1.96	2.28	2.35	2.83	3.03	1.31	1.78	1.06	1.08	2.11	2.03

주: 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9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1999~2001년 6차 산업분류, 2002년 8차 산업분류. 도소매는 1999~2001년에는 도소매 및 자동차용품수리업, 2002년 이후에는 도매 및 소매업을 의미. 부동산임대는 1999~2001년에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2002년 이후에는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의미.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19> 임금총액의 내역별 추이(전산업)

(단위: 천원/월, %)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1999		1,544 (-)	1,102 (-)	117 (-)	325 (-)
2000		1,668 (8.0)	1,182 (7.2)	133 (14.1)	352 (8.5)
2001		1,752 (5.1)	1,257 (6.3)	131 (-1.6)	365 (3.4)
2002		1,948 (11.2)	1,408 (2.1)	126 (-3.9)	413 (13.4)
2003		2,127 (9.2)	1,532 (8.8)	135 (7.3)	460 (11.4)
2002.	9	2,141 (10.3)	1,421 (11.8)	127 (-4.1)	593 (10.4)
	10	1,884 (12.8)	1,428 (12.7)	134 (-3.3)	322 (22.1)
	11	1,778 (11.9)	1,425 (12.2)	130 (-2.9)	223 (20.3)
	12	2,563 (15.7)	1,505 (13.3)	135 (2.3)	923 (22.4)
2003.	1	2,384 (35.3)	1,502 (9.0)	128 (10.9)	754 (181.1)
	2	1,962 (-2.7)	1,467 (9.0)	124 (11.3)	371 (-33.8)
	3	1,962 (8.7)	1,514 (9.1)	131 (6.3)	317 (7.8)
	4	2,012 (8.1)	1,503 (8.6)	131 (4.1)	379 (7.5)
	5	1,866 (9.0)	1,519 (8.5)	138 (8.0)	209 (13.5)
	6	2,168 (8.1)	1,520 (8.4)	137 (7.7)	511 (7.3)
	7	2,072 (6.9)	1,531 (8.3)	128 (0.2)	414 (3.8)
	8	2,144 (12.8)	1,536 (8.9)	134 (4.8)	475 (30.5)
	9	2,282 (6.6)	1,543 (8.6)	139 (9.3)	600 (1.1)
	10	2,034 (7.9)	1,545 (8.2)	148 (10.1)	341 (5.9)
	11	1,939 (9.0)	1,553 (9.0)	143 (9.7)	243 (8.6)
	12	2,710 (5.7)	1,652 (9.7)	143 (5.8)	915 (-0.9)
2004.	1	2,388 (0.2)	1,619 (7.8)	131 (2.0)	639 (-15.3)
	2	2,088 (6.4)	1,571 (7.1)	134 (7.7)	383 (3.3)
	3	2,078 (5.9)	1,605 (6.1)	131 (-0.2)	341 (7.8)
	4	2,109 (4.8)	1,598 (6.3)	136 (4.2)	375 (-1.0)
	5	1,989 (6.6)	1,616 (6.4)	142 (3.1)	232 (10.7)
	6	2,247 (3.6)	1,624 (6.9)	137 (0.1)	486 (-4.9)
	7	2,256 (8.9)	1,639 (7.0)	133 (4.0)	484 (17.1)
	8	2,220 (3.5)	1,638 (6.6)	136 (1.8)	447 (-5.9)
	9	2,495 (9.3)	1,652 (7.0)	141 (1.6)	702 (17.1)
	10	2,145 (5.5)	1,653 (7.0)	148 (0.0)	344 (0.9)

주: 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20> 임금총액의 내역별 추이(제조업)

(단위: 천원/월, %)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1999		1,443 (-)	963 (-)	179 (-)	301 (-)
2000		1,568 (8.6)	1,024 (6.4)	205 (14.6)	338 (12.4)
2001		1,659 (5.8)	1,095 (6.9)	204 (-0.6)	361 (6.7)
2002		1,857 (11.9)	1,266 (15.6)	197 (-3.4)	395 (9.4)
2003		2,018 (8.7)	1,372 (8.4)	205 (4.2)	441 (11.7)
2002.	9	2,026 (10.8)	1,284 (14.9)	195 (-6.4)	547 (8.7)
	10	1,837 (15.4)	1,303 (17.4)	210 (-3.9)	324 (22.7)
	11	1,607 (11.1)	1,282 (15.2)	202 (-3.9)	123 (-0.5)
	12	2,637 (22.8)	1,377 (19.5)	205 (2.1)	1,055 (32.8)
2003.	1	2,315 (41.4)	1,348 (10.1)	198 (10.8)	769 (227.3)
	2	1,831 (-5.6)	1,294 (8.9)	187 (9.8)	351 (-39.7)
	3	1,808 (9.2)	1,369 (10.1)	201 (0.6)	237 (12.5)
	4	1,882 (8.0)	1,341 (8.5)	201 (0.6)	340 (10.7)
	5	1,713 (6.9)	1,354 (7.7)	213 (4.9)	146 (2.3)
	6	2,033 (7.2)	1,356 (7.9)	205 (3.3)	472 (6.8)
	7	1,966 (4.9)	1,364 (7.6)	190 (-4.7)	412 (1.1)
	8	2,059 (12.9)	1,376 (8.5)	202 (0.0)	482 (35.2)
	9	2,146 (5.9)	1,385 (7.9)	208 (6.6)	553 (1.1)
	10	1,963 (6.9)	1,395 (7.0)	228 (8.7)	341 (5.0)
	11	1,781 (10.8)	1,391 (8.5)	216 (6.9)	174 (41.8)
	12	2,722 (3.2)	1,495 (8.5)	213 (4.0)	1,015 (-3.8)
2004.	1	2,307 (-0.3)	1,466 (8.8)	199 (0.1)	642 (-16.5)
	2	2,041 (11.5)	1,410 (9.0)	205 (9.7)	426 (21.5)
	3	1,975 (9.2)	1,469 (7.3)	210 (4.4)	296 (24.6)
	4	2,035 (8.1)	1,449 (8.0)	221 (10.0)	366 (7.4)
	5	1,863 (8.8)	1,464 (8.2)	230 (8.1)	169 (15.7)
	6	2,175 (7.0)	1,470 (8.4)	218 (6.4)	487 (3.2)
	7	2,239 (13.9)	1,474 (8.1)	211 (10.8)	554 (34.4)
	8	2,131 (3.5)	1,483 (7.8)	218 (8.2)	430 (-10.8)
	9	2,441 (13.8)	1,507 (8.8)	227 (9.3)	707 (27.9)
	10	2,088 (6.4)	(1,510) (8.3)	238 (4.5)	340 (-0.1)

주: 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21〉 산업별 임금총액 추이

(단위 : 천원/월)

	전 산업		제 조 업		건설업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1998	1,427	276	1,284	234	1,502	166	-	-
1999	1,544	325	1,443	301	1,576	245	-	-
2000	1,668	352	1,568	338	1,701	274	-	-
2001	1,752	365	1,659	361	1,687	221	-	-
2002	1,948	413	1,857	395	1,859	251	1,714	305
2003	2,127	460	2,018	441	2,072	278	1,861	349
2002. 9	2,141	593	2,026	547	2,133	496	1,912	499
10	1,884	322	1,837	324	1,760	112	1,618	199
11	1,778	223	1,607	123	1,768	125	1,540	129
12	2,563	923	2,637	1,055	2,282	585	2,249	730
2003. 1	2,384	754	2,315	769	2,312	591	2,014	563
2	1,962	371	1,831	351	1,947	264	1,700	238
3	1,962	317	1,808	237	1,918	166	1,746	264
4	2,012	379	1,882	340	1,925	174	1,735	257
5	1,866	209	1,713	146	1,826	78	1,640	142
6	2,168	511	2,033	472	2,061	266	1,887	371
7	2,072	414	1,966	412	2,048	258	1,772	265
8	2,144	475	2,059	482	2,067	254	1,923	409
9	2,282	600	2,146	553	2,313	461	2,017	490
10	2,034	341	1,963	341	1,976	127	1,773	246
11	1,939	243	1,781	174	1,979	100	1,677	144
12	2,710	915	2,722	1,015	2,501	593	2,453	797
2004. 1	2,388	639	2,307	642	2,368	453	1,986	419
2	2,088	383	2,041	426	2,102	218	1,752	229
3	2,078	341	1,975	296	1,971	177	1,883	326
4	2,109	375	2,035	366	2,030	225	1,772	211
5	1,989	232	1,863	169	1,924	76	1,718	135
6	2,247	486	2,175	487	2,102	256	1,938	349
7	2,256	484	2,239	554	2,160	308	1,970	379
8	2,220	447	2,131	430	2,019	167	1,825	221
9	2,495	702	2,441	707	2,428	575	2,230	625
10	2,145	344	2,088	340	1,980	115	1,828	219

주 :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22〉 사업체 규모별 임금추이(비농 전산업)

(단위 : 천원/월)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1999		1,192 (59.0)	1,376 (68.1)	1,439 (71.3)	1,561 (77.3)	1,794 (88.8)	2,019 (100.0)
2000		1,274 (58.0)	1,497 (68.2)	1,567 (71.4)	1,713 (78.0)	1,973 (89.9)	2,195 (100.0)
2001		1,344 (58.1)	1,606 (69.4)	1,680 (72.6)	1,785 (77.2)	2,135 (92.3)	2,313 (100.0)
2002		1,466 (53.9)	1,705 (62.7)	1,856 (68.3)	2,067 (76.0)	2,357 (86.7)	2,718 (100.0)
2003		1,543 (50.7)	1,808 (59.4)	2,005 (65.9)	2,230 (73.3)	2,474 (81.3)	3,043 (100.0)
2002.	9	1,645 (56.8)	1,905 (65.7)	2,073 (71.6)	2,257 (77.9)	2,507 (86.5)	2,897 (100.0)
	10	1,411 (51.9)	1,615 (59.4)	1,739 (64.0)	2,034 (74.9)	2,355 (86.7)	2,718 (100.0)
	11	1,389 (63.0)	1,604 (72.7)	1,739 (78.8)	1,949 (88.3)	2,200 (99.7)	2,206 (100.0)
	12	1,709 (40.0)	2,082 (48.7)	2,297 (53.8)	2,715 (63.5)	3,175 (74.3)	4,274 (100.0)
2003.	1	1,648 (43.5)	1,939 (51.2)	2,252 (59.5)	2,363 (62.4)	2,671 (70.5)	3,786 (100.0)
	2	1,424 (49.2)	1,677 (58.0)	1,761 (60.9)	2,061 (71.3)	2,351 (81.3)	2,892 (100.0)
	3	1,455 (54.1)	1,748 (65.0)	1,884 (70.1)	2,027 (75.4)	2,161 (80.4)	2,689 (100.0)
	4	1,450 (51.8)	1,695 (60.5)	1,880 (67.1)	2,204 (78.7)	2,448 (87.4)	2,802 (100.0)
	5	1,441 (60.9)	1,687 (71.3)	1,827 (77.2)	1,966 (83.1)	2,111 (89.2)	2,366 (100.0)
	6	1,547 (49.6)	1,800 (57.7)	2,037 (65.3)	2,322 (74.5)	2,589 (83.0)	3,119 (100.0)
	7	1,581 (56.5)	1,798 (64.3)	2,002 (71.6)	2,168 (77.5)	2,362 (84.5)	2,797 (100.0)
	8	1,543 (50.0)	1,820 (59.1)	2,010 (65.2)	2,253 (73.1)	2,515 (81.6)	3,082 (100.0)
	9	1,672 (51.3)	1,953 (60.0)	2,173 (66.7)	2,337 (71.8)	2,621 (80.5)	3,257 (100.0)
	10	1,495 (51.5)	1,694 (58.3)	1,901 (65.5)	2,162 (74.4)	2,418 (83.2)	2,905 (100.0)
	11	1,482 (59.6)	1,712 (68.8)	1,864 (74.9)	2,112 (84.9)	2,233 (89.7)	2,488 (100.0)
	12	1,781 (41.1)	2,180 (50.3)	2,468 (56.9)	2,797 (64.5)	3,221 (74.3)	4,338 (100.0)
2004.	1	1,767 (51.4)	2,068 (60.1)	2,327 (67.6)	2,484 (72.2)	2,816 (81.9)	3,440 (100.0)
	2	1,525 (48.1)	1,798 (56.8)	1,907 (60.2)	2,197 (69.3)	2,576 (81.3)	3,168 (100.0)
	3	1,559 (53.4)	1,845 (63.2)	2,008 (68.7)	2,186 (74.8)	2,343 (80.2)	2,921 (100.0)
	4	1,560 (51.8)	1,785 (59.3)	1,993 (66.2)	2,314 (76.8)	2,635 (87.5)	3,012 (100.0)
	5	1,548 (60.6)	1,838 (72.0)	1,925 (75.4)	2,132 (83.5)	2,287 (89.6)	2,553 (100.0)
	6	1,628 (50.1)	1,926 (59.3)	2,133 (65.7)	2,434 (75.0)	2,707 (83.4)	3,247 (100.0)
	7	1,699 (51.4)	1,941 (58.7)	2,144 (64.9)	2,329 (70.5)	2,694 (81.5)	3,304 (100.0)
	8	1,584 (49.2)	2,016 (62.6)	2,040 (63.3)	2,331 (72.4)	2,680 (83.2)	3,221 (100.0)
	9	1,809 (50.1)	2,161 (59.9)	2,404 (66.6)	2,635 (73.0)	2,892 (80.1)	3,610 (100.0)
	10	1,555 (49.6)	1,836 (58.6)	2,018 (64.4)	2,296 (73.2)	2,629 (83.9)	3,135 (100.0)

주 : 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안은 500인 이상 대비 임금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23〉 성별·내역별 임금 추이

(단위 : 천원/월)

	남 자		여 자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남성=100)	정액급여	(남성=100)
1998	1,579	1,157	1,006	(63.7)	755	(65.2)
1999	1,735	1,226	1,090	(62.8)	808	(65.9)
2000	1,885	1,320	1,178	(62.5)	870	(65.9)
2001	1,976	1,400	1,257	(63.6)	940	(67.2)
2002	2,193	1,574	1,393	(63.5)	1,035	(65.8)
2003	2,406	1,715	1,501	(62.4)	1,119	(65.3)
2002. 9	2,404	1,589	1,551	(64.5)	1,044	(65.7)
10	2,129	1,598	1,337	(62.8)	1,047	(65.5)
11	1,997	1,592	1,289	(64.6)	1,050	(66.0)
12	2,931	1,691	1,739	(59.3)	1,087	(64.3)
2003. 1	2,684	1,683	1,711	(63.7)	1,095	(65.1)
2	2,226	1,642	1,369	(61.5)	1,073	(65.4)
3	2,220	1,697	1,381	(62.2)	1,101	(64.9)
4	2,278	1,683	1,418	(62.3)	1,099	(65.3)
5	2,100	1,701	1,342	(63.9)	1,111	(65.3)
6	2,450	1,701	1,534	(62.6)	1,114	(65.5)
7	2,334	1,713	1,485	(63.6)	1,123	(65.6)
8	2,433	1,718	1,495	(61.4)	1,126	(65.6)
9	2,576	1,726	1,619	(62.8)	1,133	(65.7)
10	2,298	1,728	1,441	(62.7)	1,133	(65.5)
11	2,188	1,737	1,379	(63.0)	1,139	(65.6)
12	3,094	1,857	1,843	(59.6)	1,189	(64.0)
2004. 1	2,704	1,817	1,686	(62.3)	1,179	(64.9)
2	2,371	1,757	1,458	(61.5)	1,157	(65.8)
3	2,353	1,800	1,464	(62.2)	1,173	(65.2)
4	2,389	1,788	1,487	(62.2)	1,174	(65.7)
5	2,234	1,807	1,444	(64.6)	1,189	(65.8)
6	2,542	1,818	1,587	(62.4)	1,193	(65.6)
7	2,555	1,832	1,589	(62.2)	1,208	(65.9)
8	2,529	1,832	1,532	(60.6)	1,204	(65.7)
9	2,827	1,848	1,753	(62.0)	1,213	(65.6)
10	2,418	1,846	1,534	(63.4)	1,222	(66.2)

주 :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24〉 월평균 근로시간의 내역별 추이(전산업, 노동부 조사)

(단위 : 시간/월)

	전 체	정 상	초 과
1999	206.6 (-)	184.0 (-)	22.6 (-)
2000	204.8 (-0.9)	181.4 (-1.4)	23.4 (-3.5)
2001	202.4 (-1.2)	182.1 (0.4)	20.4 (-12.8)
2002	199.6 (-1.4)	181.6 (-0.3)	18.0 (-11.8)
2003	198.2 (-0.7)	180.6 (-0.6)	17.6 (-2.2)
2002. 9	189.4 (-7.0)	171.7 (-6.6)	17.6 (-11.1)
10	207.7 (5.4)	188.7 (6.6)	18.9 (-6.0)
11	207.0 (-1.5)	188.7 (-0.8)	18.2 (-8.1)
12	200.4 (-1.0)	181.9 (-0.7)	18.5 (-4.1)
2003. 1	200.0 (-3.1)	182.4 (-3.4)	17.6 (1.7)
2	187.2 (8.5)	170.8 (7.1)	16.4 (2.5)
3	200.8 (-0.4)	182.9 (-0.2)	17.9 (-3.2)
4	202.7 (-0.2)	185.3 (0.3)	17.5 (-5.4)
5	197.9 (-5.8)	179.6 (-6.3)	18.3 (0.0)
6	196.1 (1.4)	178.4 (1.8)	17.7 (-2.2)
7	202.1 (-0.6)	185.4 (0.2)	16.8 (-8.7)
8	193.8 (-3.1)	176.7 (-2.8)	17.1 (-6.0)
9	186.0 (-1.8)	168.7 (-1.7)	17.3 (-1.7)
10	206.7 (-0.5)	187.6 (-0.6)	19.0 (0.5)
11	199.3 (-3.7)	181.3 (-3.9)	18.0 (-1.1)
12	205.8 (2.7)	188.1 (3.4)	17.6 (-4.9)
2004. 1	182.5 (-8.8)	166.4 (-8.8)	16.1 (-8.5)
2	191.7 (2.4)	175.2 (2.6)	16.5 (0.6)
3	204.8 (2.0)	188.1 (2.8)	16.7 (-6.7)
4	198.6 (-2.0)	181.7 (-1.9)	16.9 (-3.4)
5	191.9 (-3.0)	174.3 (-3.0)	17.6 (-3.8)
6	204.4 (4.2)	187.7 (5.2)	16.7 (-5.6)
7	202.0 (0.0)	185.9 (0.3)	16.1 (-4.2)
8	197.3 (1.8)	180.9 (2.4)	16.3 (-4.7)
9	184.3 (-0.9)	167.8 (-0.5)	16.5 (-4.6)
10	199.9 (-3.3)	182.4 (-2.8)	17.5 (-7.9)

주: 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25〉 월평균 근로시간의 내역별 추이(제조업, 노동부 조사)

(단위 : 시간/월)

	전 체	정 상	초 과
1999	216.0 (-)	182.7 (-)	33.3 (-)
2000	213.1 (-1.3)	179.8 (-1.6)	33.3 (0.0)
2001	208.7 (-2.1)	178.9 (-0.5)	29.8 (-10.5)
2002	206.4 (-1.1)	177.7 (-0.7)	28.7 (-3.7)
2003	205.9 (-0.2)	177.9 (0.1)	28.0 (-2.4)
2002. 9	195.3 (-7.1)	167.4 (-7.2)	27.8 (-7.0)
10	214.8 (6.0)	184.5 (7.0)	30.3 (0.7)
11	215.7 (-0.5)	186.5 (0.0)	29.1 (-3.6)
12	208.7 (0.7)	179.5 (0.4)	29.1 (2.5)
2003. 1	207.3 (-2.0)	179.3 (-3.1)	28.0 (6.1)
2	194.0 (9.4)	168.0 (10.1)	26.0 (5.3)
3	209.5 (0.4)	180.6 (1.2)	28.8 (-4.3)
4	211.8 (0.0)	183.8 (1.2)	28.1 (-6.3)
5	206.5 (-5.1)	177.2 (-5.7)	29.3 (-1.0)
6	204.9 (1.6)	177.1 (2.5)	27.7 (-3.8)
7	207.0 (-1.3)	180.8 (0.2)	26.2 (-10.6)
8	197.8 (-3.0)	170.8 (-2.3)	27.0 (-6.9)
9	193.5 (-0.9)	166.2 (-0.7)	27.3 (-1.8)
10	215.7 (0.4)	184.9 (0.2)	30.8 (1.7)
11	208.9 (-3.2)	180.0 (-3.5)	28.9 (-0.7)
12	214.0 (2.6)	186.3 (3.8)	27.7 (-4.8)
2004. 1	189.4 (-8.6)	163.6 (-8.8)	25.9 (-7.5)
2	199.5 (2.8)	172.9 (2.9)	26.6 (2.3)
3	213.4 (1.9)	185.2 (2.5)	28.3 (-1.7)
4	207.5 (-2.0)	178.8 (-2.7)	28.8 (2.5)
5	201.9 (-2.2)	172.0 (-2.9)	29.9 (2.0)
6	212.1 (3.5)	184.3 (4.1)	27.8 (0.4)
7	209.5 (1.2)	182.7 (1.1)	26.8 (2.3)
8	200.2 (1.2)	173.0 (1.3)	27.2 (0.7)
9	193.1 (-0.2)	165.4 (-0.5)	27.6 (1.1)
10	208.4 (-3.4)	178.8 (-3.3)	29.7 (-3.6)

주: 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26〉 산업별 취업자 주평균 근로시간 추이(통계청 조사)

(단위 : 시간/주)

		전산업	제 조 업	건설업	서비스업
1999		50.4 (-)	50.6 (-)	47.5 (-)	52.2 (-)
2000		50.6 (0.4)	51.0 (0.8)	48.3 (1.7)	52.0 (-0.4)
2001		50.4 (-0.4)	50.6 (-0.8)	48.7 (0.8)	51.7 (-0.6)
2002		49.8 (-1.2)	50.0 (-1.2)	48.2 (-1.0)	51.2 (-1.0)
2003		49.1 (-1.4)	49.6 (-0.8)	47.2 (-2.1)	50.3 (-1.8)
2004		48.7 (-0.8)	49.6 (0.0)	45.7 (-3.2)	49.8 (-1.0)
2002.	10	50.9 (-1.1)	50.9 (-0.8)	49.7 (-1.3)	51.8 (-1.0)
	11	50.1 (-1.2)	50.7 (-0.9)	49.4 (-1.8)	51.6 (-1.0)
	12	49.5 (-1.0)	50.1 (-1.1)	48.2 (-1.6)	51.6 (-0.7)
2003.	1	48.8 (-0.4)	50.7 (0.4)	47.1 (2.0)	50.5 (-0.6)
	2	49.1 (-1.3)	50.6 (-0.1)	47.1 (0.8)	50.9 (-1.6)
	3	49.6 (-1.9)	50.8 (-0.9)	47.7 (-3.0)	51.3 (-1.9)
	4	50.1 (-1.7)	50.6 (-1.3)	48.0 (-4.2)	51.4 (-1.8)
	5	50.8 (-0.8)	50.6 (-1.1)	49.5 (0.4)	51.4 (-1.7)
	6	50.6 (0.8)	50.2 (2.7)	48.8 (-0.9)	51.4 (0.6)
	7	47.4 (-2.2)	46.6 (-2.2)	43.9 (-5.5)	48.8 (-1.8)
	8	45.2 (-2.6)	44.8 (-3.8)	43.9 (-0.5)	45.8 (-3.7)
	9	49.3 (-2.2)	49.4 (-2.1)	47.0 (-5.1)	50.3 (-2.4)
	10	50.1 (-1.6)	50.2 (-1.4)	49.1 (-1.2)	50.8 (-1.9)
	11	49.4 (-1.4)	50.0 (-1.4)	47.5 (-3.8)	50.8 (-1.6)
	12	49.0 (-1.0)	50.1 (0.0)	46.8 (-2.9)	50.7 (-1.7)
2004.	1	48.2 (-1.2)	50.2 (-1.0)	45.5 (-3.4)	49.8 (-1.4)
	2	48.5 (-1.2)	49.9 (-1.4)	45.5 (-3.4)	50.0 (-1.8)
	3	49.4 (-0.4)	50.2 (-1.2)	46.4 (-2.7)	50.9 (-0.8)
	4	47.8 (-4.6)	47.5 (-6.1)	45.9 (-4.4)	48.8 (-5.1)
	5	49.6 (-2.4)	49.9 (-1.4)	46.4 (-6.3)	50.4 (-1.9)
	6	49.6 (-2.0)	49.9 (-0.6)	46.2 (-5.3)	50.4 (-1.9)
	7	47.3 (-0.2)	47.6 (2.1)	42.1 (-4.1)	48.8 (0.0)
	8	47.7 (5.5)	49.3 (10.0)	44.2 (0.7)	48.5 (5.9)
	9	49.1 (-0.4)	50.7 (2.6)	45.6 (-3.0)	49.9 (-0.8)
	10	49.6 (-1.0)	50.4 (0.4)	47.2 (-3.9)	50.1 (-1.4)
	11	48.9 (-1.0)	49.9 (-0.2)	46.8 (-1.5)	50.0 (-1.6)
	12	48.5 (-1.0)	49.7 (-0.4)	45.8 (-2.1)	50.0 (-1.4)

주 : 1)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에 대한 평균임.

2)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 서비스업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포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7〉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수 추이

						노 동 조 합 원 수
	노동 조합수	총연 합단체	산별연맹 (노 조)	지 부	분 회	
				(단위 노조)		
1963	2,150	1	16	313	1,820	224,420
1964	2,463	1	16	341	2,105	271,579
1965	2,634	1	16	362	2,255	301,523
1966	2,735	1	16	359	2,359	336,974
1967	3,022	1	16	386	2,619	377,576
1968	3,134	1	16	385	2,732	412,906
1969	3,373	1	16	417	2,939	444,783
1970	3,500	1	17	419	3,063	473,259
1971	3,525	1	17	446	3,061	497,221
1972	3,409	1	17	430	2,961	515,292
1973	3,286	1	17	403	2,865	548,054
1974	3,802	1	17	432	3,352	655,785
1975	4,091	1	17	488	3,585	750,235
1976	4,389	1	17	517	3,854	845,630
1977	4,598	1	17	538	4,042	954,727
1978	4,875	1	17	552	4,305	1,054,608
1979	4,965	1	17	553	4,394	1,088,061
1980	2,635	1	16	2,618		948,134
1981	2,158	1	16	2,141		966,738
1982	2,208	1	16	2,191		984,136
1983	2,255	1	16	2,238		1,009,881
1984	2,382	1	16	2,365		1,010,522
1985	2,551	1	16	2,534		1,004,398
1986	2,675	1	16	2,658		1,035,890
1987. 6. 30	2,742	1	16	2,725		1,050,201
1987. 12. 31	4,103	1	16	4,086		1,267,457
1988	6,164	1	21	6,142		1,707,456
1989	7,883	1	21	7,861		1,932,415
1990	7,698	1	21	7,676		1,886,884
1991	7,656	1	21	7,634		1,803,408
1992	7,527	1	21	7,505		1,734,598
1993	7,147	1	26	7,120		1,667,373
1994	7,025	1	26	6,998		1,659,011
1995	6,606	1	26	6,579		1,614,800
1996	6,424	1	26	6,397		1,598,558
1997	5,733	1	40	5,692		1,484,194
1998	5,560	1	42	5,517		1,401,940
1999	5,637	2	43	5,592		1,480,666
2000	5,698	2	44	5,652		1,526,995
2001	6,150	2	43	6,103		1,568,723
2002	6,506	2	41	6,463		1,538,499
2003	6,257	2	43	6,112		1,549,949

주: 1) 노동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동조합수는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단위노동조합, 지부, 분회 및 연합단체를 모두 합한 수치임. 따라서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법외노동단체는 통계에서 제외되었음.

2) 1980년 12월 31일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종전의 지부 및 분회가 기업별 단위노조로 통폐합되었음.

자료: 노동부.

〈표 28〉 산별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수 현황(2003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소, 명)

연맹별		조합수	조합원수		
			전체	남자	여자
총계		6,257	1,549,949	1,223,330	326,619
한국노동총연맹	소계	3,951	831,660	664,981	166,679
	한국노동조합총연맹(직할노조)	63	3,891	2,935	956
	전국섬유유동노동조합연맹	175	34,457	15,938	18,519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23	5,576	5,283	293
	전국전력노동조합	3	14,421	12,640	1,781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43	20,016	14,587	5,429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	58	14,521	12,330	2,191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59	29,539	28,242	1,297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64	27,833	27,670	163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1	84,083	58,285	25,798
	전국담배인삼노동조합	4	6,469	5,556	913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664	87,585	68,185	19,400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653	113,538	88,919	24,619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638	77,599	60,642	16,957
	전국출판노동조합연맹	60	3,448	2,504	944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556	80,797	79,425	1,372
	전국관광노동조합연맹	155	16,680	10,181	6,499
	전국채신노동조합	3	22,535	16,984	5,551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503	95,958	94,939	1,019
	전국고무산업노동조합연맹	16	8,159	6,965	1,194
	전국철도산업노동조합연맹	4	2,170	1,494	676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	39	16,657	11,226	5,431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40	1,054	975	79
	전국공공건설노동조합연맹	18	7,087	5,691	1,396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	22	16,016	14,502	1,514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11	4,527	1,257	3,270
	전국에너지노동조합연맹	23	2,568	1,720	848
	한국교원노동조합	1	25,060	9,960	15,100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52	9,416	5,946	3,470
민주노동총연맹	소계	1,332	673,880	523,419	150,46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직할노조)	131	11,122	7,017	4,105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214	69,393	46,808	22,585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56	19,491	18,261	1,230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16	42,522	12,616	29,906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217	136,868	119,243	17,625
	전국민주화혁신유노동조합연맹	188	30,883	27,222	3,661
	전국화물운송노동조합연맹	13	4,150	3,813	337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연맹	30	1,291	1,146	145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72	26,493	26,359	134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172	175,730	167,605	8,12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	95,000	45,600	49,400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20	2,894	253	2,641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106	33,469	32,063	1,406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86	12,243	6,194	6,049
	전국대학노동조합	8	9,848	6,736	3,112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1	1,633	1,633	0
	한국비정규노동조합	1	850	850	0
	상급단체 미가입	974	44,409	34,930	9,479

주 : 1) 조합수에는 지부·분회가 포함되어 있으며, 직할노조는 산업별 연맹에는 가입하지 아니하고 노총·민노총 지역본부에만 직접 가입한 노조임.

2) 비가맹노조란 산별연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단위노조를 지칭함.

자료 : 노동부.

〈표 29〉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단위 : %)

	조 직 률(A)			조 직 률(B)			조직률(C)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1970	20.0	20.1	19.7	12.6	13.1	11.5	-
1971	19.7	20.0	18.7	12.7	12.9	11.9	-
1972	20.4	20.5	20.1	12.9	12.9	12.9	-
1973	20.4	20.4	20.5	13.2	13.0	13.6	-
1974	22.1	21.4	23.9	14.8	14.2	16.2	-
1975	23.0	21.4	27.4	15.8	14.5	19.3	-
1976	23.3	21.7	27.1	16.5	15.2	19.5	-
1977	24.3	22.7	28.5	16.7	15.6	19.5	-
1978	24.0	22.8	26.8	16.9	15.9	21.2	-
1979	23.6	22.8	25.4	16.8	16.2	18.1	-
1980	20.1	18.5	23.6	14.7	13.6	17.0	-
1981	19.6	18.5	21.8	14.6	13.9	16.3	-
1982	19.1	18.6	20.1	14.4	13.8	15.7	-
1983	18.1	17.8	18.5	14.1	14.2	13.9	-
1984	16.8	16.6	17.2	13.2	13.5	12.8	-
1985	15.7	15.9	15.2	12.4	13.1	11.1	16.9
1986	15.5	16.2	14.2	12.3	13.2	10.5	16.8
1987. 6. 30	14.7	15.6	12.9	11.7	13.0	9.5	15.7
1987. 12. 31	17.3	18.5	15.0	13.8	15.3	11.1	18.5
1988	22.0	23.9	18.1	17.8	20.1	13.7	19.5
1989	23.3	25.8	18.5	18.6	21.8	13.4	19.8
1990	21.5	24.4	16.3	17.2	20.5	12.0	18.4
1991	19.1	21.9	13.8	15.4	18.5	10.4	17.2
1992	17.8	21.1	11.8	14.6	17.9	9.1	16.4
1993	16.9	20.2	11.0	14.0	17.2	8.7	15.6
1994	16.1	19.6	9.9	13.3	16.6	7.9	14.5
1995	15.1	18.5	9.2	12.5	15.7	7.3	13.8
1996	14.5	18.2	8.3	12.1	15.5	6.6	13.3
1997	13.3	17.3	6.9	11.1	14.7	5.5	12.2
1998	13.7	17.6	6.8	11.4	15.2	5.3	12.6
1999	14.7	18.4	8.3	11.7	15.4	6.1	11.9
2000	14.3	18.3	7.6	11.4	15.3	5.7	12.0
2001	14.2	18.5	7.1	11.5	15.7	5.4	12.0
2002	13.5	17.9	6.7	10.8	14.9	5.1	11.0
2003	13.0	17.1	6.8	10.8	14.5	5.5	11.0

주 : 조직률 A=조합원수÷비농가상시고×100

조직률 B=조합원수÷임금근로자×100

조직률 C=1987년 이전은 조합원수÷(상시고-공무원-사립학교 교원)×100

1988년 이후는 조합원수÷(임금근로자-공무원-사립학교 교원)×100

1999년 이후는 조합원수÷(임금근로자-공무원(철도, 체신 등 기능직 공무원과 국공립교원은 제외)×100

조직률 C는 노동부 집계방식.

1991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의 시계열 조정에 따라 수치를 보정함.

자료 : 노동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30〉 주요 노사분규 지표

	발생건수(건수)	분규참가자수(명)	노동손실일수(일)
1991	234	175,089	3,271,334
1992	235	105,034	1,527,612
1993	144	108,577	1,308,326
1994	121	104,339	1,484,368
1995	88	49,717	392,581
1996	85	79,495	892,987
1997	78	43,991	444,720
1998	129	146,065	1,452,096
1999	198	92,026	1,366,281
2000	250	177,969	1,893,563
2001	235	88,548	1,083,079
2002	322	93,859	1,580,404
2003	320	137,241	1,298,663
2004	462	184,969	1,197,201
2002. 1	12	1,272	31,160
2	21	16,615	80,394
3	30	17,531	212,450
4	40	18,021	240,565
5	172	46,148	395,669
6	207	65,334	764,817
7	234	80,245	1,110,896
8	250	82,841	1,262,183
9	264	86,089	1,380,973
10	279	89,837	1,462,300
11	292	91,664	1,537,918
12	322	93,859	1,580,404
2003. 1	11	1,324	18,445
2	17	2,382	28,041
3	25	5,214	67,195
4	56	9,211	91,460
5	81	13,954	116,564
6	118	58,478	245,832
7	256	123,144	806,964
8	276	124,205	1,084,443
9	290	126,992	1,148,515
10	302	131,363	1,215,811
11	308	131,775	1,270,270
12	320	137,241	1,298,663
2004. 1	7	20,023	32,902
2	10	20,083	54,455
3	18	21,082	69,038
4	27	28,708	88,288
5	75	35,475	138,423
6	320	128,952	406,057
7	402	151,703	876,228
8	413	168,602	1,010,149
9	433	180,940	1,065,694
10	444	182,252	1,114,833
11	453	183,263	1,160,000
12	462	184,969	1,197,201

주: 모든 수치는 당해 연도의 누적치이며, 분규참가자수는 분규발생업체의 발생당시 분규참가 인원수임.
자료: 노동부.

〈표 31〉 주요 임금교섭 동향

(단위 : 개소, %)

		대상업체수	타결업체수	진도율	협약임금 인상률	
					임금총액 기준	통상임금 기준
					임금총액 기준(2002년부터)	
1997		5,754	5,281	91.8	4.3	4.2
1998		5,476	5,156	94.2	-2.7	0.0
1999		5,097	4,744	93.1	2.1	2.1
2000		5,116	4,798	93.8	7.6	7.2
2001		5,218	4,857	93.1	6.0	6.0
2002		5,401	4,991	92.4	6.7	-
2003		5,751	5,292	92.0	6.4	-
2004		5,909	5,514	93.3	5.2	-
2002.	1	5,401	74	1.4	7.4	-
	2	5,401	154	2.9	7.0	-
	3	5,401	420	7.8	5.5	-
	4	5,401	630	11.7	6.1	-
	5	5,401	1,435	26.6	6.6	-
	6	5,401	2,103	38.9	6.7	-
	7	5,401	2,887	53.5	6.9	-
	8	5,401	3,517	65.1	6.9	-
	9	5,401	4,161	77.0	6.9	-
	10	5,401	4,377	81.0	6.9	-
	11	5,401	4,655	86.2	6.8	-
	12	5,401	4,991	92.4	6.7	-
2003.	1	5,751	107	1.9	5.0	-
	2	5,751	214	3.7	5.9	-
	3	5,751	413	7.2	6.0	-
	4	5,751	718	12.5	6.5	-
	5	5,751	1,306	22.7	6.7	-
	6	5,751	1,856	32.3	6.7	-
	7	5,751	2,491	43.3	6.7	-
	8	5,751	3,372	58.6	6.6	-
	9	5,751	4,503	78.3	6.5	-
	10	5,751	4,700	81.7	6.5	-
	11	5,751	4,958	86.2	6.5	-
	12	5,751	5,292	92.0	6.4	-
2004.	1	5,909	12	0.2	4.4	-
	2	5,909	153	2.6	4.8	-
	3	5,909	450	7.6	5.1	-
	4	5,909	711	12.0	5.3	-
	5	5,909	1,118	18.9	5.2	-
	6	5,909	1,770	30.0	5.4	-
	7	5,909	2,380	40.3	5.5	-
	8	5,909	2,901	49.1	5.5	-
	9	5,909	3,482	58.9	5.5	-
	10	5,909	4,061	68.7	5.5	-
	11	5,909	4,587	77.6	5.5	-
	12	5,909	5,514	93.3	5.2	-

자료 : 노동부.